

2012년도 제16차 정기(제17차) 총회

2012년도
제16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17차 총회)

일시 : 2012년 2월 2일(목) 오후 6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12년도
제16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17차 총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2
■ 제15차 정기(제16차)총회 회의록	5
■ 2011 사업감사 보고, 회계감사 보고	9
■ 2011 사업보고 및 평가	11
I. 총괄평가	13
II. 사업보고 및 평가	17
1. 조직사업	17
2. 평화·통일 사업	25
3. 갈등해결센터 사업	35
4. 정보·홍보사업	52
5. 회원사업	54
6. 재정사업	56
7. 연대사업	57
■ 조직개편안	71
■ 2012 사업계획안	73
I. 2012년 사업방향(안)	75
II. 2012년 사업계획(안)	79
1. 조직 사업	79
2. 평화·통일 사업	81
3. 갈등해결센터 사업	81
4. 정보·홍보 사업	83
5. 회원 사업	83
6. 재정 사업	83
7. 창립15주년기념 사업	84
8. 연대 및 협력 사업	84
■ 부록	
2011년 결산보고	87
2012년 예산제안	88
임원 인선안	90
평화여성회 정관	92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99
2011 성명서 목록	100
2011 성명서	103
회원가입서	221

정기총회 순서

I 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나누기 (오후 6:00 - 오후 6:30)

II부 본회의 (오후 6:30 ~ 오후 8:20)

1. 개회선언
2. 대표인사
3. 묵담나누기
4. 서기일명
5. 성수보고
6. 회순제책
7. 전차회의록 낭독
8. 2011년 감사보고
9. 2011년 사업보고와 승인
10. 2011년 결산보고와 승인
11. 조직개편안 승인
11. 임원(이사, 감사)선출
12. 2012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3. 2012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4. 기타토의
15. 모범 회원상 수여
16. 회의록 발음
17. 폐회

III부 신규 임원 이·취임식 (오후 8:20 - 오후 8:40)

전 회의록 낭독



제15차 정기(제16차)총회 회의록

□ 서기: 김선헌, 이덕경

1. 일시: 2011년 1월 21일(금) 19:00 - 21:20

2.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3. 주요내용

- 1) 개회선언: 조영희 의장이 오후 7시 개회 선언을 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 2) 이현숙 전임대표가 인사말을 하다. 김숙임 전임대표와 이낙호 회원이 인사를 하다.
- 3)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격려인사를 하다
- 4) 서기임명: 조영희 의장이 김선헌, 이덕경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 5) 상수보고: 김선헌 회원이 재직회원 69명중 위임 23명, 참석 28명, 총 51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조영희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 6) 회순채택: 조영희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자 박수선 회원이 신규 임원 이·취임식을 2부 본회의 11번 공동대표 및 임원선출에 이어서 할 것을 제안하여 김영진 회원이 동의하고 이현숙 회원이 재청하여 회순을 수정 채택하다.
- 7) 전차회의록 승인: 2010년 회의 때 회의록을 낭독한 것으로 회의록 승인을 대체하다.
- 8) 감사보고: 진선미 사업감사가 자료를 토대로 2010년 사업 감사결과를 보고하다. 한국염 회계감사가 자료를 토대로 2010년 회계 감사결과를 보고하다.

9) 안건논의:

안건1. 2010년 사업보고와 승인에 관한 건: 총회 자료집 13쪽에서 79쪽을 토대로 정경관 정책위원장과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이 요약 보고하다. 홍승희 회원이 동의하고 정경심 회원이 재청한 후 모두 동의하여 승인하다.

안건2.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한국염 감사가 97쪽 결산보고는 목 항목까지 구분해서 쓴 별지자료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그를 기초로 김선향

총무가 2010년도 결산보고를 하다, 안향숙 회원이 안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김영진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가 동의하여 승인하다.

(박수선 소장이 공동대표 및 임원선출의 건을 다루는 임시의장을 맡다)

안건3. 공동대표 및 임원선출: 윤수경 인선위원회 위원장이 인선위원회 활동과 총회자료집 100쪽과 같이 임원 인선안을 보고하다. 총회 자료집 100쪽에 신임이사로 추천된 정경심은 정현택의 오자이므로 바로 잡기로 하다.

신임이사로 정현택, 조영희, 윤수경, 이낙호 이사와 김정수, 여혜숙 공동대표 안에 대해 정경심 회원이 동의하고 안향숙 재청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임시의장 박수선이 정현택 전임 이사장과 윤수경, 조영희 전임 공동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규임원 이취임식을 하다. 여혜숙 신임대표가 의장을 맡다.)

안건4. 2011년 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건: 정경란 정책위원장과 박수선 감독 해결센터 소장이 총회자료집 83쪽부터 94쪽을 토대로 2011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한반도평화센터와 일상평화센터는 해소하고 사업별로 활동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다. 여성평화연구원은 원장선출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함을 보고하다. 정경심 회원이 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김영진 회원이 재청하고 모두가 동의하여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다.

안건5. 2011년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김선영 총무가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을 보고하다.

박수선 회원이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김선영 총무가 실무자 1명을 총원할 계획으로 안을 만들었음을 답하다.

정경심 회원이 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윤수경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다.

10) 모범회원상: 안향숙, 이덕경 회원에게 모범회원상을 수여하다.

11) 회의록 발음: 김선혜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김숙임 회원이 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전은주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박수로 받기로 하다.

12) 폐회: 여혜숙 의장이 오후 9시 19분 폐회를 선언하다.

2011년 감사보고



2011년 사업 감사 보고서

1. 2011년 한해 역시 남북대화 단절, 금강산 관광 중단, 대북 식량 지원 중단 등의 대북강경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퇴행된 남북관계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회전체적으로는 양극화현상의 극대화등 사회전반의 문제와 갈등국면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아니하고 고조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폭력사태로 치닫는 사회적 피로감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적 어려움은 사업의 평가 및 보고자료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 온 사무처와 공동해결센터, 정책위원회에 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 2011년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정부의 국방·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여성평화주의의 대안의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실천을 모색하고, 소통과 상생적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회원의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을 지향하고, 조직체계를 현실 여량에 맞게 재편하여 운영하는 등의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인적·물적 토대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여성회가 여러단체들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과 소통>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정부의 5.24 조치의 철폐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밀가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였으며,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기간동안 국제회의를 조직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채택 필요성을 논의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연대를 확대하고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준비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핵무기 및 핵에너지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사업계획에 비하여 그 활동상이 사실상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현실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평화여성회는 조직체계를 현실 여량에 맞게 재편하기도 하여 한반도평화센터와 일상평화센터를 해소하고 공동해결센터와 사무국관을 운영하는 한편 수년간 논의를 거쳐 공동해결센터를 부설기구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다각적인 시도가 현실적 어려움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이후 워 센터들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갈등해결센터는 2011년 한해 소통과 상생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갈등해결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또래조정교육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선정하는 우수한 시민교육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자치평가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평화적 갈등해결방안을 논의하거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6. 2011. 12. 23.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이후 새로이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은 지도체제의 등장이라는 엄청난 변화 국면에 직면하게 된 한편, 내적으로는 총선과 대선을 한꺼번에 치루어야 하는 정치적 대변혁 국면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게 될 2012년 차기년도인지라, 평화여성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평화친화적인 정치문화의 구축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는 바, 다양하고 활발한 역할 수행을 기대해봅니다.

2011년 2월 2일 (목)
감사 진 선 미 (서명)

4)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활동

(1)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주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워크숍

일시: 2011년 2월 24일 오후 1시-3시
장소: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 2층 회의실
참석: 정헌택 평화여성회 이사, 정경란 정책위원장

* 프로그램

<p>CSW Workshop UNSCR 1325 and Pea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 of Parliamentarians, Policy Makers, and NGOs.</p>
<p>일시: 2011년 2월 24일 오후 1시-3시</p>
<p>주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의원, 정책결정자, NGO 파트너십"(UNSCR 1325 and Pea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 of Parliamentarians, Policy Makers and NGOs)</p>
<p>장소: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 2층 회의실</p>
<p>주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 조지워싱턴대 PISA, 피스보트 US</p>
<p>후원: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실, 국회</p>
<p>한국 코디네이터 단체: 평화여성회</p>
<p>12:30-1:00 점심과 등록</p>
<p>Moderator: Linda J. Yarr Director, Partnerships for International Strategies in Asia (PISA)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p>
<p>1:00-1:05 Opening Remarks Corra Weiss President of Hague Appeal for Peace and Director of Peaceboat US</p>

1:05-2:10 Presentations

Ms. Young-Hee Choi,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ROK
Congresswoman

H.E. Herman Schaper,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o the United Nations

Susan Braden, 미국 국무부 국제여성문제 선임정책자문관

Mavic Cabrera-Balleza,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Hyunback Chung, Co-Chair,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전체 토론

* 이애주 의원, 김금래 의원 이연숙 전의원, 김정숙 전의원, 정봉협 여성가족부 정책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70여명이 워크숍에 참석했다.

(2) CSW 기간 만남과 워크숍 참석 (정경란 정책위원장)

① CSW 기간 만남

- * 2/24 4:00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NGO위원회 관련 MCC Doug Hostetfer 만남
- * 2/25 신일본부인회 국제연대 담당 국장과 만남
- 각 단체 활동 공유
- 3.8 일본여성대회 연대사 요청-> 연대사 발송
- 1325호 관련 연대 가능성 타진

② 워크숍 참석

- * 2/23 2:00-3:30pm, Implementing UNSCR 1325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Strengthening the CSW 55 Agenda, Global Network for Women Peacebuilders,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 * 2/26 10:00am Women, Security and a Just Peace: Research and Action,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Church Center

2011년 평화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2011년 평화여성회 회계감사 보고

감 사 보 고 서

평화여성회(여성회) 이사

2011년 평화여성회(여성회) 회계감사를 한 결과 회계장부(복원문서), 수입, 지출권리서, 영수증에 잘 구비되었고, 통장과도 일치하므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합니다.

1. 장별 종이에 손주표를 남기지 않것.
2. 퇴직직원금 통장을 확보해 놓을 것.

2012년 1월 16일 (월)

감사 인 도 영



2011년 사업보고 및 평가

- I. 2011년 사업 총평
- II. 2011년 사업보고



2011년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보고 및 평가

I. 총괄평가

2011년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에 주력하자'를 슬로건으로 하여 첫째, 정부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여성평화주의의 대안적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실천을 모색하고, 둘째, 불통의 시대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소통과 상생적 갈등해결을 모색하고, 셋째, 회원의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을 지향하고, 넷째, 조직체계를 현실 역량에 맞게 재편하여 운영하는 것을 사업기조로 삼았다.

2011년은 정부의 5·24 조치의 강경한 실행, 한미군사훈련의 지속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완화되지 않고 남북갈등국면이 계속되었다. 평화여성회는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분부를 중심으로 남북여성교류의 필요를 느끼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북여성공동결의문>을 합의하였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평화여성회는 대북지원 단체들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과 소통>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5.24 조치 철폐를 위한 노력(토론회, 캠페인 등)에 힘을 보태고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밀가루 지원에 참여하였다. 또한 남북이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고 동북아평화와 공존으로 가기 위하여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평화활동, 4.12군사비동결을 위한 여성행동, 5.24 군속 여성 성명 발표, 6.15공동선언실천 촉구활동, 주한 미군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촉구, 10.4선언 실천 촉구활동,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평화행동 등 여성평화행동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연대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실행을 위한 촉구활동으로 국회 여성의원과 연계하여 대정부 결의관련 활동을 진행하였고, 2월 뉴욕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기간 동안 국제회의를 조직해 유엔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의 채택 필요성을 논의하고 최영희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 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데 기여하였다.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단체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내에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2년 3월에 개최되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주제를 “해 없는 세계와 동북아여성의 삶”으로 정하고 준비워크숍,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여성평화운동의 이슈를 반색, 탈색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성평화주의 관점을 기초로 정부의 국방·통일·외교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대안적 정책마련을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정부의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보고서에 대한 NGO보고서에 ‘평화와 통일’ 분야를 작성하였다. 체계적으로 여성평화통일 정책의제를 개발하기 위한 평화여성회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2012년의 과제로 남는다.

2011년은 소통과 상생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갈등해결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조정·진행전문가 훈련을 진행하였고, 다른 한편 서울 YMCA와 함께 전국의 지역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기초·심화과정의 조정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능력을 기를 수 있는 관점과 문제해결의 방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갈등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본회 교육프로그램인 토레조정교육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선정하는 우수한 시민교육 사례로 선정되는 등 본회의 청소년 대상 평화교육이 점차 생활 속으로 접근하는 발전도 있었다.

지난 수년간 중단하였던 본회 소식지 발간 재계를 계기로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결혼, 평화글쓰기모임, 펄드모임 등의 소모임 조직을 시도하였고,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회원평화마당을 신설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평화운동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보다 다양한 소모임을 조직할 과제가 제기된다.

2011년은 조직운영을 본회의 현실 역량에 맞게 하기로 정하여, 한반도평화센터와 일상평화센터를 해소하고 갈등해결센터와 사무국만 운영하였다. 다른 한편 본회 활동의 영역별 전문성을 살리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수년간의 논의를 정리하여 갈등해결센터를 부설기구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사업방향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남북 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협력사업을 구성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참가해 '6·15공동선언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 등 남북 관계 개선과 5·24 조치 완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의 주요 단체로서 남북여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며, '남북여성공동결의문' 그리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성명서와 조건을 발표해 남북 관계 개선에 여성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또한 정부의 5·24조치 이후엔 남북교류 뿐 아니라 대북지원사업도 진행되지 못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하여 대북지원단체와 함께 <대화과 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내북보내기, 밀가루보내기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였다. 모금활동에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북한 사리원 지역의 어린이기관들에 밀가루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평화여성회의 남북여성협력사업의 준비 작업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 대북지원활동은 향후 여성평화운동 차원에서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진행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2. 통합적 갈등해결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화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하는 평화교육 사업은 또래조정자 훈련 등을 포함해 학교를 중심으로 평화교육과 실천이라는 통합적 활동 방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센터 구성원들이 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확산·적용되게 됨으로써 제도권 내 회복적 정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지역사회 활동가와 단체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조정자, 진행자 교육을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반면 사회적 문제에 평화여성회가 평화적 갈등해결방안을 논의하거나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갈등해결센터가 '갈등해결과 평화' 주제의 교육 양적 확대 및 새로운 활

동 영역의 개척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 각 사업 영역에 질적 도약의 시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 감동해결센터는 교육, 조정, 실천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의 접근에 더욱 힘쓰는 것을 과제로 설정했다.

3. 2012년, 본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국내 여성평화운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대안적 여성평화주의의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2012년 본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성과를 정리하기로 한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본회창립 15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여 본회 후원행사와 회원한마당이 결합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지난 15년의 여성평화운동을 성과와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2012년의 과제로 남는다.

II. 사업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1 회의

1-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 : 2011년 1월 21일(금) 18:00 ~ 21: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 51명 (회원 69명중 위임 23명, 참석 28명)

○ 내용 : 2010년도 사업보고 및 승인, 2010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 정관개정, 임원선출, 2011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2011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등

(2) 2012년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가. 역할 : 정기총회 준비, 설치-운영 기간 중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대행

나. 구성 : 김선람(총무), 김선혜(갈등해결센터 사회갈등분석팀장), 김영진(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장), 김정수(공동대표), 박수선(갈등해결센터 소장), 박유희(본회 이사), 박인혜(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여혜숙(위원장, 상임대표), 정경단(정책위원장), 조영희(본회 이사), 최안진경(본회 운영위원) 총 11명

다. 내용

- 1차 : 11/7(월) 16:00-18:30 운영위원회 위임안건(11월, 12월 사업계획 점검,

- 2011년 회원 송년회 건), 부설기구TF팀 보고, 준비위원회 서기와 운영규칙
정하기, 준비위원회 회차별 의제확인, 제규정 소위 구성 등
- 2차 : 12/5(월) 11:00-16:00 12월 사업계획 점검, 2011년 사업평가, 2012년
사업기조와 방향 브레인스토밍
- 3차 : 2012 1/9(월) 11:00-16:00 2011년 사업총평안 검토, 2012년 사업기조,
방향안 검토, 예·결산안 검토, 규정개정안 검토
- 4차 : 2012 1/27(금) 10:30-12:30 총회자료집 검토, 총회순서 점검

라. 제 규정 소위원회: 박유희, 조영희, 여혜숙, 박수선, 김선혜

- 1차: 12/15(목) 15:30-17:30 갈등해결센터 운영규정안, 평화여성회 운영규정검
토
- 2차: 12/26(월) 10:00-11:30 평화여성회 운영규정안, 갈등해결센터 운영규정
안, 인사규정 검토
- 3차: 2012 1/9(월) 16:30-17:00 갈등해결센터 운영규정안, 인사규정 검토

1-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
와 부설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
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와 이사, 이사 중에 호선한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 이사장 : 김성은
 - 이사 : 강순원, 김정수, 김진희, 김지영, 박유희, 여혜숙, 이라호, 권은주,
정경실, 정현백, 조영희, 한정숙

3) 사업내용

(1) 1차 정기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1/12(수) 19:00~22:00,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내용 : 2010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안) 검토, 2010년도 결산(안) 검토, 회원연
황검토, 2011년 사업계획(안), 결산(안) 검토, 임원선출(안) 검토

(2) 2차 정기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5/16(월) 19:30-21: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 회계항목 변경 건, 후원의 날 계획 검토

(3) 3차 임시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10/27(목), 12:00-14:00, 신촌 동강참치

○ 내용 : 추경예산안 심의, 2012년 총회일정 및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일정, 평화여성회 15주년 행사 아이디어 모으기, 꽃감 판매 건

1-1-3 운영위원회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서기, 회계, 사무차장, 부설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여혜숙(위원장, 상임대표), 김정수(공동대표), 최안진경, 박수신(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영진(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장), 정경란(정책위원장), 김선람(총무) 총7명

3) 사업내용

(1) 제1차 : 2/14(월) 13:00-15:00 1년 사업계획 점검, 후원행사관련,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일정화정

(2) 제2차 : 3/16(월) 11:00-14:00 3,4월 사업계획 검토, 후원행사 준비팀 구성건, 재정 어려움의 극복 방안 마련

(3) 제3차 : 4/11(월) 11:00-14:00 4,5월 사업계획 검토, 후원행사 건, 소식지 준비호 발행건, 평화여성회 공부모임

(4) 제4차 : 5/9(월) 11:00-14:00 5,6월 사업계획 검토, 이사회 보고및 안전 점검, 후원행사, 소식지 준비호

(5) 제5차 : 6/13(목) 13:30-15:30 6,7월 사업계획 검토, 후원행사, 소식지, 대화와 소통

(6) 제6차 : 7/11(월) 11:00-14:00 7,8월 사업계획 검토, 후원행사 평가, 소식지 준비호 평가, 갈등해결센터 부설기구 관련 논의 계획

(7) 제7차 : 8/10(수) 14:00-17:00 상반기평가, 하반기 계획 보고 및 논의

(8) 제8차 : 9/16(금) 14:00-16:00 9,10월 사업계획 검토

(9) 제9차 : 10/10(금) 14:00-16:00 10월,11월 사업계획 검토, 15주년 행사 논의,

총준위납작, 총희납작 논의, 굿감판대 건
(10) 11월, 12월은 총희준비위원회와 함께

1-1-4 주간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
○ 위원 : 김선량(총무), 김정수(공동대표), 여혜숙(상임대표), 정경란(정책위원장)
- 3) 내용 : 매주 월요일 오전 혹은 오후, 1/3, 1/17, 1/24, 1/31, 2/7, 2/23, 3/7, 3/14, 3/21, 3/28, 4/4, 4/18, 4/25, 5/2, 5/16, 5/23, 5/30, 6/3, 6/20, 7/4, 7/25, 8/8, 8/22, 8/30, 9/5, 9/16, 9/26, 10/17, 10/24, 11/14, 11/21, 11/28, 12/7, 12/12, 12/19, 12/26

1-1-5 평화여성회 부설기구 관련 논의 TF팀 구성(약칭 부설TF팀)

1) 부설기구 논의 배경

(1) 2011년 총회를 앞두고 3차 총준위에서 “조직의 방향은 현실 역량에 맞게 조직을 재편할 필요에 따라 갈등해결센터는 그 활동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설기구로의 전환을 2011년 동안 연구 모색하기로 함”

(2) 7월(6차)운영위원회에서 4호 안건으로 “갈등해결센터 부설기구 관련 논의 과정 계획”하며 부설기구 관련 논의를 위해 논의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하다. 운영위원 중 여혜숙, 김정수, 박수선과 조영희 이사와 갈등해결센터에서 2-3인을 추천 받아서 논의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하다.

2) 구성: 김선혜, 김정수, 박수선, 여혜숙, 이덕경, 조영희

3) 회의

① 1차 회의: 7/28(목) 13:30-15:30

· 부설TF팀 역할: 갈등해결센터 부설기구 설립 여부와 관련한 논의 자료를 마련하고 구체적 진행과정을 설계하여 평화여성회 운영위 및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활동시간: 2차 총준위가 일리기 전까지 대략 6~7회 회의

· 논의주제 명하기: 갈등해결센터의 부설기구어무에 관한 경과, 필요성 등 제안 배경, 평화여성회 조직적 틀에서 부설기구의 의미 및 관계 정립, 절차 및 대상과

방법 등을 포함한 논의의 과정 설계

② 2차 회의: 8/8(월) 16:00-18:00 평화여성회 부설기구 논의 전개과정, 갈등해결센터 논의 배경과 현실적 요구

③ 3차회의: 9/8(목) 10:50-12:00 타 단체의 부설기구 현황조사와 평화여성회 부설기구 검토 : 갈등해결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설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갈등해결센터를 부설기구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다. 평화여성회 정관 중 제6장 부설기구에 관한 부분은 수정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고, 부설기구 운영(재정과 의결)에 관한 별도규정은 차기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다.

④ 4차회의: 10/10(월) 17:00-18:00 운영규정검토 내용논의- 조직과 재정을 중심으로

- 부설기구 운영위에는 본회 사업 총괄 담당자 참여하기로 하다.
- 평화여성회 운영위원회에 센터 소장을 비롯 2인 이상 참여하기로 하다.
- 회계는 독립재산제로 운영한다.
- 회비 등 세부논의, 기준은 추후 정하기로 하다.

1-1-6 평가

- 1) 총회 : 임원선을 총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과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화기에대한 이의식을 통해 회원간의 결함력을 높이고, 2011년 사업을 계획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2) 운영위원회 : 정례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진행을 위한 논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 3) 주간회의 : 주단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진행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게 공유가 이루어졌고, 조직의 일정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분담하였다.

1-2법안·행정

1-2-1 감사

- 1) 역할 : 본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구성

(1) 사업감사 : 김선미 변호사

(2) 회계감사 : 한국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3) 내용

(1) 사업감사 : 2012년 1월 13일 ~ 18일; 대상 : 2011년 사업년도 사업 일제

(2) 회계감사 : 2012년 1월 16일(월) 대상 : 2011년 사업년도 재정 일제

4) 결과 : 감사보고서 참조

1-2-2 법인사무

1) 목표

(1) 본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2)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내용

(1) 법인등기

가. 등기업무 : 신임이사장 등기 및 사임이사 삭제 등기

나. 등기이사 : 김영은(장), 김정수, 김지영, 박유희, 여혜숙, 윤수경, 전은주, 정현백,

조영희

다. 변경서류 및 절차 : 등기소(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통일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관할세무소(사업자등록증) 변경

라. 위탁업체 : 다름 법무사 사무실 (담당 : 김기현 법무사)

(2)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관련

가. 재지정 신청관련 서류 제출 : 5/20(금) 통일부 정책협력과

나. 지정기부금 결정 : 6/30(목)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공지, 7/4(월) 통일부 지정기부금 지정 사실 통보

다.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2011. 1. 1 - 2015. 12. 31

라. 향후계획 : 2016년 중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하여 연장

(3) 사무행정

가. 인사업무 : 1월31일(목)부 오영주 정보활동가 퇴직

나. 4대 보험 : 오영주 해지

다. CMS 관리 : 2011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송(2012년 1월7일), 매월 후원회비 이체, CMS 관리 업체 변경 (VanPro, 2011년 1월1일부)

(4) 회계

가. 출납 및 기금관리, 결산보고 등

1-3 위원회

1-3-1 정책위원회

○ 구성 및 운영

(1) 위원장 : 정경란

(2) 위원 : 김현희, 박현선

세미나팀: 정경란, 여혜숙, 김정수, 조영희, 최안진경, 김금옥, 김은희

(3) 사업목표

- 여성-평화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논의
- 평화-통일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 모색
- UN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여성 연대 강화

1-3-2 국제협력위원회 (구성하지 않음)

1-3-3 갈등해결센터

○ 구성 및 운영

(1) 소장 : 박수선

(2) 운영위원회 : 김선영, 김선혜, 김영진, 김희경, 박상희, 박수선, 박인혜, 안향숙,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이현숙, 조영희

(3) 청소년교육팀 : 김영진(팀장), 남미영(서기), 권승현, 김영란, 김지현, 남수정, 문경아, 박경옥, 박남희, 박무연, 박재신, 박황우, 박홍나미, 성희경, 안향숙, 엄은혜, 이덕경, 이은경, 이현숙, 함영미

(4) 사회갈등분석팀 : 김선혜(팀장), 이현주(서기), 김지훈, 명세진, 박수선, 박원석, 박재근, 이경순, 이항진, 정진화

(5) 회복적사법 조정팀 : 김희경(팀장), 안향숙(서기), 김선혜, 김영진, 문경아, 박무연, 박상희, 박인혜, 박재신, 박홍나미, 박희진, 서정기, 이경순, 이덕경, 이

재영, 이항진, 여혜숙, 정태효

- (6) 또래조정팀: 이다경(팀장), 박상희(서기), 김선혜, 김영진, 박경옥, 박인래, 성희경, 안향숙, 엄은혜, 이현숙
- (7) 연구원 : 김학국, 이재영, 서정기, 박계근

○ 회의

- (1) 운영위원회 : 월 1회
- (2) 청소년교육팀 회의 : 매월 1회
- (3) 사회활동분석팀 회의 : 격월 1회
- (4) 회복적 사범 조정팀 : 월 1회
- (5) 또래조정팀 회의 : 월 1회
- (6) 연구원 : 수시

○ 조직운영의 기본 방향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평화적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팀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는 관심영역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과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의 각 팀장은 팀의 성원을 관리하고 운영과 사업을 총괄한다.
- 갈등해결센터는 정기적인(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전반을 논의, 결정한다.
-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각 팀장, 본부 사무책임자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고 각 팀별 1인을 포함하는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갈등해결센터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재교육 등을 수행한다.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1년 3회 이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4 부설기구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구성하지 않음

2. 평화-통일 사업

1) 내복보내기 사업

(1) 모금기간: 2011년 2월 21일 ~ 3월 5일(2주)

(2) 모 금 액: 총 2,110,000원

(3) 회원참여 현황

김선량10,000 김영진10,000 김지현10,000 남은언10,000 박인혜10,000
송연옥10,000 안병선10,000 안이삭10,000 양난희10,000 양윤희10,000
이권민희10,000 정경란10,000 김선혜20,000 박재신20,000 박수선20,000
임영희20,000 김풍자50,000 류왕효50,000 박인아50,000 한혜민50,000
성문밖교회70,000 김윤옥100,000 김정수100,000 박애경100,000
박유희100,000 여혜숙100,000 이낙호100,000 이은선100,000 윤수경100,000
전은주100,000 조영희100,000 최안진경100,000 한정숙100,000
정현백200,000 김성은300,000

(4) 내복보내기 참여단체

- 5대 종단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 원불교 은혜실기운동,
천도교 중앙총부
- 민간단체 : 굿네이버스,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대구),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권정생어린이재단
- 실무단체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5) 진행경과

- 2011/2/21(월) 조영희, 정경란 회원의 제안으로 사무국회의에서 진행키로 함.
우리민족서로돕기회 평화여성회 참여의사 전달 & 회원과 이사들에게 모금
제안 편지 보냄
- 2/21-3/5 모금활동 전개
- 3/2 우리민족서로돕기회에서 대북내복지원관련 지원단체 연석회의
통일부에 복측과의 사업합의서 보낸 것 - 긍정적 검토
1차 전달을 위한 5천만원(내복 1만벌) 모금 확보

- 키리졸리브/독수리훈련(2/28-3/10)으로 북측과의 소통 단절됨
- 3/9 회원들에게 모금상황 보고 메일 보냄
- 3/31 모금총액 2,110,000원

(6) 통일부의 불허방침으로 인해 보내지 못하고, 밀가루보내기 사업에 함께 포함하여 지원함.

2) 밀가루보내기 사업

(1) 모금액: 500만원

내북보내기 모금 (2,210,000원) + 회원참여 (2,070,000원) + 남북교류기금

* 회원참여 현황

박재산10,000 김영진10,000 박인혜10,000 최안진경20,000 김동민20,000
 양해경20,000 남미영30,000 이순철30,000 유복남40,000 박애경 100,000
 박인아40,000 박수선50,000 박희진50,000 이현숙50,000 김정량50,000
 이경숙50,000 홍승희60,000 강경심70,000 김경애80,000 안수경80,000
 여혜숙100,000 안병선100,000 김성은200,000 김정수300,000 이봉희500,000

(2) 대북지원 밀가루 전달식: 8월17일(수) 8:00, 임진각,

김성은-조영희·김정수 참석

(3) 사리원 모니터방 : 9월17일-20일, 김정수 (자세한 내용은 방북보고서 참조)

< 사리원 방북보고서 >

○ 개요

- 일 시 : 2011년 9월 17일(토) ~ 20일(화) : 3박4일
- 방문단 : 박창일(평화3000), 김정수(평화여성회), 강영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황윤옥(어린이어깨동무), 이관우(한국대학생신교회),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권문수(경남통일농업협의회), 이재봉(우리민족 광주), 엄주현(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운석, 박지용(민화협) 총 12명
- 북참사 : 강승일, 김신혁, 김영철(민화협 사무소)
정덕기(부위원장), 박영희(민화협여성부),

- 방문지 : 평양, 사리원
- 방문목적 : (1) 2011년 8월 17일 남측 민화협을 통해 개성육로로 전달한 밀가루에 대한 분배 모니터링 (참조: 8월 17일 밀가루 200톤 지원)
- (2) 각 단체 사업 협의

○ 일정(한국시간 기준)

- 9월 17일(토)
 - 06:30 인천공항 출국장 B부스에서 집결
 - 08:20 인천공항 출발
 - 10:00 심양공항 도착
 - 11:40 처항루 도착
 - 12:15 점심식사(백계원)
 - 14:30 심양공항 도착
 - 16:30 심양공항 출발
 - 17:05 순안공항 도착
 - 18:20 숙소도착(보통강려관)
 - 19:30 환영만찬(보통강려관, 정덕희 부회장, 박영희 민화협여성부장 참석)
 - 21:30 만찬종료
- 9월 18일(일)
 - 08:30 숙소출발
 - 09:00 평양 참관(1)
 - 10:00 강충성당(박창일, 강영식, 황윤옥, 이재상, 임주현, 권문수, 이재봉)
 봉수교회(이관우, 김정수, 김금옥, 이운식, 박지용) 방문
 - 12:00 점심식사(안산관 원형식당)
 - 14:15 평양참관(2) - 15:00 평양참관(3)
 - 16:00 숙소도착(보통강려관) 휴식
 - 19:00 저녁식사(보통강려관 지하식당)
- 9월 19일(월)
 - 09:15 사리원시로 출발
 - 10:35 사리원시 사리원 3.8려관 도착
 - 10:40 신양유치원 방문

- 11:25 영평소학교 방문
- 11:40 사리원 애육원 방문
- 12:10 사리원시 민속거리 참관
- 12:25 점심식사(사리원 3.8 리관, 임훈 사리원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
- 14:35 정방산 성봉사 참관
- 15:15 사리원시 출발
- 16:30 평양 고려동포회관 도착
- 17:00 단체별 사업협의(민화협 박영희 여성부장과 여성관련 사업 협의)
- 18:00 숙소도착
- 21:20 환송 만찬(고려동포회관)
- 23:40 숙소 도착

● 9월 20일(화)

- 07:50 숙소출발
- 09:00 순안공항 출발 - 10:10 북경공항 도착 - 12:50 북경공항 출발
- 14:40 김포공항 도착 - 15:10 해산

○주요 방문지 정보

<3대혁명 불은기 사리원신앙유치원>

- 리연옥 원장 안내

- 1990년 12월 1일, 4층 건물 4,500 평방미터 규모로 개원

교실, 낮잠실, 휴식실, 교양실 등이 꾸려져 있고, 난방이 보장됨

- 200여 명의 아이들(6-7세) 수용, 낮은 반과 높은 반으로 구성

1반에 20-25명으로 구성

선생님은 교양원 18명, 주방 등 기타 선생님이 13명 등 31명이 활동함

- 사리원시 인구 수는 30여만 명, 그 중 중학생까지 8만 2천 여명

사리원시에 유치원 87개가 있음

- 4시 30분부터 5시까지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으러 오지만, 늦게 오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찍 선생 2명이 돌봐주고 있음

- 남측에서 보낸 밀가루를 6차레에 걸쳐 481kg 받음

- 받은 밀가루로 직접 빵과 옥수수를 섞어 칼국(국수)를 만들어 오전과 중간 식량을 줌

<3중 영예의 붉은기 사리원영광소학교>

- 장경순 교장이 안내
- 1967년 4월 1일 개학
- 한 해 200-400 여명의 학생이 졸업하고 있으며 3중 영예의 붉은기를 받은 모범적 학교
- 지적체를 겸비한 학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학교의 수준을 영예의 붉은기->2중영예의 붉은기->3중영예의 붉은기로 나뉨. 영광소학교는 2003년에 3중 영예의 붉은기 명칭받음
- 1학년부터 4학년까지(8-11세) 1020명의 학생, 교직원 45명임
- 영광소학교는 사리원시 영광동, 정성동, 구천1호 등의 지역학생을 받고 있음
- 1-2학년은 4시간교육, 3-4학년은 5시간교육을 함
총학습 25개, 1반 45명, 12시 30분에 수업이 끝나고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2시까지 다시 옴

<3대혁명 붉은기 사리원 예육원>

- 윤옥순 원장이 안내
- 1997년 11월 개원
- 현재 250명 아이들을 수용
5-6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수용. 2년 교육. 낮은 반, 높은 반으로 구성
나이가 차면 항주에 있는 학원으로 보냄.
부모 없는 아이들이지만 중국공연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음
- 3월 말에 황해북도 육아원 고아어린이들을 받고, 학원으로 보냄
올해 100여명을 받았고, 100여명을 보냈음
인원 수는 육아원에서 대상 아이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짐
- 육아원과 예육원은 도에 1개 씩 있음
- 직원은 공부를 배워주는 선생 11명, 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는 열마선생님 11명으로 총 22명

● 박영희 북측 민화협 여성부장과와의 면담 보고

• 참석

- 남측: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수(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북측 :박영희(민화협 여성부장)

- 논의 : (1) 2011년 9월 17일(토) 저녁 보통강려관 환영만찬
(2) 2011년 9월 19일(월) 오후 고려동포회관 접견심
- 1)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제안
 - 제안서(남쪽에서 준비한 자료)와 2011년 회의 종합보고서 2부 전달
 - 박영희 부장 답변: 현재의 정세를 돌파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개성에서 개최하게 되면 남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지 혹시 여성국회의원도 참석 하는지 등 참석자 범위에 대해 관심 : 개성 개최가 가능하면 여성국회의원 등 정치인, 경제인, 학자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으로 답변
 - 개성 회의 후 다음 일정에 대해서도 질문 : 2011년 서울의 사례로 들어 미국 대사관, 국회의원 방문 등에 대해 소개
 - 주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음
 - 북쪽 민화협의 남성참사도 2012년 회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 피력
- 2) 남쪽 여성단체(평화여성회 & 여성단체연합) 등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 3.8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 (5.24조치 철폐 등)
 - 어려운 시기 지원과 평양방북에 대한 사의
 -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해 주기 바람
 - 현재의 시국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5.24 조치 철폐와 쌀 지원이 가능해 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역설
- 3) 기타
 - 평대협 아시아연대회의 참석이 남쪽 정부의 불허로 불가능하게 된 점, 특히 fax 전달도 불허한 점에 대한 유감표명을 여러 번 함
 - 현재 북측 리명의 적극적 활동상에 대한 소개(로동신문에도 소개됨)
 - 조중 친선 & 협력으로 북측 경제사정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느낌
- 밀가루지원과 사리원 모니터링 관련 기고
- 1) 개성밀가루지원관련:(여성신문, 8월 19일자)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게 4차분 밀가루 200톤 전달, 밀가루는 생명이다"
- 2) peacepeace 온라인뉴스레터 2011년 8월 22일
put-politics-aside-send-food-aid-to-north-koreans/
- 2) 평양방북 관련 (여성신문, 9월 23일자)

“2011년 평양의 오늘 - 북한 밀가루 지원 모니터링 방문기
서린된 정장 대신과 슬더랙...담담한 북한 여성들”

○ 모금과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평화여성회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대북 인도적 지원에 평화여성회 뿐 아니라 여성단체연합 산하 단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 정부의 5.24 조치를 돌파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평화여성회가 대북지원 단체들과 함께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고 평화여성회의 인지도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
- 향후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을 전개하기 위한 모금활동과 교육활동전개 등을 개발함으로써 남북여성협력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조건 발송

2011년 1월 22일 조선민주여성동맹앞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여성회 공동으로 조건 발송

4)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활동

(1) 논평 작성 및 국제연대(정경란)

- 6/24 논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작성 및 영문 배포
- 1325호 논평관련 국제연대 감사 담당: Mavic Cabrera-Balleza,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Cora Weiss; Karin Lee, NCNK

(2) 유엔안보리1325호의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주제: 평화와 안보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일시: 7/8(금) 14:00-18:00

주최: 신나균 의원실

발제: 유엔안보리 1325결의안의 의미와 실천방안 (정경란),

참석: 김성은, 이김현숙, 여혜숙, 김정수, 안병선, 김은희

(3) 1325호 관련 논의

-7/25(월) 1325호 여성네트워크에 대한 평어 논의

-7/27(수) 15:00 평어과 여연 모임, 여연과 평어가 9월에 국회활동관련해 공동대응모색, 평어 사무실, 여혜숙, 정경란

(4) 유엔1325호 소책자 발행 -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원고 작성중

-7/18(월) 1325호 소책자 평어 간행 논의 시작

-기획: 평화여성회, 저자: 정경란, 여성평화사 발행, 원고 600-800매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원고 작성 중

5) 4.12 군사비축소의 날 관련 활동

(1) 여성행동

- 일시: 4월 11일(월) 11:30-12:30

- 장소: 명동

- 참가단체: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기독교여민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전평화여성회

(2) 4-12관련 기획안, 진단 작성, 보도자료 검토, IPS와 IPB와 연락

(3) 기고 여성신문 4월22일자

(4) demilitarize.org에 행사 보고 보냄

<http://demilitarize.org/event-reports-east-asia-australia-new-zealand/>

6)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준비

(1) 4/19(화)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준비모임 제안서 발송

(2) 4/21(목) 14:00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사전 준비모임, 4.12 공동행동단체, 미대방

(3) 4/26(화) 14:00 5.24 준비 여성모임, 평화방 여혜숙, 정경란

(4) 5.24 여성평화선언 작성 및 발표 - 참가단체: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기독교여민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전평화여성회, 전국여성연대

7) CEDAW NGO 보고서 관련 활동

(1) 4/15, 5/12 CEDAW NGO 보고서 준비회의, 평화방 (정경란)

(2)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소속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CEDAW NGO 보고서에 '평화와 통일에서 여성참여' 작성 (정경란)

- 내용: 한국정부의 평화통일관련 정책,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 현황, 국방·통일·외교분야에서 여성 참여를 등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 제시

8) 평화, 외교 정책과 여성 세미나

구성: 여혜숙, 김정수, 정경란, 조영희, 최안진경, 김금옥, 김은희

- 1차: 5/17(화) 14:00, 평화방 단행본<천안함 외교의 침몰>(풀빛) 검토 및 토론
- 2차: 6/14(화) 14:00, 평화방, 단행본 <천안함 외교의 침몰>(풀빛) 검토 및 토론
- 3차: 8/12(금) 15:00 평화방 참여연대 평화체제 자료집, 한반도평화체제(이남주), 안보영역의 시민적 통제(이대훈) 논문
- 4차: 9/2(금) 10:30 평화방 참여연대 평화체제 자료집 북한붕괴문제(서보혁), NLL문제(정태욱) 논문, 원자력발전문제와 핵정상회의와 관련한 자료 보기로 하다.
- 5차: 9/22(목) 15:30, 평화방, 한반도 포커스-비핵화 관련 자료 검토
- 6차: 10/6(목) 15:30, 평화방, NLL관련 자료 검토-정태욱 교수, 참여연대 평화체제 발표문
- 7차: 10/21(금) 15:00, 평화방,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 <시민건강과 여성>, 시사인 자료 검토 및 논의
- 8차: 12/7(수) 15:30, 평화방 <핵무기와 국제정치>, <비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향>, <핵폐기 사례연구>, <북핵문제와 동북아 6자회담의 지정학> 등 핵무기 관련 국제정치적 함의와 북핵문제 등을 검토

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1)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관련 회의

- 6/3(금) 11:0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논의, 인사동, 정현력, 유정애, 정경란
- 6/8(수) 16:0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논의, 평어 사무실, 여혜숙, 김정수, 정경란

(2)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프로젝트 지원 및 선정 (정경란, 김연랑)

- 프로젝트 작성
- 6/28(화) 13:50 프로젝트 ppt 심사 여성재단 회의실
- 7/1(금) 프로젝트 선정 결과 발표 1,300만원 선정
- 7/14(목) 프로젝트 수정안 발송
- 8/1(월) GPPAC Northeast Asia 800유로 지원 승인
- 8/8(월) GPPAC Northeast Asia,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800유로 승인 감사 편지

(3)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준비 1차 워크숍

○ 일시 : 8/22(월) 16:00-18: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참석 : 정현택, 여혜숙, 김정수, 정경란(이상 평화여성회) 김금옥(여연), 안정희, 박지용(이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논의 :

- 2012 회의 진행 추진계획 확정 및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여성평화운동 과제 논의

-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협력방안 모색하기로 함 => 한겨레통일재단에 기획서 전달

(4)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준비 2차 워크숍

○ 일시 : 10/26(수) 15:00-17: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주제 : 후쿠시마 핵발전소 경험과 여성

○ 발표: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대책위원장)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사회: 김정수(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참가 : 추진위 관계자, 환경단체 및 평화운동 활동가

(5)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준비 3차 워크숍

○ 일시 : 12/1(목) 15:00-17: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주제 : 핵안보정상회의와 여성

○ 발표: 김정수(불교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정경란(평화여성회 정책위원장)

사회: 정현택(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장)

○ 참가 : 추진위 관계자, 회원

(6) 기타

- 10/17(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에게 보내는 글 배포

- 10/17(월)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주관단체 참가 요청서 발송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환경연대 여성위원회, 여성환경연대) 및 확인(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참가 결정)

- 10/24(월)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주관단체 참가요청서 발송 (대진평화여성회)

- 12/20(화)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지원 김태현군 인턴 활동 시작함.

○ 평가와 과제

-세미나의 정례회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와 여성평화주의적 대안 모색하는 계기 제공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ADAW) 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기간동안 국제회의를 조직해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채택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제연대를 확대했으며, 국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에 기여하였다. 또한 신낙균 의원실 주최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토론회에서 여성단체의 의견을 개진해 1325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였다.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여산을 확보해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지속적인 개최에 기여하고 핵문제-핵무기 및 핵에너지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여성들의 국제적 리더십 향상에 기여하며 평화, 안보 분야에서 정부 및 의회에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여성평화동원운동에 우선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을 전달하고 이를 지원할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갈등해결센터 사업

○ 사업방향

- 1) 통합적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2) 그간의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확대, 강화한다.
- 3) 지역과 협력해서 평화문화 형성과 인력 양성에 힘쓴다.

○ 사업목표

- 1)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2)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화커뮤니티 만들기에 힘쓴다.
- 3)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4) 회원들의 유대 강화에 힘쓴다.
- 5)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6) 평화적 갈등해결 영역에서 일하는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형성에 노력한다.

○ 회의

1) 운영위원회

- (1) 1차: 1/10(월) 19:30, 2011년 사업계획 세부안 검토
- (2) 2차: 2/18(금) 19:30, 진행사업 점검, 사업별 연계, 운영위원회 진행원칙등 논의
- (3) 3차: 3/14(월) 19:30, 또래조정반 사전사후설문지 논의, 회원평화마당 등 논의
- (4) 4차: 4/12(화) 19:30, 서울남부교육시민연대 참여관련,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추천, 갈등해결센터 부설기구화 논의관련, 프로젝트 관련논의
- (5) 5차: 5/18(수) 19:30, 화해권고제도 지역 확산에 따른 센터 역량강화 방안, 평화커뮤니티 사업, 갈등해결센터 부설기구화 관련 논의 과정 등
- (6) 6차: 6/15(수) 19:30, 후원의 밤 참여, 준비사항 등
- (7) 7차: 7/11(월) 19:30, 상반기 평가
- (8) 8차: 9/7(수) 19:30, 하반기 사업 점검(교육, 조직관련, 평화커뮤니티사업), 2010년 사업방향과 계획을 위한 논의 의제에 대한 아이디어모으기 & 계획세우기
- (9) 9차: 10/10(월) 19:30, 진행사업 점검, 2012년 사업계획을 위한 사업, 조직건단 1차 논의
- (10) 10차: 11/18(금) 19:30, 2012년 사업계획을 위한 사업, 조직건단 2차 논의, 부설기구 관련 논의
- (11) 11차: 12/11(일) 10:00, 2011년 평가 및 2012년 조직방향 및 계획

2) 청소년 교육팀

- (1) 1차 : 1/31(월) 19:00, 청소년교육팀 2011년 계획과 신년회
- (2) 2차 : 2/22(화) 19:00, 신도람중 교육 등 논의
- (3) 3차 : 3/31(목) 19:00, 청소년캠프 준비
- (4) 4차 : 5/13(금) 19:00, 청소년캠프 준비

- (5) 5차 : 6/12(일) 15:00, 청소년캠프 준비
- (6) 6차 : 7/4(월) 14:00, 청소년캠프 준비
- (7) 7차 : 10/4(화) 17:00, 공부모임과 방송교육 등 논의
- (8) 8차 : 11/23(수) 18:00, 갈등해결센터 부설기구화 내용공유, 평화컨소시엄 논의
- (9) 9차 : 12/9(금) 18:00, 2011년 청소년교육팀 평가 등
- (10) 기타모임

- 영림중 사정간담회 : 4/8(금) 15:30, 학교 회의실, 참석-김영진, 박재신, 이덕경
- 신도림중, 영림중 교육 평가 : 7/4(월) 18:00,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참석-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박인혜, 박재신, 이덕경
- 영림중 사후간담회(교육소감 및 평가) : 7/6(수) 오후 15:30, 영림중 컨설팅룸
참석-김영진, 김정아, 박인혜, 박재신, 안향숙 / (학교)강희영, 김순자, 박복희,
조남규
- 신도림중 준비모임 : 8/26(금) 19:00-21:00, 참석-김영진, 김정아, 남미영, 문경
아, 박재신
- 하안복초 논의 : 10/23(일) 20:00, 대림동, 참석-김선혜, 김영진/(학교)한봉순

3) 사회갈등분석팀

- (1) 1차 : 1/14(금) 19:30, 2011년 계획
- (2) 2차 : 6/30(목) 19: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프로젝트 기획회의의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실태 조사'
- (3) 7/15(금) 19:00, 김선혜, 김지훈, 박수선, 이경순, 조사 내용 논의
- (4) 8/24(목) 10:00, 김선혜, 김지훈, 박수선, 이경순 : 기초 자료 취합과 향후 조사
일정 확정
- (5) 9/30 19:00, 주민참여 관련 조사 추진 현황 점검
- (6) 11/4 14:00 조사내용 점검, 11/18 간담회 준비
- (7) 11/11 15:00 11/18 간담회 준비
- (8) 11/18(금) 17:00 간담회
- (9) 11/30(수) 사업 완료, 자료집 제작
- (10) 12/9(금) 19:00 활동평가회의

4) 도래조정팀

- (1) 1차 : 1/26(수) 19:00, 2011년 사업계획 세검토, 도래조정반 발대의 아이디어 포

으기, 또래조정자 활동 학부로 동의서 양식 논의

- (2) 2차: 3/25(금) 19:00, 또래조정자활동 동의서 완성, 보고제책 정리, 보고서 및 관건행차의 역할 규정
- (3) 3차: 4/25(월) 10:00, 여주중학교 또래조정반 활동을 경기 및 여주지역신문에 홍보, 또래조정자 공식상징물 디자인 검토
- (4) 4차: 6/3(금) 18:00 또래조정반 진행사항공유
- (5) 5차: 7/20(수) 15:00, 또래조정자 버론 시안 확정
- (6) 6차: 8/24(수) 15:30, 민주시민교육박람회 부스 전시 건
- (7) 7차: 10/22(토) 11:00, 또래조정반 학원 수료증 수여하기로 결정
- (8) 기타 모임 및 회의

-1/5 은평청소년수련관 간담회: 김선혜, 이덕경

-2/11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 및 생활혁신자문위원회) 주최 학생주도 활동해결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발표(이덕경 또래조정팀장, 고영삼 여주중학교 담당 교사, 이예린, 김석란 독산초 또래조정반 학생)

-4/7(목) 금천청소년수련관 간담회: 김영진, 이덕경

-5/23(월) 경기일보에 여주중 또래조정소개 기사

-7/7(목) 오후 5시 금천청소년수련관지원 또래조정반 관련 선생님 간담회 (금천청소년수련관 담당자, 학교 담당선생님, 센터 진행자)

-8/8(월) 민주화운동사업회, 민주시민교육박람회, 시민교육 우수사례공모, 또래 조정으로 신청서 제출

-9/20-21(수)민주시민교육박람회 '또래조정훈련과 또래조정운영' 우수상 수상

-9/20(화) 독산초 5학년 담임들 간담회, 학급내 또래조정 의의(김선혜)

-9/27(목) 금동초 5학년 담임들 간담회, 학급내 또래조정 의의(이덕경)

-10/11(화) 오후 1시 금천 청소년수련관 관장, 신임주임 간담회(이덕경)

-10/13(목) 독산초 또래조정 발대식 (5-7 담당샘 학급, 김영진, 여혜숙,금천수련관 김명아)

-11/7(월) 경기도 시흥시청 교육청소년과 장곡초 또래조정 수업참관

5) 회복적사범 조정팀

(1) 1차: 1/5(수) 19:30, 2011년 사업계획 검토, 운영계획, 일정점검 등

(2) 2차: 2/7(월) 19:30, 생활속 실천(숙제) 발표, NVC 강의(안향숙 진행), 조정팀 홍보물 기획회의(문경아 초안작성)

- (3) 3차: 3/7(월) 19:30, 생활속 실천(숙제) 발표, NVC 강의(이덕경 진행), 서울 25개 지역구 학교 홈페이지 DB정리사업 논의
- (4) 4차: 4/15(금) 19:30, 초중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게시관 참여 가능한 학교에 평화커뮤니티 홍보물 게시함.
- (5) 5차: 5/23(월) 19:30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임부영 변호사 초청 '소년법 이해'
- (6) 6차: 6/20(월) 19:30 소년 폭력사건을 둘러싼 민사쟁점 강의(김희경), 조정실습
- (7) 7차: 7/7(목) 19:30 조정실습 특화 '아이에게 맡길까'
- (8) 8차: 9/19(월) 19:30 조정실습 특화 '같은 사건, 다른 캐릭터'
- (9) 9차: 10/17(월) 19:30 조정실습 특화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 (10) 10차: 11/21(월) 19:30 조정팀 운영 평가, 2012년의 바람 브레인스토밍

6) 과제개발 회의(김영지, 김영진, 김학목, 박인혜, 박수선, 유정은, 이덕경 참여)

- (1) 1차:
- (2) 2차: 3/5(도) 15:00 전체 목차 정리, 세부내용 검토
- (3) 3차: 3/27(일) 15:00 세부내용 검토
- (4) 4차: 5/1(일) 15:00 세부내용 검토
- (5) 5차: 5/29(일) 15:00 세부내용 검토
- (6) 6차: 6/27(월) 19:00 세부내용 검토
- (7) 7차: 7/24(일) 16:00 세부내용 검토
- (8) 8차: 8/21(일) 11:00 세부내용 검토
- (9) 9차: 9/4(일) 14:00 세부내용 검토

7) 팀장회의(김영진, 김선혜, 김희경, 박수선, 이덕경 참여)

- (1) 1차: 6/7(화) 15:30-17:30 평화커뮤니티 사업 평가, 방향성, 절차와 내용 논의
- (2) 2차: 6/20(일) 16:30-18:30, 평화커뮤니티 사업 재원 확보 아이디어모으기 등
- (3) 3차: 8/30(화) 16: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시민교육박람회 참여 준비, 하반기 사업 계획 논의
- (4) 4차: 12/16(금) 9:30-12:30, 2012년 조직구조 개편안 논의

8)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진행전문가 훈련'

(서울시 기금 지원사업) 기획회의

- (1) 1차: 6/3(금) 19:00 박수선, 박인혜, 이혜숙, 이경순, 조영희 참석
일정확정, 장소와 참여자 모집 등 공공기관 협력을 위한 방법 논의
- (2) 2차: 6/22(금) 19:00 박수선, 박인혜, 이혜숙, 이경순, 김선혜, 김희경 참석
일정, 장소 확정, 교육대상과 홍보방법에 대한 논의
- (3) 3차: 7/8(금) 17:00 김현원, 박수선, 박인혜, 이경순, 이항진, 정미현, 김선혜, 김희경 참석. 프로그램 대상의 특성, 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논의
- (4) 4차 기획회의 : 8/8(금) 14:00 박수선, 박인혜, 이경순, 김선혜, 김희경 참석.
각 프로그램 진행자선정 및 준비사항 논의
- (5) 1차교육 평가회의: 11/2(수) 16:00
- (6) 5차 기획회의: 12/2(금) 19:00 전체 평가

9) 서울YMCA와 공동주최 '분쟁해결과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전국 조정전문가 양성과정' 기획회의

- (1) 1차: 7/28(목) 15:00 김희경, 김선혜, 박수선
프로그램 기획안 논의, YMCA 공동작업 관련 논의
- (2) 2차: 8/3(수) 14:00 김희경,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평어), 김혜리, 주건일 (YMCA)
- (3) 3차: 8/23(화) 10:00 김희경,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평어), 김혜리, 주건일, 한석현(YMCA)
- (4) 4차: 9/30(금) 10:00 김희경(평어), 김혜리, 주건일(YMCA) 세부실무 논의
- (5) 5차: 10/27(목) 10:30 김희경,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평어), 김혜리, 주건일, 한석현, 신종원(YMCA) 기초과정 평가
- (6) 6차: 11/2(수) 17:00 2차 훈련내용 역할분담, 세부계획 논의
- (7) 7차: 12/14(수) 18:00 김희경, 김선혜, 박수선(평어), 주건일, 한석현, 신종원 (YMCA)전체 평가, 이후 전망

○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화커뮤니티 사업

1) 교사, 학부모 대상 갈등해결 교육

- 안산디자인 문화고등학교 "협력적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사·학생간 소통 훈련" 4/15~12/9 2시간 10회차 (김선혜, 김영진, 박인혜, 이덕경)
- 울산지역아동센터 교사 대상 연수 6/10~11 7/1~2, 15시간씩 2회(김선혜, 박인

해, 이덕경, 김영진)

- 북부교육지원청,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갈등해결 연수 7/18(월) - 21(목) 15시간(김선혜, 박수선)
- 1/13(목) 중산고등학교 교사 대상 학생생활지도 연수 관련(1시간 10분, 여혜숙)
- 7/6(수) 한신대교원연수원, 경기도 공모교장 대상 '리더십과 비폭력적 갈등해결' 2시간(박수선)
- 7/16(토), 9/3(토) 최정부 두레 부모자녀 교육 각 2시간(박인혜, 김선혜)
- 11/29(화), 12/6(화), 12/8(목) 원산 교육공동체 '음' 주최 학부모대상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9시간, 김선혜, 김영진)
- 12/12(월) 선덕중학교 교사대상 학생 생활지도와 소통(2시간, 박수선)
- 12/22(목) 금정중학교 교사대상 '갈등해결과 평화교육'(2시간, 박인혜)

2)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1)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 동일중 : 1/7(금) 9:00-12:00, 별첨학생 20여명, 진행-이덕경
- 시흥중 : 2/8(화) 15:10-16:00, 1,2학년 학생 대의원 13명, 진행-김영진, 박인혜
- 평명 가림중(평화단체콘소시엄 : 3/5-11/5(토) 1학년 4반(1-2교시), 2학년 4반(3-4교시)
총 6회(3, 5, 6, 9, 10, 11월), 진행-김영진, 문경아(김경아)
12/26(월) 3학년 1반(1-2교시), 6반(3-4교시)

참여단체-갈등해결센터, 개척자들, 평명교육연대, 비폭력대화센터, 비폭력평화동결, KAC

- 탐동초 : 3/23(수) 14:30-15:30 (1시간), 3-6학년 학급임원 120여명
진행-김영진, 박재신, 박인혜, 안향숙
9/21(수) 15:00-16:00 (1시간), 3-6학년 학급임원 120여명
진행-김영진, 박정옥, 박재신, 여혜숙
- 신도림중 : 3/28-5/23(월) 8:55-9:40 (45분), 1학년 1-6반 (총 8회차)
진행-김선혜, 김영진, 박인혜, 박재신, 안향숙, 이덕경
9/19-11/14(월) 8:55-9:40 (45분), 1학년 7-13반 (총 8회차)
진행-김영진, 김경아, 문경아, 박정옥, 박인혜, 박재신, 이덕경
- 연곡중 : 4/16-11/19(토) 9:00-12:00 (총 9회차) 20여명
진행-김영진, 이현숙(김영란, 김경아, 안향숙)

- 영림중 : 4/11(월)-6/24(금) 월-금 13:20-15:00, 3학년 12개반 (총 8회차)
진행-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박경옥, 박인혜, 박재신, 이덕경(이은경)

장혜당

- 난곡중 : 5/11, 18, 25(수) 16:00-17:00 (총 3회차) 1-2학년 14명, 진행-김영진
- 부천중 : 7/1(금) 11:30-13:00 (90분), 1학년 4반, 진행-이덕경, 이현숙
7/13(수) 14:10-15:30 (90분), 1학년 2반, 진행-이덕경, 이현숙
11/15(화), 11/17(목), 11/22(화), 11/29(화) 15:30-16:30
(60분씩 총 4회차), 1학년 3반, 진행-김영진, 김정아, 박재신
- 홍일초 : 10/4, 11(화) 3-4교시(2교시 2회차), 6학년 1반, 진행-박재신, 이덕경
- 구도남초 : 10/4(화)-10/13(목), 5학년 8개반 2교시씩 2회차
진행-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박경옥, 박재신, 이덕경
- 광명 소하초(방송수업) : 10/12(수) 10:50-11:30, 진행-이덕경
- 시흥중(방송수업) : 10/29(토) 10:35-11:15, 진행-김영진
- 부천 원미중(방송수업) : 11/5(토) 8:40-9:25, 진행-이덕경
- 하안북초 : 11/7-12/5(일) 13:00-14:30 (90분씩 총 5회차), 4학년 10명,
진행-김영진
11/23 10:40-12:00 (80분), 4학년 한 개반, 진행-김영진, 박재신
- 고양 대곡초 : 11/11, 18, 25(금), 12/7(수) 9:10-10:30 (80분씩 총 4회차),
4학년 15명, 진행-김선혜, 김영진, 박재신
- 양천중 : 11/28(월) 오전 9:55-10:40, 3학년 2개팀(19명, 4명)
진행-김영진, 이현숙
- 꿈어린이학교 : 12/12(월) 10:00-11:30, 5-6학년 8명, 진행-김영진

(2) 포레조정자 훈련 및 반 운영

- 여주중학교 3/19, 4/16, 5/21, 6/18, 7/2, 9/17, 10/1, 10/15, 11/19, 12/17 토요일 8:50-11:25, 12/30(금) 10:00-16:00 이덕경, 정현주
- 독산초등학교 5, 6학년 12명 3/31-12/15 총 20회 매주 목 13:40-14:20 김영진, 박경옥(1학기), 여혜숙(2학기)
- 금동초등학교 4/7-11/17 총 20회 매주 목 13:50-14:30 5학년 15명 이덕경
- 대방초등학교 임천수련회 포레조정자개교교육 3/23(수) 15:00-16:30 김선혜, 남미영, 이덕경
- 문성초 4/19-12/29 총 20회 매주 화 13:50-14:30 김선혜

- 연원중 4/13, 5/6, 6/3, 17, 7/8, 9/1, 15, 22(금) 10/19(수) 13:15-14:35 이덕경 (1학기), 김선혜
- 대방초 4/28-7/7 총 10회 대주 목 13:40-14:20 박인혜
- 춘천 문화의 집 7/19(화) 11:00-13:00 흥천여승 도래상당반예제 도래조정소개 교육 이덕경
- 신목초 임원수련회 도래조정소개교육 9/7(수) 신목초 4-6학년:김영진,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 신목초 도래조정 10/26-11/23 총 5회 대주 수요일 13:00-14:00 김영진
- 경기도 시흥 정곡초 10/10-12/19 총 11회 대주 월요일 13:00-14:30 이덕경
- 경기도 성남 동중학교 10/1(토) 4시간 김영진, 여혜숙

(3)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 일시: 7/22(금)-23(토) 1박2일
- 장소: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 참가자: 32명
- 사범연수원생 3명 자원활동가로 지원.

(4) 여중등학교 교육복지사업/협력사업

- 평화감수성향상훈련 10/14(금), 10/28(금), 11/4(금), 11/11(금), 11/18(금) 10:50-12:30 (1,2학년) 10회차(하루 2차시씩) 13:30-15:20(3학년) 10회차(진행: 이덕경, 오진광관:박희진(8회) 오후참관:정현주(4회)
- 도래조정반 운영/도래조정팀 활동 참조
- 학부모교사교육 11/23(수) 1회(김선혜)

4) 회복적 사범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으로부터 사건 의의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
- 조정자 활동

5) 평가

- 평화커뮤니티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통합하여 평화, 갈등해결집근을 하자는 지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아야 함.

- 토레조정반 운영은 지난해 교육훈련에 중심이 있었던 것에 비해 독산초, 여주중 등에서는 조정자활동을 시작하였음. 독산초의 경우 공식적으로 발대식을 하여 토레조정자들의 사명감이 높아지기도 함. 토레조정반의 경우 8개학교로 확대됨.
- 신도림중, 영림중 등 혁신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진행됨. 또한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평화교육을 권고하여 일회성 수업 의 피도 증가하였음. 이는 갈등해결 교육 및 평화적 접근의 사회적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전체적으로 교육, 토레조정, 대화모임 등이 한 학교,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학교의 현실상 어려움이 있음. 학교의 구조, 사업운영 체제 등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
- 평화커뮤니티의 관점과 방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별 홍보 및 교육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012년 선거 시기를 맞아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후보들의 공약, 정책으로 이 교육 및 토레조정프로그램이 학교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교육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 일상프로그램, 철학, 등을 개발해 우리 프로그램에 녹이고 통합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대상도 예비학부모, 교사 들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양적확대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 질과 밀도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주요 교육 사업

1) 갈등해결과 평화 전문 과정

△ 회복적 사법 조정자 훈련 과정

- (1) 일시: 2월 25(금)- 26일(토) 1박2일 워크숍, 서울여성프라자
- (2) 참가자: 김혜리 외 22명
- (3) 내용: 회복적 사법이란?, 회복적 사법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무, 실습
- (4) 진행팀: 김희경, 박수선, 박인혜

△ 제9기 강사 트레이닝

- (1) 일시: 3월 12일(토)-13일(일) 숙박워크숍, 3/21-4/20 대주 월,수

18:30~21:30, 5/14(토), 5/21(토) 14:00~19:00 (총 55시간), 서울여성프라자

(2) 참가자: 김경아 외 15명

(3) 진행팀: 김영진, 박수선, 안향숙, 이덕정

△ 조정자(mediator) 훈련 :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전문가 훈련

(1) 1차 조정전문가훈련과정

- 일시: 9/21(수), 9/28(수), 10/5(수), 10/12(수)

- 참가자: 22명

- 장소: 도봉구민회관

(2) 2차 조정전문가훈련과정

- 일시: 10/22, 29, 11/5, 12(토) 13:00~19:00

- 참가자: 장혜영 등 22명(수료 19명)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 진행자(Facilitator) 훈련 :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진행전문가 훈련

(1) 1차 진행전문가훈련과정

- 일시: 9/17(토), 9/24(토), 10/1(토), 10/8(토) 13:00~19:00

- 참가자: 김경희 외 19명(14명 수료)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2) 2차 진행전문가훈련과정

- 일시: 10/26(수), 11/2(수), 11/9(수), 11/16(수) 9:00~16:00, 11/16 수료식

- 참가자: 26명(수료 23명)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 조정자(mediator) 훈련 : 서울YMCA와 공동주최 '문명해결과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전국 조정전문가 양성과정'

(1) 1차 기본교육

- 일시: 10/13~15(목금토, 2박3일) /30명/대구 팔공산관광호텔

- 내용: 갈등이해, 조정소개, 의사소통, 조정실습

(2) 2차 심화교육

- 11/24~26(목금토, 2박3일)/20명/의정부 YMCA 다락원

- 내용: 심화갈등이해, 조정실습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1) 강사드레이닝

- 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대상 '도래조정 교육훈련 및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1/12(수), 13(목), 20(목) 21(금) (총 22시간,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진행)
- 안산YMCA 평화로운 마을만들기 강사양성 기초과정 3월 22일(화)-4월 19일(목) (9회, 27시간)(박수선, 박인혜, 김선혜 진행)
- 대전평화여성회 주최 갈등해결과 평화 진행자교육과정 4/8-4/9, 4/15-16, 4/29-30, 5/7(토) 총42시간(박수선, 김선혜, 박인혜, 여혜숙 진행)
- 안산YMCA 평화로운 마을만들기 강사양성 심화과정 5/3(화)-6/7(화) (9회, 27시간)(박수선, 박인혜, 김영진, 이덕경 진행)
- 울산지역아동센터 교사 대상 연수 6/10-11, 7/1-2, 15시간씩 2회(김선혜, 박인혜, 이덕경, 김영진 진행)
- 포항 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 갈등 다루기 - 갈등해결과 분노 조절' 11/14-15(12시간, 박수선 진행)

(2) 조정자, 진행자 훈련

- 수원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갈등해결과 조정' 2/23 - 3/23(수) (5회, 17.5시간) (박인혜, 김선혜 진행)
- 광주전문직여성클럽 주최, 갈등조정 전문가 교육 및 훈련, 4/16(토), 4/23(토), 4/30(토) 18시간(박수선 진행)
- 기독교세진회 주최, 지역사회 고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사업, 워크숍 4/15 서울경기지역(서울), 4/25 경북지역(포항) 5/30 충청지역(대전), 6/24 경남지역(부산) '회복적 의사소통' 2시간, 심화과정 조정실습 9/2(금) 5시간 (박수선)
- 홍성 여성농업인센터 주최, 평화로운 갈등조정자훈련 7/2-12/10(토) 6시간 7회 (박수선 진행)
- 금천구청, 여성퍼실리테이터과정 3시간 10회차, 9/19-11/28(월) 매주 월 10:00-13:00, (김선혜, 박수선, 여혜숙 진행)
-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평화문화 조정자양성과정' 9/20-12/15 매주 월, 목 2회

차 중 11회차 갈등해결센터에서 진행(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 대전명화여성회 주최 '회복적 사법 조정자훈련' 진행 10/7(금), 8(토) 14시간(김희경, 박수선, 박인혜)
- 광명정생학습관 갈등조정자양성과정 강의(김선혜, 박인혜)

(3) 일반 교육

- 도봉지역자활센터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3/14~15, 3/17~18 14:00~17:00(김선혜, 이덕경 진행)
- 용인평화센터 참누리 주최, "1316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교육" 5/17~7/9 2시간 7회 총 14시간 (김선혜, 박인혜 진행)
- 영등포지역자활센터, "갈등관리와 의사소통" 4/18, 4/22 2시간 2회(김선혜 진행)
- 동작자활센터, "갈등관리와 의사소통" 4/19, 22, 25, 27 2시간 4회(박인혜 진행)
- 서울시립양로원 직원대상 '갈등해결과 조정'교육 2/22, 3/7(박인혜 진행)
- 시흥청소년진흥센터 교육 11/4(금) 2시간 "갈등해결의 방법" (김선혜)

(4) 조직 내 갈등예방 및 해결, 회의진행 교육

- 한살림 리더십교육 '조직 내 갈등해결과 소통, 회의진행' 7/12, 8/10, 11, 10/14 (박수선, 여혜숙 진행)
- 주민생활 '갈등해결과 소통, 회의진행' 12/21, 22, 23 9시간 (박수선 진행)

3) 공무원, 공공기관 관련 갈등해결, 조정훈련

- 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강사로 참여(경기인재개발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광주공무원교육원, 경북공무원교육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박수선)
- 법원 화해권고 실무, 매뉴얼 강의
- 4/8 소년재판장세미나 '회복적사법과 화해권고' 발제 (박수선)
- 법원 소년부 화해권고 위촉식에서 화해권고진행 관련 강의, 8/25 광주가정지원, 8/31 전주지원, 10/20 부산가정법원, 11/8 대구지원(박수선)
- 10/25(화) 민사재판장세미나, 조정화해클리닉 강의(2시간 30분, 박수선)
- 11/1(화) 형사재판장세미나, 소년보호사건 화해권고실무 강의(2시간, 박수선)

4) 평가

- 전문교육은 제외대비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조정자, 진행자 훈련은 서

올시 공모사업으로 2회 진행하였고, 서울YMCA와 공동주최로 NGO 활동가 대상의 조정자 훈련을 기초과정, 심화과정 진행함.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조정자훈련, 진행자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에 홍보하는 기회가 됨.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아 저렴한 참가비여서이기도 했지만 공모 후 금방 마감되어 관심이 높음을 확인함.
- 홍보하는 과정에 공공기관의 프로그램(금천구청 평생학습관, 여성퍼실리타이터 양성과정)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강사드레이닝은 9기를 진행하면서 내용의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상을 생각해보는 때 의무로 확산의 의미는 있으나 갈등해결센터의 강사로 활동할 인적 양성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대상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방통대, 청소년 관련. 사람별로 대상을 좀더 특화할 필요.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는 강사드레이닝의 성적을 명확히 해서 지역의 단체들과 연결하여 모집은 지역 단체가 맡고, 기획과 강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임.
- 청소년캠프는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으로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
- 교육을 교육자체로만 기획하지 말고, 전체 조직의 관점에서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 후 활동 프로그램, 담당 인력, 비전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 줄 수 있으면 교육이수자들이 활동가로 성장,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서울YMCA와 공동주최한 전국교육의 경우 갈등해결, 조정의 관점과 방식을 지역의 각 실천가에게 알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회원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갈등해결센터와 사업을 알리는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팀 회의 때 경험을 나누면서 주변으로부터 인식 확산에 노력하였다.
- 조정팀에서는 평화커뮤니티 사업을 초중등학교에 홍보하기 위해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평화커뮤니티 관련 웹자보를 만들어 학교 게시판에 올리는 등 홍보 선전활동을 하였다.
- 9/20-9/21일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시민교육박람회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조정반 교육훈련과 활동'을 소개하고,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활동을 널리 알렸다.

○ 프로그램 연구, 개발

-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교안집 기획, 발간 예정
- 2) 사회갈등사례 연구: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실태 조사' 자료집 발간
- 3) 또래조정 활동 관련 연구 작업
 - 또래조정반 운영 관련 양식 개발, 교육에 사용할 동영상 자료 및 시나리오 개발
 - 또래조정활동 관해서 연구작업 위한 기초작업(강순원 이사, 여주중 등 또래조정 수업 참관)

4) 평가

- 교안집은 2012년 초에는 발간할 예정임.
- 또래조정반을 운영하면서 또래조정 관련한 양식을 개발하고, 교육에 사용할 동영상 자료,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한 것은 향후 또래조정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사회갈등 관련해서는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실태 조사' 자료집 발간함. 직접 관련 공무원 및 주민을 인터뷰하여 정리한 것으로 인터뷰 과정에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 등락구에서는 센터의 활동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기도 하였음.
- 통일교육 및 한반도 평화형성 과정은 다루지 못함. 갈등해결센터 사업으로 앞으로 더 고민 해야 할 것임.
- 교육에 치중한 면이 많아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거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2012년은 갈등해결센터의 활동이 10년 되므로 연구를 보다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음. 그간의 양적확대를 어떻게 질적으로 전환할 지를 모색할 시점이 됨.

○ 조직 강화 및 확대

- 1) 장지역당강화 모임(권승현, 김영란, 김영진, 김정아, 박무열, 박재신, 이은경-김영진)

- 1차 : 1/31(월) 16:00, 시연 (권동개님-이은경)
- 2차 : 2/22(화) 16:00, 시연 (분노-김영란)
- 3차 : 6/29(수) 10:00, 랩시연 (양과분식-박무열)
- 4차 : 9/8(목) 16:00, 시연 (권동개님-김정아)

- 5차 : 11/23(수) 16:00, 공부모임 계획 논의 등
- 6차 : 12/9(금) 16:00, 공부 (갈등이해-김영진 발제)

2) 강사역량강화 심화 모임(김선혜, 김영진, 남미영, 박인혜, 안향숙, 이덕경, 이현숙- 진행 박수선)

- 1차: 1/18 19:30, 기대나누기, 계획
- 2차: 2/24 19:30, 기대나누기, 계획
- 3차: 3/24(목) 19:30, 한국의 갈등해결 제도 이해(김선혜)

3) 회원 평화마당

- 1차: 4/7일(목) 17:00-20: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여성과 협상’(강사: 조상행, 김선혜외 14명 참가)
- 2차: 회복적 세를 진행자훈련 하루 워크숍: 12/13(화) 10:00-18:00, 독일 베레나 프라이스, 미국 존 마이어 진행, 24명 참여

4) 평가

- 강사역량 강화 공부모임은 참여자들이 활동이 많음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되지 못했음.
- 회원평화마당을 분기별로 하기로 했었는데 1번만 진행하였는데 갈등해결센터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교육이 많았어서 업무를 못 낸 측면이 있음.
- 사업과 활동이 많다보니 회원들끼리의 프로그램, 교류가 부족했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했고 고민하지 못함.
- 내부 회원의 교류,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 현실성 있게 계획, 진행해야 할 것임.

○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1) 회복적 사업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조정자 활동

-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으로 참여: 김선혜, 김영진, 김희경, 문경아, 박상희, 박수선, 박인혜, 박재신, 박희진, 서정기, 여해숙, 이경순, 이덕경, 이재영, 이항진, 조영희(총 16명)
- 의정부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 김선혜, 김희경, 박수선, 박인혜
- 수원지방법원: 이경순

- 인천지방법원: 김희경, 이덕경

2) 평가

- 학교 외회의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은 1건 진행함.
- 프로그램의 특성상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화모임이 활성화되려면 학교, 학부모 등이 회복적 사법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
-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반면 법원에서의 화해권고제도는 서울가정법원의 성과를 기초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정전문가의 인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과 노력이 요구됨.
- 사회갈등영역에서의 조정자 역할은 조직적으로는 진행하지 못함. 서울시 기초지자체의 주민참여 조사 작업을 통해 사회갈등영역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배움이 있었고, 앞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연대

-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n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 회복적정의네트워크
- 한국아나법티스트센터(KAC)

○ 평가와 과제

- 2011년에는 갈등해결센터의 조정, 진행 전문가 교육훈련과 활동에 대해 알리는 계기를 다양하게 만들었음.
- 학교에서의 도래조정반 운영은 교육훈련을 넘어 실제 훈련받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례에 중립적 3자로 개입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음.
- 도래조정반 운영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시민교육 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박람회에 부스를 통해, 사업발표를 통해 도래조정반의 의미와 필요에 대해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
- 회복적 사법정의 패러다임의 화해권고제도의 전국 법원으로의 확장도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관련 노력과 활동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음.
- 갈등해결센터의 평화커뮤니티 사업, 교육, 조정, 진행 등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 갖고 조직과 지역에 적응을 모색하는 지역의 단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함.
- 반면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시간의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충분하지 못하였음. 새로운 활동가 풀을 만들지 못했고, 회원들간 나눔의 시간을 만들지 못하였음. 사업 중심으로 바쁘게 진행되다보니, 활동기간 신뢰, 유대감 형성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음. 자료화, 연구 등에 대해서는 계획만큼 이루지 못하였음.
- 갈등해결센터는 한국사회에서 '갈등해결과 평화' 주제의 교육 및 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 그간 양적 확대를 이루어왔다면 이제 각 사업 영역에 질적 도약의 시기가 되었음.
- 평화적인 갈등해결 문화 확산을 위하여 갈등해결센터는 교육, 조정, 실천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리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에 힘써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적 구성을 좀더 다양화하기, 둘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셋째, 사업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활동체제 정비, 넷째,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 등임.

4. 정보·홍보 사업

1) 홈페이지 관리, 온라인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준비호 발행 (2회)

(1) 발행일자 : 1호-2011년 6월 15일(수), 2호-2012년 1월 10일(화)

(2) 발행부수 : 1호-300부, 2호-200부

(3) 배포 : 후원행사 참석자, 활동회원, 후원회원 등 직접 & 우편 발송

(4) 제작비용 : 각 600,000원

(5) 준비호 담당 : 김정수 공동대표

(6) 운영위원회 평가 :

- 소식지가 나올 수 있도록 여는 김정수 대표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다.
- 바쁜 일정에도 글을 써준 회원들에게 감사.
- 외부권전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으로 사의를 전달하기로 한다.
- 준비호의 표지는 다양하게 한다.
- 후속회 회원들 비롯하여 소식지 팀을 꾸리는 것이 좋겠다.

< 준비호 1호(2011년 6월 15일 발행) 목차 >

- 권두언 우리 평화를 노래합시다/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 바란다>/김금숙
- 논단 '내가 꿈꾸는 나라'와 여성, 그리고 평화/남윤인순
- 여성평화운동 군사비를 성평등, 복지, 평화비용으로/정경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문 1325 이행현황 조사보고서/정경란
- 내륙 인도의 직권과 여성의 역할/김정수
- 제주장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외침/윤리리
- 활동해결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 접근/박수선
 갈등해결센터 '평화커뮤니티' 활동소개/김건희
- 평화문화 우정함을 아시나요/홍승희
 과일손 병과 나/최안진경
 서평 : <재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이권영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모저모
 이사회/회비/여성미래 원터일주금/북한 내북보내기 내주선 분

< 준비호 2호(2012년 1월 10일 발행) 목차 >

- 새해 덕담을 나누고 싶습니다/여혜숙
- 여성평화운동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등장/김향수
 2011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여성들/홍승희
 주한미군의 여성범죄 현황과 문제점/안경애
- 히로시마,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넘어/정경란
- 북한어린이와 여성들에게 밀가루 지원/김정수
- 북한 사리원 밀가루지원 모니터링 방북/김정수
- 소개: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전길부
- 활동해결 나는 아, 조정자/한재연
 회의진행이 어렵다구요,어렵지 않아요/김영아
- 진정한 화해는 자유를 이룬다/박희진
- 캄보디아에서의 평화훈련/여혜숙
- 회원의 글 3기말 위암수술 후 출복으로 10일 만에 나왔다/안병선
 넘쳐나는 학교폭력,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김선혜

소모임 소개 평화필드 모임을 하면서/김선량(지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모저모

2012 평화여성회 회비/이사회비 내 주신 분

3) 평가 정보-홍보 담당자가 따로 없었지만 사무국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되었다. 몇 년간 중지 되었던 소식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준비호를 다시 내면서 회원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회원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5. 회원 사업

1) 함께 하는 평화걸음

- 일시: 3월 29일(화) 10:00-14:00
- 장소: 인왕산
- 이현숙외 5명 참가

2) 회원평화야당

- (1) 1차: 4월 7일(목) 17:00-20: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여성과 협상'(감사: 조상행), 김선혜외 14명 참가
- (2) 2차: 5월 16일(월) 17:00-19: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평화를 위한 한 여자의 여정'(감사: 김성은이사장),

3) 총 워크숍

6월 3일(토) 15:00-19:00,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진행: 이권명희, 이서지 외 14명

4) 여성평화글쓰기

- * 필자와 독자의 평화적 소통을 이루는 글쓰기
 -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관계가 평화로운 글쓰기 훈련의 장입니다.
- * 재치 있게 잘 쓴 글들을 선정하여 읽어보고 나도 한번 써 보는 훈련
 - 쉽고 부드럽게 쓰는 연습도 함께합니다.
- * 1980년대 사회과학, 운동권 대자보, 학술논문의 과시용 문투, 난해한 문장을 탐피하는

노력도 해봅니다.

- * 평화를 주제로 한 글들을 읽고 토론하고 스스로 써보기
- * 평화단체의 출판물들을 비교해 보기
 - 좋은 점은 배우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 * 여성주의 글쓰기 중 흥미 있는 것 읽어보기
- *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등 주제가 되는 글쓰기 훈련
- * 그밖에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창조적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요!

- '여성평화글쓰기' 모임 이름이 : 홍승희 회원(인터넷신문 '행복인' 편집국장)
- 모임 날짜 : 월 1회 화요일 18:30-21:00
- 참가 비용 : 1회 5,000원 (자료 복사비, 간식비 등)
- 모임 횟수 : 2011년 가을 ~ 2012년 봄까지 8회 예정

(1) 첫 번째 모임

- 일시 : 9월 27일(화) 18:2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참석 : 홍승희, 여해숙, 김선량, 김정수, 성희경, 정태호 (6명)
- 내용
 - 가. 마음 열기 : 내가 평화글쓰기 모임에 온 이유 & 바램
 - 나. "평화글쓰기"란?
 - 다. 앞으로 무엇을 읽고 쓸 것인가?
 - ① 고미숙(박지현의 열하일기에 관한 글), 고혜경(제주도 여신들에 관한 글)씨 글 읽고 와서 느낀 나누기 - 원하는 사람들은 독후감 써서 함께 나누기
 - ② 자기 글을 써서 함께 나누기 = A4용지 1장 정도
 - 다. 목표 ①자신의 삶, 경험에 대한 글쓰기 ②, 평화여성회 소식지에 기고하기 등

(2) 두 번째 모임

- 일시 : 10월 26일(수) 18:3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참석 : 홍승희, 안병선, 김선량, 김정수

(3) 세 번째 모임

- 일시 : 11월 23일(수) 18:3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참석 : 홍승희, 안병선, 김선량, 김정수

5) 평화캠프모임

- 지도: 조덕경 선생

- (1) 1차: 11월 9일(수) 11:00-12:30, 기초태우기, 김선광·여혜숙
- (2) 2차: 11월 23일(수) 11:00-12:30, 필통·과우치 재단, 김선광·여혜숙
- (3) 3차: 12월 7일(수) 11:00-12:30, 필통·과우치 마무리, 김선광·여혜숙

6) 회원 송년회

일시: 12월 15일(목) 18:30-21:00,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음식나눔, 게임과 선물교환 진행: 김영진, 김성은 이사장의 12명 참석

7) 평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지속성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여 회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소모임을 개발하고 더욱 활성화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6. 재정 사업

1) 후원행사

- (1) 일시 : 2011년 6월 17일(금) 17:30-20:30
- (2) 장소 : 플라너 (서스스퀘어2층, 구 대우빌딩)
- (3) 참석자 : 122명
- (4) 결산

수입	금액	지출	금액
후원회	13,358,000	초청장 제작	600,000
		행사 식대	2,214,000
		초청장 우권료	46,950
		뫼뫼이비등	65,000
		식비,간식	143,800
		준비물,주차,교통	36,120
수입계	13,358,000	지출계	3,105,870
		순수익	10,252,130

(5) 평가 :

- 장소가 좋았다. (접근성, 비용절감, 준비수월)
- 이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기획 단계부터 이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았다.

- 평화단체와 여성단체와의 교류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었다.
- 준비하고 보너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사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다.
- 다음엔 내빈 소개를 두 번 정도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
- 준비가 많지 않은 소박한 공연과 나눔을 할 수 있는 후원의 날을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장터를 개설하고 회원모임이 있을 때 활용하고, 1년에 한번은 후원의 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 공간이 집중하기에 넓었다.
-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조금 길었다. 프로그램의 집중도가 떨어졌다. 창조출연한 팀의 노래수가 너무 많았다.
- 앞으로는 참여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참여연대 후원행사 참고)

2) 함양꽃감 판매 (생산지와 연결하여 직거래: 생산자 장운석)

- 12월 16일(금) 생산지 견학, 계약
- 12월 19일(월) 홍보시작
- 2011년 연말, 2012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꽃감판매

3) 평가: 후원의 날과 꽃감 판매를 통해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7. 연대사업

7-1 국내상설연대

7-1-1 한국여성단체연합

1. 제25차 정기총회: 1월11일(화)-12일(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대의원 2인(조영희, 여혜숙)
 - 정책토의: 2011년 한반도 평화 및 정치 경제 전망(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한국의 복지국가패러다임과 여성운동(이태수 꽃동네연도사회복지대 교수)
 - 여성연합 2011년 주요사업 발표(이구경숙 여연 사무처장)

2. 이사회 (여혜숙)

- 1) 1차: 2월 9일(수) 14:00~17: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안건: 제25차 정기총회 평가 및 회의록 인준, 3·8여성대회 계획
- 2) 2차: 5월 3일(화) 14:00~17: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교육: 한국여성운동과 국제연대-UN Women과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 대응 (발제-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 안건: 5월-8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2012년 젠더의제 리뉴얼의 건 외
- 3) 3차 이사회 및 수련회: 8월18일~19일(1박2일), 울산 꽃바위문화관
- 정책도의: 2012년 선거시기, 여성연합 복지국가 운동의 방향과 내용, 2012 총·대선 시기 여성운동 대응 및 여성정치운동의 방향
- 안건: 9월-11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2012 총·대선 시기 여성운동의 대응 방향
- 4) 4차: 11월 8일(목) 14:00~17: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정책도의: 한미FTA(발제-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10·26 재보궐선거 의미와 평가
- 안건: 11월-12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2012년 제26차 정기총회 준비의 건, 2012년 3·8여성대회 관련 논의의 건,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이사회 평가 및 계획 논의의 건

3. 통일평화위원회 : 위원장- 여혜숙

- 1) (가칭)여성평화행동기획단 회의: 4월1일(금) 10:00~12:00,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4.12 세계군사비 축소 행동의 날"논의
- 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획회의: 4월 21일(목) 14:00, 4월 26일(화) 14:00
- 3) 한미SOFA개정논의: 10월19일(수) 13:00~,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4. 조직교육위원회 : 위원(김정수 공동대표)

- 1차: 3월 16일(수) 14:00~17:00,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안건: 2011년 사업계획 공유, 제안

5. 정책기획위원회 : 위원(통일평화위원장, 여혜숙 상임대표)

- 1) 임시정책위원회 : 5월 3일(화) 11:00-14:00, 여성미래센터 5층 미대방
안건: 전대정책리뉴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3개년 계획 의견 수립
- 2) 2차: 2011. 5. 20(금) 11:00~, 여성미래센터 5층 미대방
안건: <복지국가와 돌봄포럼>진행내용 공유, 강용석 국회의원 제명추구 활동 제안 및 참여요청, 근거산점 대응활동 계획, 2012 총선대응 방향 논의를 위한 일정 확정
- 3) 총·대선 대응 방향 집중 회의: 7월 6일(수) 9:00-10:30

6.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 1) 4/1(금) 14:00~ 여성미래센터 (김선량 참석)
- 2) 6/1(수)-6/2(목) 제주 (정경란 참석)
- 3) 9/1(목) 14:00~ 여성미래센터 (김선량 참석)
- 4) 11/3(목) 11:00~ 인사동 목카페, 목촌마을 탐방 (김선량 참석)

7. 3·8여성대회

- 1) 기획회의 : 김선량 참석
- 2) 제 27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 일시 : 2011년 3월 7일(월) 11:00-12: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내용 : 디딤돌·걸림돌 시상, 여성상 시상 및 행복 장미 퍼포먼스
 - 참석 : 김선량, 여혜숙, 정경란, 최안진경
- 3) 플래쉬몹 "Happy Women's Day" 과 거리 홍보전
 - 일시 : 2011. 3. 8(화) 12:00(명동예술극장), 15:00(강남역) 17:00(신촌 윙클백스앞)
 - 참석 : 김선량등 회원 9명

8. 여성미래센터

- 1) 운영위원회 : (여혜숙)
- 2) 입주단체공동체 회의 : 위원(김선량 총무)

9. 강용석의원 징계관련 대응활동(여혜숙, 김선량)

- 징계위원회 앞두고 징계처리요구 기자회견
-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참석 권유와 징계처리 압박활동(6/17)

- 8월31일 본회의 발의안 참석 및 기자회견

10. 2012년 총·대선 대비 전더정책 리뉴얼 사업(실경관)

- 1) 회의 및 워크숍: 4월 15일(금) 17:00~18:00, 여성미래센터 5층 대禮堂
- 2) 60개 과제평가 및 전더정책 리뉴얼 과제발굴을 위한 1차 워크숍: 11/23(수) 18:00~21: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禮堂
- 3) 60개 과제평가 및 전더정책 리뉴얼 과제발굴을 위한 2차 워크숍: 12/28(수) 13:00~18: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禮堂

11. 살림정치 여성행동

- 운영위원회 (여혜숙): 9/20(화), 10/10(월), 11/4(금), 11/14(월), 11/24(목)
- 창립회원총회 및 창립마당: 10월5일(수) 13:00~15:00, 여성 이룸센터 이룸홀(여혜숙, 김선영, 최안전경)
- 임시총회: 12월 29일(목) 14:00~17:00, 살림이제단, 정관세정, 공공대표·운영위원 선출 (여혜숙 운영위원 사임)

7-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정책위원회 참고

7-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시민사회연대회의 신년하례식

- 2011년 1월 4일(화) 15: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참석: 조영희
- 내용: 각계덕담 나누기 및 신년 메시지 낭독

2. 총회

- 3월 25일(금) 15:00~, 흥사단 강당
- 참석: 여혜숙

3. 창립 10주년 심포지움과 후원의 밤

- 6월 9일(목) 14:00~19:00, 고려대학교 국제관2층 국제회의실
- 주제: 시민운동,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여혜숙 참석)

4.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정경란)

(1) 시민사회단체 평화워크숍 “평화, 시민과 소통하다”

4월 27일(수) 15:00-16:30, 세교연구소

- ‘2012 평화의제와 여성참여’ (발표: 정경란)

(2) 5월 25일(수)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회 (참석: 정경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주민과의 연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회의’
결성 결정

(3) 시민사회단체 평화운동 3차 워크숍

7월21일(목) 16:00-20:00, 세교연구소 주재- 2013년 계획과 시민평화운동

참석: 여혜숙, 정경란

(4) 오픈 토크런치<평화상상 콘서트>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 유괴

10월 28일(목), 19:00-21:00, 하자센터 하하하이홀, 참석: 여혜숙, 정경란

(5) 시민평화포럼 영어소책자

『Citizens' Dialogue on Peace-2011 Report on the Korean NGOs' Peace Activities』 중 “South Korean Women's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원고 작성(정경란)

7-1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및 여성본부

1. 총회: 3월 22일(화) 16:00-, 덕범기념관 (여혜숙, 정경란 참석)

2. 남측위원회

○ 운영위원: 여혜숙, 공동집행위원장: 정경란

운영위원회: 여혜숙, 정경란 참석

상임운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회의, 집행위원회: 정경란 참석

- 5/23(월) 14:00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토론회” 토론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홍, 정경란(토론)

- 5/24(화) 11:00 6.15 운영회의 한국노총, 여혜숙, 정경란

- 5/24(화) 10:00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종교, 시민사회,
정당 공동 기자회견”,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 여혜숙(기자회견문 낭독), 정경란

- 6/12(일), 14:00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 한마당 ‘손맞잡고
6.15’, 보신각, (여혜숙, 정경란)

- 6/15(수) 09:30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 불허에 대한 기자회견(통일대교) 여혜숙, 정경란(사회)
- 6/15(수) 11:00 11돌 기념 평화통일 민족대회, 임진각 망배단, 여혜숙, 정경란
- 6/28(화) 17:00 6.15 행사 평가 모임, 민화협, 정경란
- 7/18(일) 15:00 6.15 공집장 및 인천본부 집행위원장 회의, 인천 통일민주협의회 사무실, 정경란
- 7/19(화) 상임운영위, 민화협, 정경란
- 8/11(목) 14:00(민화협), 8/24(수) 14:00 (민화협), 집행위원장 회의 정경란
- 8/25(목) 12:30, 참여연대 느티나무 집행위- 정경란
- 8/29(월) 17:00 운영위, 백범기념관, 여혜숙, 정경란
- 8/29(월) 17:00 남북토론회 <일본의 과거 청산과 독도문제>, 백범기념관, 여혜숙, 정경란
- 9/3(월) 14:30(인천본부 사무실), 9/15(목) 14:00(민화협) 집행위원장 회의-정경란
- 9/20(화) 17:00 6.15 공집장회의, 민화협, 정경란
- 9/22(목) 12:00 10.4 선언 4돌 평화축전 관련 회의, 인천 미래카페, 정경란
- 9/27(월) 15:00 6.15 남측위 집행위, 서울대학 병원, 정경란
- 9/29(수) 6.15 상임운영위, 정경란
- 10/4(화) 11:00 6.15 남측위원회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 봉쇄 규탄 기자회견, 정부청사앞 (사회:정경란)
- 10/4(화) 17:00~21:00 10.4 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 준비 및 참가 (인천 문화예술회관) 여혜숙, 김정수, 정경란
- 12/1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설명서
- 12/21(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조건을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에 발송

3. 여성본부

- 공동대표-여혜숙, 공동집행위원장-정경란

(1) 총회: 3월 22일(화) 13:00~15:00, 여성미래센터 (조영희, 여혜숙, 정경란, 김현희 참석) ; 여혜숙대표-여성본부 공동대표, 정경란-공동집행위원장, 사업감사-조영희
2011년 계획과 예산 결정

(2) 대표와 집행위원장 회의: 여혜숙, 정경란 참석

- 5/12(목) 11:00-13:30, 여성미래센터, 총회어임사안과 6.15준비상황 검토 및 논의
- 8/2(목) 11:00 장소:참여연대 1층 카페
- 11/15(화) 14:00-15:00,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남북여성간담회 준비 건
- 12/20(화) 16:00, 여성미래센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조전 및 조문 관련 논의, 2012 여성본부 사업 평가 및 총회 준비 등

(3) 남북여성교류 사업

① 남북여성공동행사 추진 및 결의문 발표

- 11월 5일 : 615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남북여성평화연단> 제안
- 11월 21일 : 615남측위 여성본부, 남북여성평화연단 성사를 위한 통일부 장관 면담 제안
- 11월 29일 : 통일부, 615남측위 여성본부 방문불허통보
- 12월 2일 : 615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평화와 민족대단합을 위해 여성이 앞장서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공동문건을 내지는 제안을 함
- 12월 14일 오전 10시 : 615남측위 여성본부와 615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공동 여성결의문 [남북여성들이 앞장서서 분단과 대결을 넘어 평화의 동양의 시대를 열어가자!] 동시에 발표

②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활동

- 12/20(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성명서 발표
- 12/21(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조전을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에 발송
- 조문단 추진 : 615 남측위를 통해 조문단 추진했으나 무산됨

(4)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과장 간담회

- 12월16일 12:00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과 오인 615 여성본부, 어연, 민화협, 어협 실무자와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과 남북여성교류 관련 협력 방안 등 논의

4. 기타:故박용길 장로 거래장 추진위원회 활동

- 615 남측위원회가 故 박용길 장로 거래장 추진위원회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가하

기로 결정.

고문: 이현숙/공동위원장: 여혜숙, 윤수경/조직위원: 정경란/장려위원: 김정수, 강순원, 박유희, 윤수경, 정경란

- 9/25-28 장려위원회 관련 활동
- 9/26 9:30故 박용길 장로 장례위원회 준비위원회 회의
- 9/27 19:00故 박용길 장로 추모의 밤
- 9/28 9:30故 박용길 장로 장례식, 한신대 대학원 예배실,
참석: 이김현숙, 여혜숙, 강순원, 윤수경, 정경란
하관예배 참석: 정경란

7-1-5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 여성위원장: 여혜숙 -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참석

1. 경기 대의원회: 3월 24일(목) 14:00, 덕범기념관 대회의실
2. 집행위원회 (월1회)
3. 회원단체 간담회
8월 30일(화) 10:30-12:30 "통일교육 활성화와 민화협 의 과제", 여혜숙-김선혜 참석
4. 후원의 날
9월 1일(목) 17:30-21:00, 세종홀, 김정수-여혜숙 참석
5. 여성위원회
 - 총회: 4월 11일(월) 11:00-, 민화협 사무실
 - 여성평화 강연회 : 5월 20일(금) 14:00-16:00
사회: 여혜숙, 강연: 박현선 "북한 경제의 중심에 선 북한여성", 정경란-안병선 참석
 - 회의: 10월 6일(목) 11:00-12:30, 하반기 여성위 사업계획-11월2일(수) 평화기행
 - 여성평화기행: 11월 2일(수) 원원지역, 문경아외 5명 참석

7-1-6 정신대대책협의회

1. 총회: 2월 15일(화) 16:00-18:00, 여혜숙 참석
2. 수요시위
 - 일사: 5월 4일(수), 사회-이권명회, 김정아 외 8명 참석

- 1000차: 12월 14일(수) 11:30~13:30 김정아 외 6명 참석

7-2 사안별 연대

1) UAE 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2월 8일(화) 11:00~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주최단체: 참여연대,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평화여성회, 한국어성단체연합 등
* 영어 성명서 연명

2) 일본 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추모와 연대의 밤, 다시 믿음' 문화제: 3월28일(월) 19:00~21:30, 보신각 앞
(사회:이혜숙)

3) 대화와 소통(인도적 대북지원을 대화와 소통)

○ 목표: 2011년 5.24조치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완전 중단되고, 동시에 북한의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알리고 정부에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촉구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과 소통>' 모임이 발족하게 됨

○ 김정수 공동대표 운영위원 활동

○ 평화여성회의 참여자: 김선량, 김성은, 김정수, 김지영, 박수선, 이현숙, 정경란, 정현택, 최안진경

(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과 소통> 발족식

- 일시: 2011년 6월 8일(수) 19: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 참여: <대화과 소통> 참여자 약 60여명 참석

- 프로그램

인사말: 오재식(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이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고문)

<대화과 소통> 경과 및 사업계획 보고 발표: 황윤옥(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대화과 소통> 발족 선언문 발표: 박창일(평화 3000 운영위원장)

대정부공개질의서 발표: 정현택(참여연대 공동대표)

국제사회 호소문 발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참석자 전원 페이스 릴레이 선언

(2) 활동

① 대북인도적 지원의 재개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페이스 릴레이 선언(통일뉴스의 대너 http://blog.naver.com/humanist_365)

② 인도적 지원 정상화 캠페인(6월8일-6월17일 오후 덕수궁 정문 앞)

③ 북한영유아를 위한 밀가루지원(대화와 소통 명의) 2008-2011년 8월 17일(수) 개성 방문 전달

④ 밀가루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평양, 사리원방문-2011.9.20-9.21 (대화와소통 운영위원 등 12명 방문, 평화여성회 김정수 공동대표 참여)

⑤ 2011년 국정감사활동 & 5.24 조처 이후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보고 자료서 발간(최재성의원실 지원)

⑥ 평화상상 2012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 : 평화상상콘서트 무대행사
* 평화세미나 1 : 주제-서로를 살리는 인도적 지원, 평화로 살리는 한반도 *

일시: 2011.10.27(목) 16:00-18:00

장소: 하자센터 세미나실

발표: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 사무총장, 김정수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등

⑦ 지자체의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활동: 인천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서울시 등 방문하여 지자체장 등 면담 & 지원활동 제안

4)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1) 제주 해군기지반대 여성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11년 6월 1일(수) 15:00, 장소 : 제주 강정마을 공사현장, 발언: 정경란

(2) '평화의 배' 참여, 7월1일~7월2일, 여혜숙-이락호 참여

(3) 대표자 회의: 7월 13일(수) 10:00, 참여연대, 여혜숙 참석

(4) 기자회견: 7월 13일(수) 11:00, 참여연대, 생명서 낭독-여혜숙

(5)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평화인사들의 기자회견

2011년 7월 28일(목), 참여연대, 사회: 정경란

(6) '구럼비 겨안기 국민행동 선포식과 평화비행기 1차 사업 설명' 위한 서울과 제주 합동 기자회견

2011년 9월 1일 (목) 14:0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참석: 정경란

(7) 강경마을 강제전압 규탄 기자회견, 9월2일 14:00 정부종합청사 앞,

총리실 항의서한 전달: 정경란, 최안진경· 김은희참석

(8) 평화비행기 참여, 9월 3일~9월 4일, 여혜숙 참여

(9) 제주도 강경마을 갈등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9월 20일(화) 10:3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여혜숙 참석

5) 소파(SOFA) 관련 활동

- 10/10(월) 11:00 동두천 여성생 관련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미대사관앞)-여연, 전국여성연대, 평화여성회 등 공동 기자회견 (여혜숙, 정경란)

- 10/10(월) 성명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으로 여성인권 보호하라' 작성, 단체 연명, 영문/일문 번역 의뢰 및 국제사회 배포-GPPAC 네트워크 영문, 일문 배포, 피스보트 일본 단체에 배포, 아시아인권위원회와 <http://www.asiamn.com> 영문 배포, Karin Lee, Cora Weiss, Women and News Network 담당. (정경란)

- 10/13(목) 15:00-16:00 미대사관 앞 1인시위(정경란)

- 10/19(수) 13:00 소파 관련 여연과 협의, (여혜숙, 정경란)

6) 교육개혁100인 위원회, 서울시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여혜숙

7-3 국제 연대

1) 7/12 대북인도적지원 영문호소문(연대와 소동) 발송 - 정경란

-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에서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올림.

- Women's News Network에서 호소문을 500 UN agencies and affiliates에 보내고 WNN 홈페이지 Opinion (op-ed) page와 Google News에 보내겠다고 연락함.

- peacespace update된 원고 요청-대화와 소동에서 국제사회에 보낸 호소문+현재까지의 상황 update된 것(일가루지원과 모니터링 포함)을 peacespace blog에 기고(김정수)

- wilpf 워싱턴지부장 Joan Darake와 Global Fund for Women의 Christin Ahn이 연대인지를 보내음

2) GPPAC(무장갈등예방 세계시민사회연대) 활동

- (1) 동북아시아지역운영회의 참가
 -일시: 2011년 3월28일 - 3월 29일
 -참석: 정경란 정책위원장
 -장소: Foreign Expert Building, Beijing

프로그램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Steering Group Meeting
 28-29 March 2011, Beijing PR China

28 March (Mon)

Session I: Opening

- | | |
|---------------|--|
| 09:00 - 09:15 | Welcome and Opening (Yoshioka, Huang) |
| 09:15 - 09:45 | Introduction to participants, meeting objectives, procedures (Joyce) |
| 09:45 - 10:15 | International GPPAC update (Yoshioka, Hellema) |
| 10:15 - 10:45 | RSG update incl. delegations, Mongolia, NARPI etc. (Joyce) |
| 10:45-11:15 | Coffee break |

Session II: Focal Point Updates

- | | |
|---------------|---|
| 11:15 - 12:45 | Focal Point Updates (8 x 10 min, Facilitator Au or Kostyuk) |
| | 정경란 발표 |
| 12:45 - 14:15 | Lunch |

Session III: Korean Peninsula Reports

- | | |
|---------------|---|
| 12:45 - 15:45 | Follow up discussion on Yeonpyeong incident, GPPAC activities, respective outlooks (Facilitator Yoshioka) |
| 15:45 - 16:15 | Coffee break |

Session IV: Regional Planning

- | | |
|---------------|--|
| 16:15 - 18:15 | Introduction to GPPAC NEA Strategic Planning (Joyce) |
| 19:00 | Opening dinner |

29 March (Tues)

Session V: Regional Planning Cont.

09:30 - 10:30 (Facilitate Shen)	Detailed planning Dialogue & Mediation activities
10:30 - 11:00	Coffee break
11:00 - 12:00	Detailed planning of Security activities
12:00 - 12:30	Planning of other activities eg Peace Education (Reg Sec)
12:30 - 14:00	Lunch

Session VI: Future Steps

14:00 - 14:30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Plan
14:30 - 15:00	Future process/stages explanation (Reg Sec)
15:00 - 16:30	Free discussion (Yoshioka)
16:30 - 17:00	Coffee break
17:00 - 17:20	Statement from all participants
17:20 - 17:30	Closing Remarks (HH)
19:00	Closing dinner

- 내용

- ① 10개 도시 포럼포인트가 참석하고 북한에서 최초로 GPPAC 모임에 참가. (조선평화위원회 서기장 류경일, 서기 김종훈)
- ② GPPAC 2011-2012년 계획 논의하고 향후 2년간 예산 8만유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 포럼포인트에서 제기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원 결정할 예정이다.
- ③ GPPAC 서울 포럼포인트 관련하여 발표하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북측 참가 요청하고 참가 가능성 여부 확인하였음. 북한의 참가는 불투명함.
- ④ GPPAC 동북아 네트워크가 향후 다루어야 할 주요 주제를 결정함. 대화 및 중재(민간6자회담과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국제적으로 cross cutting issue인 전대를 다루기로 함.
- ⑤ 내년 GPPAC 운영위 블라디보스톡에서 5월 또는 6월에 개최 예정.

- 기타 ① GPPAC 동북아운영위 참관기 프레시안 기고(4/3) ② 통일부 사전/사후 보고서 제출/ 통일부 관계자 만남(4/8)

(2) 4/12 GPPAC 사무국에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계획 보냄

(3) 5/2 GPPAC 2012년 예산에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지원요청 편지 발송

3) IFOR(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WPP(Women Peace Makers Program - Asia Region Consultation Meeting

- 일시 : 2011년 6월 27-29일
- 장소 : Bukal ng Tipan, Taytay, Rizal, in Manila, Philippines.
- 참석 : 김정수 공동대표
- 내용 : ① 아시아지역혐의모임은 IFOR 여성평화활동가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지적 & 적극적 비폭력 평화활동가(Asian gender-sensitive active nonviolent activists)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아시아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회였음. ②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네팔 등의 아시아 지역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참석하였고, CSANV(Gender Sensitive Active Nonviolence)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Sub-region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실행위원회(일명 Mother Board)를 구성하였고, 동북아지역을 대표하여 김정수 공동대표가 실행위원으로 참석하기로 함. ③ 이 협의회 기간 동안 필리핀여성들이 UNSCR 1325 국가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필리핀 의회와 정부가 수용하고 현재 어떻게 이행방안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발제가 있었음. ④ 향후 WFP CSANV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에서 워크샵으로 진행될 예정임.

조직개편안

갈등해결센터를 평화여성회 부설기구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승인바랍니다.

<논의배경과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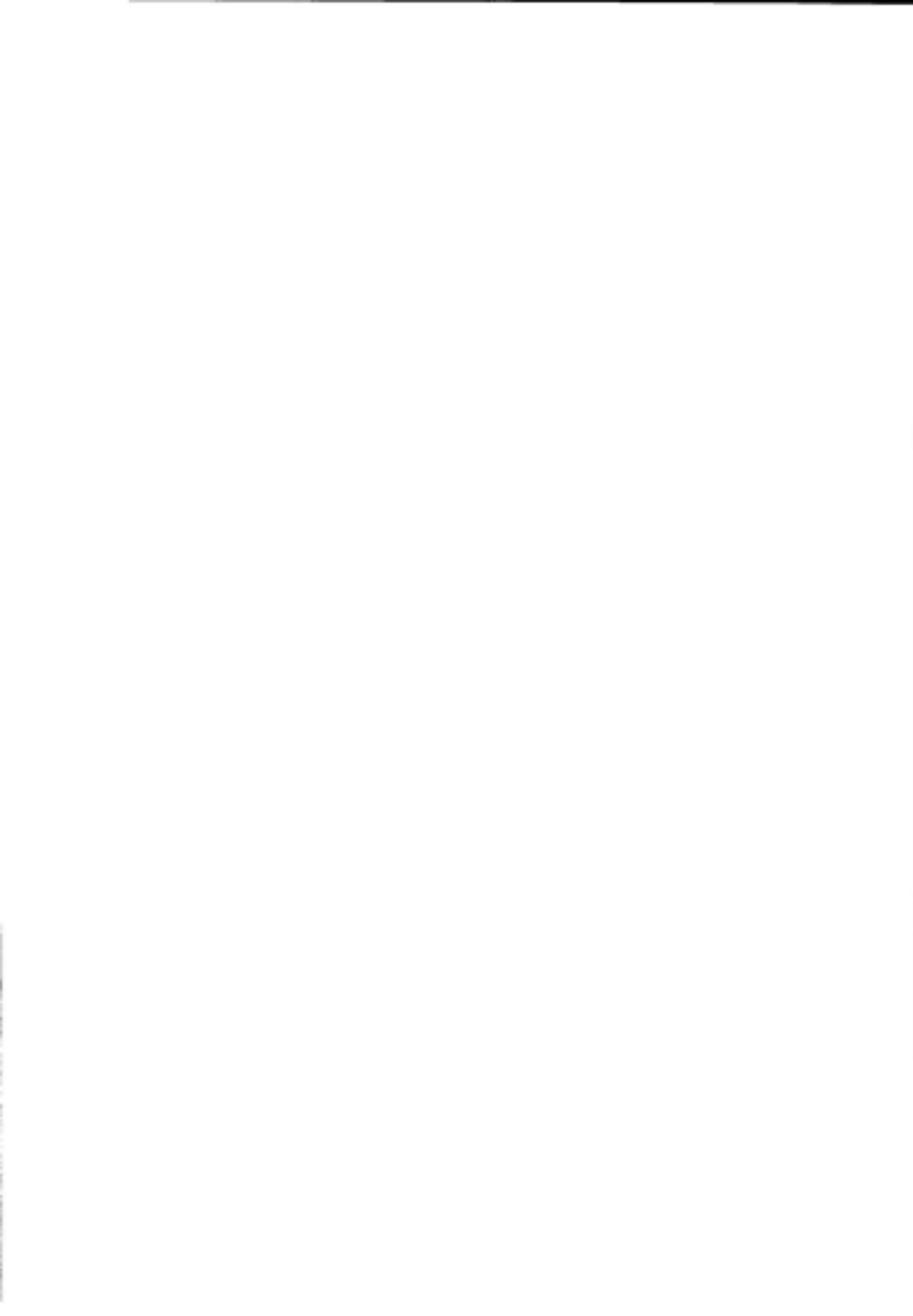
- (1) 2011년 총회를 앞두고 3차 총준위에서 "조직의 방향은 현실 여당에 맞게 조직을 재편할 필요에 따라 갈등해결센터는 그 활동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설기구로의 전환을 2011년 동안 연구 모색하기로 함"
- (2) 2011년 7월(6차)운영위원회에서 4호 안건으로 "갈등해결센터 부설기구 관련 논의 과정 계획"하며 부설기구 관련 논의를 위해 논의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하다.
- (3) 부설기구논의팀 구성(김선혜, 김정수, 박수선, 여혜숙, 이덕경, 조영희)하여 4차 회의까지 진행하고, 총준위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안건 올림.



2012년 사업계획안

I. 2012년 사업방향안

II. 2012년 사업계획안



I. 2012년 사업방향(안)

1. 사업기조 (배경 & 지향점)

2012년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창립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1997년 3월 말 창립된 평화여성회는 남북여성 최초의 민간교류의 문을 연 남북-일본여성들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포럼회"(1991-1993, 동경-서울-평양-동경 개최)를 준비하는 실행위원회를 전신으로 하여 전문적 여성평화운동 단체를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소식을 접한 남한 여성들은 1997년 초부터 "밥 나누기, 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벌이며 북한영유아 지원을 위한 모금을 하였고 이것이 바로 평화여성회의 창립과 더불어 시작된 첫 사업이었다. 지난 15년간 평화여성회는 남북여성교류, 반전평화운동, 평화교육과 갈등해결교육, 일상의 평화만들기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성평화운동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한국사회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 실천을 통해 확장시켜왔다.

평화여성회는 지난 15년간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여성들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여성들의 활동을 이끌어왔고, 인도적 위기에 처한 북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활동 역시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준비작업을 거친 후 2008년부터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여성들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또한 정부와 평화 & 시민단체 여성들 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Track II 활동을 강화하고 연대하는 지속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를 통해 분쟁지역에서의 여성들의 평화형성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UNSCR 1325)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갈등해결센터의 갈등해결교육은 사회갈등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대화와 조정과 같은 갈등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평화문화 확산에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갈등해결센터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조정, 모더레이션,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피해-가해자 대화모임, 회의 진행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를 적용하는 교육과 실천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갈등해결센터는 한국사회에서 평화적 갈등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적용을 통해 그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평화여성회의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또한 촉박한 여성평화 분야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여성평화운동사>와 연구지 <여성평화>는 여성주의적 평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군사주의 문화와 젠더적 관점이 수용된 여성평화주의 연구의 주제들을 발굴하여 이를 여성평화운동의 한 분야로 확대시켰다.

2012년은 평화여성회의 창립 15주년 뿐 아니라 4월 총선과 12월 대선과 같은 양대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와 평화통일운동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대결적 정책을 고수하고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현실에서 다자적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과 정책이 부재할 때 어느 정도로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전쟁의 국면과 위기를 초래하는지 경험하였다. 올 해는 한국의 양대 선거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와 지도력 교체 등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앞날을 결정할 전환의 시기이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은 지난 수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와 정세불안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켜야 하는 더 큰 과제를 남겨주었다. 아울러 지난해 3.11 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한반도비핵화를 지향해온 여성평화운동에 핵무기와 핵발전소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를 지향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었다. 한편 한국사회의 갈등과 학교폭력 등 사회적 평화 역시 여성평화운동과 갈등해결,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2012년 평화여성회는 안팎의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제 뿐 아니라 갈등 해결을 통한 우리사회와 학교와 지역 등 다양한 영역의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확산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한민도 격동에 휩쓸리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한국사회의 평화 역시 언젠가 비폭력의 갈등해결문화의 확산을 촉구하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2012년이라는 시대가 주는 책무의 무게를 여성평화운동은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평화여성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독자적으로 혹은 연대를 통해 꾸준히 해 나갈으로써 여성들의 평화형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평화의 목소리와 관점을 우리 주변과 사회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2. 사업방향 & 방법

1) 한반도 위기 대응 긴급 여성평화행동을 전개한다. 또한 2012년 총선거 대선 양대 선거를 맞이하여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평화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의 한국이행방안 채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핵무기와 핵발전소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의 핵 없는 세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 방법 : 한반도 위기 긴급 대응 평화행동, 통일, 외교, 안보, 국방분야에 대한 정책제시,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주제: 핵 없는 세계와 동북아 여성의 삶), 여성평화포럼 진행, 핵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한 생활 속의 달떡 & 반원전 운동,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 등

2) 전환기의 남북관계의 안정과 평화와 남북여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문화교류를 주도하고 위기에 처한 북의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남북여성 사이의 신뢰를 쌓고 협력을 추구한다.

○ 방법 : 6.15 남북위 여성분부를 통한 남북여성교류, 대북인도적 지원 등

3)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발달하고 유쾌한 여성평화운동의 영역을 발굴하고 확대한다

○ 방법 : 여성평화글쓰기 모임, 평화워크 모임, 회원한마당

4) 학교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며,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활동한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주체들의 평화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방법 :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토론회조정, 피해-가해자 대화 모임 등 평화커뮤니티 활동 강화

5) 지역사회의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와 사례 개발을 한다. 아울러 조정이나 토론회조정, 회의 진행,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피해-가해 대화모임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의 적용을 모색한다.

○ 방법 :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지원활동, 갈등관련 기구나 제도 현황 조사와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활동, 법원 화해권고위원 등 회복적 정의 활동 참여

6)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여성평화운동을 점검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방법 : 후원행사,

II. 2012년 사업계획(안)

1. 조직사업

1) 회의

(1) 총회

-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내용 : 2011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2) 이사회

-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구성 :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

-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구성 : 공동대표,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부설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4) 사무국회의

-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1) 정책위원회

○ 사업목표

- 여성평화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논의
- 평화통일사업을 실행하기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 모색
- UN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쉽 구축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여성 연대 강화

○ 구성

- 위원장: 정경란
- 위 원: 안정애, 여혜숙, 김정수, 조영희, 최안진경, 박천연
- 세미나팀: 여혜숙, 김정수, 조영희, 최안진경, 김급옥, 김은희, 정경란

(2) 국제협력위원회 : 2012년에는 구성하지 않음

3) 갈등해결센터

○ 소장:

- 운영위원회: 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박민혜,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조영희

4)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2012년에는 전년도에 중단된 연구원 활동을 다시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 원장:

2. 평화·통일 사업

1) 한반도 위기 긴급 대응 평화행동

북한 지도체계의 변화와 양대 선거, 동북아의 정세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감지되는 한반도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활동을 조직하여 실천한다.

- (1) 한·미, 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 (2)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 (3) 태평양 군비 동결운동 - 4월17일 군사비 동결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2) 남북여성협력사업(북한여성지원 사업)

남북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남북여성 개발 협력 담론 및 방법 구상,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작업, 정책개발 워크숍 등 향후 사업을 위한 기반 쌓기

3)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이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제시 활동

4)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주제: 핵 없는 세계와 동북아 여성의 삶
- 일시: 2012년 3월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 후원: 한국여성재단, GPPAC

5) 유연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촉구 활동

6) 여성평화포럼 : 평화통일 부분을 논의하는 인적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오피니언 그룹을 조직 & 운영함

7)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반핵, 탈원전 활동

8)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

3. 갈등해결센터 사업

○ 사업목표: 평화적인 갈등해결 확산을 위하여 교육·조정·심원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에 힘쓴다.

○ 학교평화커뮤니티 사업부문

- 1) 학교별 평화커뮤니티 사업: 평화교육, 조례조정, 가해-피해 대화모임을 학교별로 코디네이터가 추진(연간)
- 2)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7월중)
- 3) 평화교육, 회복적 학생지도 등 정책화 활동(연간)

○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부문

- 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 2) 진행전문가 훈련 2012년 10월 19일 ~ 20일
- 3) 조정전문가 훈련 2012년 9월 14일 ~ 15일
- 4) 회복적 정의
(1)회복적 정의 조정전문가 훈련: 2월23일(목)-24일(금) 대방동 여성플라자
(2) 화해권고 사례연구모임
- 5)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

○ 연구·정책 부문

- 1) 조례조정 모델의 실증적 연구
- 2) 사회갈등 영역: 갈등관련 위원회 조례 조사 활동
- 3)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대화모임 통계 및 자료화 활동

○ 연대사업 부문

- 1) 광명지역 평화교육 컨소시엄
- 2)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 3)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평화교육단체 연대

○ 회원활동

- 1) 다양한 활동 소모임
- 2) 웹진 발행 등 회원 소식 나눔의 정례화

○ 홍보활동

- 1) 홈페이지 관리 및 언론을 이용한 일상적 사업 홍보

4. 정보·홍보 사업

- 1) 홈페이지 관리, 온라인 평화활동 등
- 2) 소식지 발행

5. 회원 사업

1) 회원평화마당

- 목표 :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 계획 : 분기별로 계획하여 진행한다.

2) 여성평화글쓰기모임

- 목표 : 여성들의 삶의 경험을 쉽고, 편하게, 담백한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는 훈련을 한다. 평화적 글쓰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보고 글쓰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 공유 한다.
- 계획 : 월 1회 저녁 시간
- 대상 : 회원

3) 평화캘트모임

- 목표: 평화여성회 상징 걸개 만들기
- 계획 : 월 2회, 수요일 11:00~12:30

6. 재정 사업

- 1) 후원의 밤 : 2012년 6월을 예정으로 15주년기념행사와 함께 진행한다.
- 2) 함양 곳감판매

7. 창립 15주년기념 사업

- 1) 2012년 평화여성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 준비
- 2)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8. 연대 및 협력사업

1) 국내 상설연대

- (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임원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조직·교육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연 2회 주관 및 참석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시민분과
- (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표자회의, 시민평화포럼
- (6)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 (7) 미디어 수용자 주권연대

2) 국내 사안별 연대

- (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 (2)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3)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대항 시민행동
- (4)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3) 국제연대

- (1) GPPAC

4) 협력사업

- (1) 대전평화여성회

부 록

- 2011년 결산 보고
- 2012년 예산계획안
- 임원 인선안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현황
- 2011년 성명서



【 부 록 】 2012년 예산 계획안

2012년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예산(안)							
1. 회계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2. 총괄 예산계획							
수 입 부				지 출 부			
관	항	목	예산	관	항	목	예산
일반 회계	전월이월		4,957,635	일반 회계			
	회비	연회비	2,000,000		사업비	회의비	1,800,000
	후원금	정기회비	24,000,000			무설거기	5,654,604
		이사	14,000,000			평화통일사업	3,000,000
		개인	20,000,000			후원행사	7,000,000
		후원회	17,000,000			대평사업	6,000,000
		제정모금	8,500,000			연대사업비	4,120,000
		장가비	300,000			업무추진비	9,600,000
		자료제공비	100,000		운영비	인건비	24,000,000
		광수입	4,814,016			사무행정비	15,900,000
						업무추진비(10)	4,000,000
					여지금	자입금(11)	1,000,000
						예비비	1,000,000
					직접금	퇴직직립금	2,400,000
			남북교류기금	600,000			
	소 계		86,074,604	소 계		86,074,604	
특별 회계	여성재단	동북아회의	13,000,000	특별 회계	여성재단	동북아회의	13,000,000
	GPPAC	동북아회의	12,248,720		GPPAC	동북아회의	12,248,720
	소 계		25,248,720		소 계		25,248,720
총 계			111,323,324	총 계			111,323,324

2012년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예산(안)

1. 회계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2. 총괄 예산제표

수 입 부			지 출 부				
관	항 목	예 산	관	항 목	예 산		
일반 회계	건립이월	3,254,604	일반 회계	사업비	회의비	800,000	
	교부금(회비)	2,640,000			워크숍	13,000,000	
	후원금	23,700,000			복지사업	500,000	
	참가비	16,780,000			연대사업비	200,000	
	자료제공비	1,545,396			강사비	3,000,000	
	감수입	10,000			인건비	24,600,000	
				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00	
					복지후생비	2,000,000	
					홍산비	100,000	
					교육지원비	300,000	
					경조사비	200,000	
		도서인쇄비	700,000				
		준비	10,000				
		적립금	퇴직적립금	2,400,000			
	소 계	47,910,000		소 계	47,910,000		
특별 회계			특별 회계				
	소 계			소 계			
	총 계	47,910,000		총 계	47,910,000		

【 부록 】 임원 인선안

1. 경과

- 1) 2012. 1. 9(월), 제16차(제17차) 정기총회 3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11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및 감사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을 선출하기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근거 : 본회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내용 : 운영위원 5인, 운영위원회 추천 2인을 선출함

- 2) 2012. 1. 18(수), 2012년 제1차 이사회에서 2인의 인선위원회 참여 이사 선출
- 김정수, 조영희

3) 인선위원회 1차 회의

- 위원장 : 박수현 (갈등해결센터 소장)
- 위원 : 최안진경(광화여성회 운영위원), 김영진(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장), 정경란(정책위원장), 조영희(이사), 김정수(공동대표)장 포함 위원장 포함 총 6명
- 일시 : 2012. 1. 18(수), 15:00-16:00
- 논의결과 :
 - (1) 임기 만료 사임하는 이사: 강순원, 김진희 (2인)
 - (2) 당연직 이사: 차기 갈등해결센터 소장
 - (3) 연임 하는 이사: 김성운(이사장), 김지영, 박윤희, 전은주, 정경심, 한정숙 (6인)
 - (4) 사임감사 임기 만료: 진선미 (연임)
 - (5) 최대 2인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하다.

4) 인선위원회 2차 회의

- 일시: 2012. 1. 27(금), 13:00-13:30
- 참석: 박수현, 김영진, 정경란, 조영희, 김정수 (5인)
- 논의결과: 추천이사: 최순옥(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2. 인선(안)

구분	2011년 현재 (및중 정기이사)	임 기	비 고	인선(안) (및중 후보)
이사회	김성훈(이사장)	2009~2011(3년)	연임	김성훈(이사장)
	장순원	2009~2011(3년)	임기만료	
	김지열	2009~2011(3년)	연임	김지열
	김진희	2009~2011(3년)	임기만료	
	박윤희	2009~2011(3년)	연임	박윤희
	윤수경	2011~2013(3년)	해당없음	윤수경
	이낙호	2011~2013(3년)	해당없음	이낙호
	전운주	2009~2011(3년)	연임	전운주
	정경심	2009~2011(3년)	연임	정경심
	정현택	2011~2013(3년)	해당없음	정현택
	조영희	2011~2013(3년)	해당없음	조영희
	한정숙	2009~2011(3년)	연임	한정숙
	김정수	2011~2013(3년)	해당없음	김정수
여혜숙	2011~2013(3년)	해당없음 당연직(부설기구장)	김선희 최순용	
공동대표	김정수	2011~2013(3년)	해당없음	
	여혜숙	2011~2013(3년)	해당없음	
감 사	최재갑사 한국연	2010~2012(3년)	해당없음	
	사립감사 진선미	2009~2011(3년)	연임	진선미
감정해결센터	소장 박수선	2009~2011(3년)	신임	김선희
정책 위원회	위원장 정경란	2010~2012(3년)	해당없음	정경란
국제협력위원회				공석
부설 한국여성 평화연구원				공석

【 부록 】 평화여성회 정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명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임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견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

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계획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

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와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인물로 참여가 된다.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

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제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 이사회 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회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매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출석이사 파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체회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범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동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써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잠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지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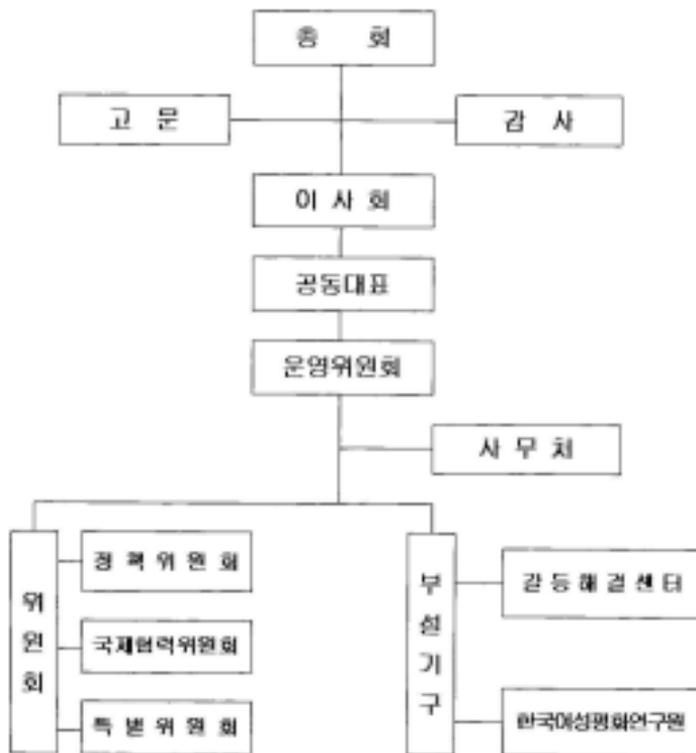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류 】 평화의상회 조직 현황



【 부록 】 2011 성명서 목록

날 짜	제 목
110114	[시민단체공동성명]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110208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110223	성차별 조사관 부당하고 규탄 여성계 기자회견
110228	"기 리졸브"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110301	92주년 3.1절 공동결의문(남북여성공동선언 무산에 관한 내용 포함)
110303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정부의 공식답변 촉구, 국정조사 실시하라
110316	故장자연씨 친필편지 관련 국과수의 발표에 대한 논평
110324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안
110328	강용석 의원 제명 촉구 여성단체 성명서
110412	'4.12 세계군사비축소 행동의날' 여성행동 - 중단
110412	제1회 세계군축의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110413	성명서-성희롱-성격비하 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의원제명
110504	정대협 수요시위 성명서 (광화여성회 주관)
110506	<논평> 국회 윤리특위 최초 성희롱 국회의원 제명안 통과를 환영한다
110519	군 가산점제 국방부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성명서
110524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
110524	5.24조치 해체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110530	성희롱 국회의원, 강용석의원을 제명하라!
110531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민족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 불허에 관한 논평
110601	<제주 해군기지 반대 여성계 선언문> 제주의 강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생명자유로 결결하는 곳이어야 한다!
110601	Korean women's stat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110607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개성 민족공동행사' 수용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문

날 짜	제 목
110608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110608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발족 선언문
110608	<대화와 소통>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정신에 호소합니다
110608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110608	Appeal for Food Assistance to the DPRK
110615	6.15 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 참가 불허 규탄 기자회견문
110615	[공동호소문] - 6.15공동선언발표 11돌을 맞으며 -
110624	논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110624	Comment on ' Draft Resolution Calling for the Adoption of the UN SCR 1325 National Action Plan' in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110713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호소문
110713	Statement of Appeal . We appeal to save Gangjeong!
110715	제주 강제연행규탄 기자회견문(영문)
110725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반대 기자회견
110728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국제평화인사 기자회견
110810	나쁜 주민투표(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기자회견문
110826	성명: 제주 강정마을회장 구속은 무력진압의 신호탄
110831	강용서 의원 제명 부결 규탄 성명서
110902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벌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110919	<남북해외 공동보도문>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 개최 대해
110920	제주해군기지 관동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평화선언
111004	<기자회견문> 10.4선언 발표 4주년, 정부의 민족공동기념행사 봉쇄에 대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입장
111004	<10.4 평화통일축전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북공동선언들을 적극 이행해나가자!

날 짜	제 목
111010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111010	<성명서> 불명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으로 여성인권 보호하라.
111010	駐韓米軍による10代の女性への性暴力犯罪に對する韓國女性団体の立場
111010	Statement of South Korean women's organizations on sexual crimes against teenage girls by U.S. military personnel in South Korea
111012	[선언문]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직집사과와 조속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한다
111019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운동네트워크 출범기자회견
111214	남북여성공동결의문
111219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관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명
1112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관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성명
111222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관련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보낸 조진

공동성명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불안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틈타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자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간의 회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로키(낮은 자세)로 진전시켜 가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정황들은 한일 당국간에 군사협정 논의가 이미 상당 수준 진척되어 왔으며, 현재 논의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본격적인 군사협정으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일간의 군사협정 체결은 그 수준이 어떠한지 간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일 간의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필연적으로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간의 군사협정은 미국이 동북아 군사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한일 군사협력을 통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군사전략이다. 이 같은 삼각동맹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의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 미일간의 합동 군사훈련에 이미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해외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이 한반도 유사사태 대비한 후방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연내 한일 양국이 체결하겠다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단순히 인도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일간에 군사협정이 역내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 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 같은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주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군대보유와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 20세기 아시아 전역에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 일본의 제국주의와 호전적인 군사행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해 온 장치가 바로 일본 헌법 9조이다. 이미 국제사회에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각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헌법 9조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일본과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며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도적 개정 시도를 지속해왔다. 이를 모르지 않는 한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명분을 주는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한일간의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역내 평화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일 군사협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이 초래할 동북아의 대립구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스스로의 운신 폭을 좁히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는 각 언론들이 한일 군사협정의 함의와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가 나서서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협정이 가져올 부작용 등을 밝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14일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통일맞이, 참여연대, 명덕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성명서>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2009년 12월 27일. 연말을 맞아 평화로운 휴일을 보내던 국민들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편성된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상 최대의 수출로 알려진 UAE 핵발전소 수주 성공은 물론 며칠동안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UAE 핵발전소 수주는 단지 한 개의 건설공사 계약을 파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그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중동에서 다양한 보목공사를 진행하던 건설회사 CEO 출신이라는 점이 UAE 핵발전소 수주와 함께 포장되었고, 수주 뒷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후일담과 축하공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400억달러 수주 보도 하룻만에 절반인 200억달러, 다시 186억달러로 줄어든 계약 내용. 군사적 협력을 둘러싼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지만,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라는 이름으로 이들 내용은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UAE 특전사 파병은 처음 정부의 설명과 달리 핵발전소 수주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UAE 특전사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목적과는 무관한 업무를 위해 국민의 군대가 해외로 파병되는 나쁜 사례를 만들었다. 소관 상임위원 국방위원회 심사는 물론 안전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일관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UAE 파병동의안은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본격 논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UAE 핵발전소 건설과정에서의 대출과 역마진(손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이야기해 온 '사상 최대의 건설 공사 수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UAE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총 건설비 186억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90-110억달러를 28년의 장기간동안 대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단면이다. 또한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한국과 UAE의 신용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익'을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외쳐온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생각할 때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 명산의 일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주 계약 어떤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으나, 정부는 그동안 계약 내용은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체 공개를 꺼려왔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14년만의 일이다. 많은 내용은 비밀에 붙여지고 국민은 그 내용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파병이나 건설 수주과정에서의 대출 문제처럼 UAE 수주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계약'의 내용은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안들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군의 파병과 국제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거액 대출과 손실 우려는 기밀에 속할 수 없는 내용이며, 명백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사안이다.

예초 이 계약은 환전을 비롯한 공기업 컨소시엄에 의해 진행된 계약이었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문제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제기된 대출을 둘러싼 의혹이외에도 상업계약 미제결 문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책임문제, 핵발전소 안전보장 기간 및 공기지역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등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국회가 적극 나서 UAE 핵발전소 수주 의혹을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그 결과 현 정부의 치적으로 삼고 있다면 더욱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역할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가 맡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상 최대의 건설 수주'라며 열광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파병으로 방산물자 2,006만 달러의 수출효과를 낸다는 주장은 파병과는 무관한 개별기업의 통상적인 수출 실적치였으며, 원전건설에 따라 10년간 11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 또한 산출의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다. 의혹은 가두고 숨기려고 할수록 커지고,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진실은 가까워진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UAE 핵발전소 수주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2.8.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발전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성차별 조사관 부당해고 급단 여성계 기자회견 -
 여성인권 포기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성차별조사업무 공백 사태 책임져라!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과행이 정점을 찍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작년 11월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인권위 과행과 무능하고 독선적인 현행권 위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바로 오늘은 근 10년 동안 탁월한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조사를 담당해온 강인명 조사관(이하 강 조사관)이 인권위를 떠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인권위는 차별조사와 강 조사관의 해고를 자행했다. 인권위가 그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해 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계약거부 사태는 부당해고나 다름없다. 강 조사관을 떠나보내며 인권위 앞에 서게 된 우리 여성 단체들은 강 조사관에 대한 불합리한 해고 뿐 아니라 성차별업무 공백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들을 생각할 때 유감을 넘어서 상당히 침痛的 심정이다.

인권위의 2009년 차별사건 접수현황에서 성희롱·성차별 사건은 전체 1,974건 중 453건(23%)이었으며, 이는 전체 차별 사건 접수건수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인권위의 조사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설립 때부터 함께 해왔기에 어느 조사관보다도 전문성을 지닌 강 조사관을 해고했다. 인권위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며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 앞으로 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에 과연 진정성을 잃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강 조사관의 해고는 결국 인권위가 성차별조사에 눈감겠다는 것과 다름없기에 여기 모인 우리 여성단체들은 향후 인권위의 행보가 더욱 우려된다. 강 조사관의 해고로 인해 야기될 인권위 차별조사 기능 및 역할의 공백을 과연 채울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채우고자 하는 의지나 어떤 대안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권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 취임한 상임위원이나 사무총장 등 최근 인권위 구성원을 생각하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성차별팀 5명 중 4명이 신규 인원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강 조사관의 공백으로 인해 여성·소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차별구제 역할이 약화되거나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직급의 현실에 우리 여성계의 좌절감은 더욱 짙 수밖에 없다.

인권위와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 한 자리의 들어오고, 그나마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보이게 노력하는 이들은 정작 내쳐지고 있다. 인권위에는 인권 교육과 정책이 없고 이제는 차별사안을 파악하고 분석할 사람도 없다. 인권위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인권위의 파행일로써 우리 여성 단체들은 국회와 현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현행 인권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인권위는 강 조사관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1. 업무공백이 빈번 예상되는 상차별 조사 업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1. 2. 23

기독교인회, 세계상용어머니추고여성공통회, 상대대분계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사회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인권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평화불안근여성회

"키 리졸브"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늘(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다는 군사훈련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다는 것을 꼭도해왔다. 이러한 반복된 실책이 남긴 명확한 교훈을 무시하고 어김없이 훈련을 강행하려는 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훈련의 규모와 성격도 예사롭지 않다. 작년에 불참했던 미국 항공모함이 또 다시 투입되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예비군 전력도 전방지역에 배치돼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특히 이번 훈련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명분으로 공세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전까지 개념계획으로 있었던 5029가 사실상 작전계획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침공에 해당된다. 키 리졸브 훈련의 핵심 목적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훈련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정부는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한미 양국 정부와 언론도 '북한발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키 리졸브 훈련 강행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단호한 의지(key resolve)'는 군사훈련 강행이 아니라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이 당시 한미 양국 정부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용단에 있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상호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이라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1년 2월 28일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사람들>

개혁자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나눔문화, 녹색연합, 연주소동당, 민주사회를위
한번호사모임, 비폭력평화물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제주군사기지지
외평화의실현을위한반도민대책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좋은벗들, 주한미군병력
감축운동본부, 진보선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평화평화
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마당,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총 23개 단
체)

92주년 3.1절 맞이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거대한 지향과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서 3.1절 92돌을 맞이하고 있다.

3.1절은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해온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전민족적인 반일애국항쟁이었다. 일본군경의 총검에 굴하지 않고 독립의 외침을 이어갔던 불굴의 투쟁모습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생생히 되살아나는 듯하다. 또한 청장년들과 학생, 노인들은 물론 여성들까지 모두 항쟁의 거리에 펼쳐 나와 외치던 “독립만세!”, “일제는 물러가라!”의 함성은 오늘날 우리들의 것전에 생생히 울리고 있다.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어느덧 한 세기 가까이 되어오지만 일본은 침략과 살인, 약탈, 그리고 수많은 우리 여성들의 존엄과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반성논거는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당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현실은 일본의 식민과 전쟁 책임에 대한 역사인식과 입장이 어떠한지를 명백히 보여주기에 더욱 개탄할 노릇이다.

우리는 3.1절 92돌을 맞으며 일본의 올바른 과거 청산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길을 앞장서서 열어나가고자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지난 세기 일본이 우리 여성과 민중에게 자행한 범죄에 대해 사회와 배상 등 문제해결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이후리 오랜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올바른 과거 청산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염원하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 세계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사진전시회, 증언집회 등을 통하여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다시금 이러한 끔찍한 여성폭력범죄가 그 어느 곳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여 남북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최근의 경제와 남북 당국의 강경한 입장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 성사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본이 수백만의 우리 청장년들을 강제로 징용, 징병으로 끌고 가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집단적으로 학살한데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약탈당한 수많은 역사유물과 문화재들에 대해서도 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일본이 계속하고 있는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전쟁 및 식민범죄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정부를 향해 더욱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전쟁과 식민 지배에 따른 문제를 교과서

기술에서 삭제하거나 미화하는 시도를 계속하며, 특히 중학교 교과서의 해설지도요령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각대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통해 한일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미래세대를 교육해야 할 의무마저 포기하고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일본정부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교육 및 정책적 조치를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최근 전쟁시기로 회귀하려는 듯 무력행위를 강화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본단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활동을 더욱 힘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지난 전쟁책임 조차 청산하지 못한 채 오늘날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와 '제외일본인구출'을 구실로 군사연습을 지속하며,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침략전쟁장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재무장을 통한 전쟁 시도의 길을 가려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일본의 무력증강과 군국주의의 부활을 합리화할 수는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각지에 뿌리박힌 침략의 역사를 재연하려는 의도밖에 해석할 수 없음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남과 북의 긴장구조를 이유로 한 경우 및 관련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협력 재검과 강화 등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그 어떤 행위도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남과 북이 통일의 의지를 모아 함께했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반드시 이행되고 계승되어야 할 것이라 믿으며,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내외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92주년 3.1절을 맞이하여 과거 역사에 대한 사회, 올바른 역사교육, 군국주의와 재무장의 포기를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3월 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KNCC 양성평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교여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교회전국연합회,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정신대연구소, 원불교여성회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국제적으로 선례없는 위험한 조건
정부의 공식 답변 촉구, 국회 국정조사 실시 재차 요구**

지난 2월 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UAE 원전 수주 계약 조건으로 특전사 파병과 역마전을 감수한 100억 달러 금융지원이 있었는지 정부의 의혹 해명과 함께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답은 긍정하고 재1야당인 민주당은 말로만 국정조사 주장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60년간 가동 보증 등'이 결정적인 계약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의혹이 일본 등 해외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첨부자료).

일본판 한 국내 언론사 기사내용에서 지식경제부는 원전수출에서 한국과 경쟁국 가인 일본 언론에 실린 기사들은 '전형적인 일본의 흔들기 전략'이라고 해버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UAE 원전 수주에 컨소시엄으로 결합하는 업체가 일본의 또 다른 기업인 도시마이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에 대한 소식이 일본 내 주요 일간지, 월간지는 물론 전문잡지에서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차원으로 무시할 수단은 없다.

특히, '60년 가동보증'의 경우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지난 50년간 개발된 핵발전소가 설계수명이 30~40년인데 비해 평균 가동시간은 23년에 불과했다는 점, 아직 건설 가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APR1400 모델에 대한 전수명 보증이라는 점, 사고와 고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비용을 향후 60년간 감수해야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100억달러 금융지원에 의한 억대 손해보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파격적이고 위험한 조건이다. 정부는 무책임한 '관계자'의 답변이 아닌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한편, 100억 달러 금융지원에 대한 억대 손해에 대해서 정부는 OECD 가이드라인이 있어 문제없다고 해명했는데 OECD 가이드라인은 빌려주는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빌리는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므로 긍정한 해명이다. 100억 달러 자금을 모으는 책임을 진 수출입은행은 국내금융사는 물론 국제금융사에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고금리로 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의 현물출자'와 '해외 플랜트 사업에 연금금 투입' 등 자금 마련을 위한 무리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 지금까지 제기된 UAE 원전수주를 둘러싼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원한

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약조건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대사업의 수주제약을 둘러싼 의혹인 만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알로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제 역할을 해주길 촉구한다.

2011. 3. 3.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평화비프리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파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과학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장 자연은 살아 있다

2009년 한 여성연예인이 죽음으로써 권력에 의해 짓밟힌 자신의 삶을 세상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경찰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혐의사실마저도 무시된 채 사실상의 살해자들이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뇌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의혹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장자연연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다시금 햇빛을 보게 되었다. 그간 장자연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사람들과, 그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를 안고 있던 국민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법과정의 진리가 마침내 드러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편지공개직후부터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편지 위조 조작현을 흘리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예측케 했다.

2009년 3월 17일 국과수는 '장자연 리스트'의 필적이 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으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미 장자연의 친필임을 입증한 문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필적의 진위에만 대달리는 현재의 행태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도 달은 못보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음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 장자연 사건의 초점을 흐려 사건을 다시 미궁에 빠뜨리려한다는 의구심을 일게 한다.

장자연사건의 핵심은 그동안 연예산업주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성착취' 등 반인권적인 만행을 고발하고, 국민 앞에 사회지도층인양 행세하며 추악한 범죄를 숨어서 저질러온 권력자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있다.

장자연은 살아있다. 그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몸통이 썩는 무수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한 그는 살아있다. 연기예술가를 지향했던 여성들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자들의 뉘우침과 아비함을 과시하지 않는 죄로운 사람들이 움직이는 한 장자연은 살아있다. 문화예술인을 쫓꾸는 수많은 여성들이 존재하는 한 장자연은 살아있다.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꺾야 하는데'라는 망언이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도 모자라 그런 사람이 굳건히 의원자리를 지키는 나라, 명예이 교육자이자 예술인인 대학총장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종'운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여성인 학자들이 당연한 사회인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이 땅의 수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불안 속에서 장자연은 결코 죽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故 장자연씨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라!

경찰에서 이미 2009년 당시 밝힌 혐의사실마저도 무시한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특검이 실시되어 사건의 진상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2.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니지먼트 관련법을 제정하라!

관행이라는 비명하에 예술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메니지먼트관련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의 생명력은 꽃샘추위보다 강하다.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회복을 추구한 **장자연**은 권력보다 강하다. 고인을 죽이고 '장자연사건'이라는 사회문제마저 **암매**강하려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권력이 기승을 부릴수록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햇불**은 열기를 더할 것이다.

2011.03.16

문화계상 이프토피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
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
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연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세계
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올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플랜드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
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성민우회 미
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외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침묵을깨는아름다운사람들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 기자회견문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안

천안함 침몰 1주기를 맞아,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희생된 한주호 준위, 그리고 98급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유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갖은 말 바꾸기와 과도한 정보통제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선거 등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조사결과는 과학자들의 반론에 부딪히거나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북한 외에 주변국들도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결렬된 남북군사회담 실무회의에서는 연평도 피격사건과 더불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1주기를 맞는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우리사회 내부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 측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민족의 비원과 아울러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항상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남북간 그리고 주변국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남북대화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고, 심지어 남한 측이 대화를 기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제발방지 대책,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 방안을 두루

논의하는 것은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기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는 입장 때문에 실무단계에서 좌초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남측할만한 추가조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염두에 둘 때, 천안함 진상조사 작업은 지나치게 단기간 이루어졌고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뢰할만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둘러싼 남북간, 주변국간 논란과 이견도 좀허져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조사결과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부는 천안함 사건 관련 1차 자료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왔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감감독위원회에 참여한 3개 중립국 대표들도 유엔에 회람된 문서를 통해 한미당국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과 체결한 정보비공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정보통계를 완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청구한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역시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1.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들이 마치 국론분열을 야기하여 안보를 위협하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홍보하는 것 역시 자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천안함 관련하여 제기되는 합리적 의문점들을 탐사보도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 국민의 합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서명인>

장남훈(교수노조 위원장), 장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박병찬(한겨레 논설위원), 권경애(변호사),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광준(신부, 대한성공회교무원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근식(경남대 교수), 김기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상근(목사, 통일맞이이사장), 김석봉(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연철(인제대 교수),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제남(녹색연합 녹색에너지센터 위원장),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진욱(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창국(변호사), 김철준(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노정현(연세대 명예교수), 문성근(국민의 명령 대표), 민정환(변호사), 민만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박석순(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전 이사장), 박우경(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창일(신부, 평화3000운영위원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석학순(대중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상유보(원로 언론인, 전 방송위 부위원장), 심성보(홍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심재환(변호사), 안병욱(카톨릭대 교수), 양길승(녹색평원 원장), 양창근(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여해숙(평화불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오재석(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우장근(한국기자협회장), 우희중(민주화를위한한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윤준하(6월 민주포럼 대표), 이강태(전 국민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덕우(변호사), 이명순(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병(한겨레대일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용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재욱(생명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이재정(전통일부장관, 전국연참여당대표), 이한진(변호사), 이장복(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철섭(한국FD연합회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해학(목사), 임재경(원로 언론인, 전 한겨레 부사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석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회장), 정강자(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정명수(통일맞이 집행위원장), 정연규(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대욱(인하대 법학자), 정현근(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정현택(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조국(서울대 교수), 조문훈(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성우(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홍섭(한겨레 환경전문기자), 조화순(목사),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화(대한불교조계종 전 교육원장), 최민희(민주언론시민연합 전 상임대표), 최영도(변호사),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최은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허승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허준대(KYC 사무처장), 한명숙(전 국무총리), 한상희(전국대 법학과),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함세웅(신부,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장),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이상 97명

강용석 의원에 대한 심사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강 의원을 반드시 제명 조치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강 의원의 성희롱 및 성적비하 발언으로 충격과 분노에 빠진 아나운서들과 여성들, 그리고 온 국민이 그에 대한 징계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과정일 것을 거쳐 처리 될 것을 바라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강용석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과 강 의원을 반드시 '제명' 처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강용석 의원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작년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의원 징계안에 대한 비공개 진행을 결의함에 따라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심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마저도 강용석 의원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갖는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강용석 의원 징계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 할 수 있으므로, 강용석 의원 징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2.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현저히 훼손시킨 강용석 의원 제명을 촉구합니다.

강 의원의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풍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0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풍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품위를 훼손시킨 강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미달입니다.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가 강용석 의원에 대한 '처방'을 자문 의견으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 3. 28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유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함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회, 한국여성장기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공동선언문>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오늘(4월 12일)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군사비와 그만큼 커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0년 전세계의 총 군사비가 1조 6천억달러(약 1,900조원)에 이르렀고,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군사비는 150%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같은 군사비 증가 추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 30여개 국가에서 동시에 군축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데에는 이 같은 막대한 군사비 증액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기보다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만 합치더라도 2009년에만 약 8,894억 달러로 전세계 군사비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도 2009년에 비해 2009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각국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더 많은 군사비를 책정하고 많은 무기를 사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군사비가 이렇듯 과대 지출되고 있는 데 반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협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간과되고,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빈곤, 실업, 교육, 주거, 질병, 핵발전 등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 등도 매우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일례로 유엔이 설정한 세계빈곤과 개발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실현하는데 있어 세계군사비의 20%만 있어도 된다는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우리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사비를 늘림으로써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상호이해의 확대와 신뢰구축, 그리고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군사비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군사비 감축을 통해 시민의 우선순위에 정부재원이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세계,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창조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우리는 국방예산의 동결과 축소는 필수적인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봅니다. 각국의 상호신뢰 구축과 함께 군비지출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축소의 노력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협들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는 한국정부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군수산업의 육성을 추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군사기술이 민간기술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군수산업은 나라 안팎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인류의 평화로운 삶의 기반을 파괴합니다. 각국 정부는 군수산업 투자 정책을 재고해야 하며, 분쟁을 부추길 수 있는 무기 관측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세계 무기수입 국가 중 중국과 함께 2위의 무기수입 국가인 한국이, 군수산업 성장동력으로 삼아 무기수출 세계 7위 국가가 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집속탄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조약 등 비인도적 무기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준수하기를 촉구합니다.

1. 우리는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온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이든 미국의 남한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든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방위정책을 유지할수록 치명적인 핵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제안한대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핵무기협약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모든 당사국에 촉구합니다. 나아가 6자회담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할 보다 포괄적인 방안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위한 논의와 시찰할 것을 동북아시아 각국에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세계 최대의 무기고가 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과 군사동맹이 고착화되고, 군사적 계획들이 공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군비경쟁이 결코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았고, 도리어 군사위협을 빌미로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군사적 동기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더불어 제재식 위협의 감소와 군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적이고 다자적인 노력과 정책들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정부와 군 주도로 낡고 왜곡된 안보관을 주입시키기 위한 군사 안보교육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합니다. 우리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결과 적개심,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내면화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 다양성과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양을 기르는 평화교육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장에서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와 군대체험을 병자한 유사 군사훈련을 권장하는 조치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1. 우리는 군사적 긴장과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창출할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들이 군사안보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많은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의원 31인과 35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장기갑(민주노동당) 강기정(민주당) 강창일(민주당) 박정숙(민주노동당) 권영길(민주노동당) 김상희(민주당) 김성근(민주당) 김영환(민주당) 김유경(민주당) 김진표(민주당) 문학전(민주당) 박선숙(민주당) 박은수(민주당) 박주선(민주당) 백재현(민주당) 변제일(민주당) 신낙균(민주당) 유선호(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이미경(민주당) 이윤경(창조한국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이춘석(민주당) 권혜숙(민주당) 정세균(민주당) 조태숙(민주당) 조순수(진보신당) 최영희(민주당) 홍영표(민주당) 홍재형(민주당) 홍희여(민주노동당) (이상 30인)

<시민사회단체>

개혁자를 경계물넘어 강성연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연회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통북이평화교육기관(NARPI) 무기제로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생대지평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의친구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제주해군기지저지화평화의심현을위한법도민대책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박물관 푸름 한국이나 벨리스트센터(KAC) 한국어성당계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홍사단연속통일운동본부 (이상 35개 단체)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강용석 의원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한다.

오늘(4/1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지난해 성희롱 및 여성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최종의결이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갖춰야 하는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아 왔으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왔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번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는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심사결과가 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강용석 의원은 2010년 7월, 제 2회 국회의장대 토론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함께 한 화석 자리에서 강대희방이 아나운서인 여학생에게 “다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심각한 성희롱, 성적비하발언을 했다. 이는 피해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 아나운서 직종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한 것으로서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 행위이다. 또한 강 의원의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풍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풍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풍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다.

이와 같이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품위를 훼손시킨 강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며 국회의원직에서 반드시 제명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4/13)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강용석 의원 징계심사 최종의결회의에서 반드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강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안을 처리하여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계 석구 감싸기’식 징계심치라는 윤리특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지도층의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2011. 4. 13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을터, 성대대문체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학교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회전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어버이날 맞이
제968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1년, 해방 66년이 됩니다.

일본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침략전쟁을 치르면서,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성노예로 유린하고, 전쟁터에서 유기와 학살을 서슴지 않았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일본정부는 여전히 반성과 공식적인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하여, 한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었음에도 김경 승인을 감행한 일본정부는 외교적 결례를 넘어 분쟁을 선포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참사 앞에 온정과 지지를 보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정부는 전쟁과 전쟁범죄의 가해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역사왜곡과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정부에게 법적 배상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대일 외교관계에서의 비굴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과거 청산 없이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일본군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고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수요집회는 벌써 21년. 그동안 할머니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또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이곳을 지켜오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눈물과 안타까움과 분노를 경험하신 많은 할머니들은 이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21년 동안 보여준 일본의 자멸치한 행동들로 절망을 안고 떠나신 할머니들께 우리들은 죄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모였습니다.

긴 세월동안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책임을 받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 오신 할머니들과 함께, 언젠가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한 해방을 살아생전 맞이하고 싶다하시는 할머니들의 소망을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할머니들의 가족으로써, 동지로서 더욱 힘차게, 더욱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요청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배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올바르게 후세에 교육하라!
- 한국정부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한일외교정책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2011년 5월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968 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논평] 국회 윤리특위 최초 성희롱 국회의원 제명안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5/6)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위원장 : 손범규)는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강용석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 윤리특위 역사상 최초로 성희롱·성추행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는 이번 징계심사소위원들의 '정의'와 '양심'에 따른 결정을 환영한다.

'성희롱 사건은 처벌받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식의 정치인들의 낮은 여성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그동안 정치인들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그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관례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여겨져 왔다. 정치인들의 심각한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관행이 국회 내에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징계심사소위의 강용석 의원 '제명' 의결은 그간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 없이 조용히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해왔던 관행을 켜 최초의 사건으로서 의의가 크다.

국회 윤리특위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켜 좋은 사례로 남을 것

지난 21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담회에서 "국회 윤리위 자문위원들의 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동료 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제명한다는 것은 고된 해박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들이 인권의 가치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이러한 국회 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켜 좋은

사제를 남겼다. 우리는 이번 제명 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5명의 위원들이 인권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순위로 두고 '정의'와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윤리특위 15명의 위원들과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양심'과 '정의'에 따른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12년 총선을 앞둔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 5. 6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이나온서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실매대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광교육용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전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0.0004% 제대군인만 혜택 받는 군 가산점제 대신
실질적인 제대군인 보상제를 실시하라!**

오늘 5월 19일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6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이미 위원심판 받은 후진적 제도의 제도입을 자랑처럼 공언하는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심판한 것으로, 국방부의 군 가산점제 도입 추진은 헌법 정신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는 국방부의 군 가산점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 보상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1) 국방부의 군 가산점제 도입 주장은 제대군인과 합리적 보상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 가산점제 가점비율인 2.5% 기준을 2009년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역성의 합격비율이 7급 공채의 경우 41.3%에서 28.4%로, 9급 공채의 경우 56.0%에서 37.5%로 급격히 떨어진다. 또한 매년 25만명 상당의 제대군인 중 군 가산점제로 인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7급:47명, 9급:63명)으로서 0.0004%에 불과하다. 응시인원으로 볼 때, 전체 71,056명(7급:18,263명, 9급:52,793명)의 응시생 중 0.28%만 혜택을 보게 된다.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바,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한 제대 군인의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미 사망선고 받은 군 가산점제 도입으로 제대군인 '보상'이라는 어불성설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방부는 0.0004% 제대군인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가산점제를 폐기하고 군대 내 환경개선 및 실질적 제대군인 보상 제도를 마련하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군대 내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소중한 청년의 생명은 결코 이처럼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군 가산점제 도입을 마치 최선의 정책처럼 홍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한되어 극소수의 제대군인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군 가산점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탈권위적, 비폭력적 군대 내 생활환경 조성 및 대인적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국방부는 '보편성' 원칙에 근거한 제대군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라!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대군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방안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30.2%)이 가장 효과적인 보상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대군인 전체가 보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는 이미 사정된 군 가산점제 도입을 시도하는 국방부의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위헌성은 물론 사회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군 가산점제 대신 관련부처 및 국민합의가 바탕이 된 제도 도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1년 5월 19일

KYC(한국청년연합회) 군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여성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물민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관교교육위원 전국학부모회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
여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5월 24일 현재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남북 관계는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남북 경협 및 교류의 전면 중단, 북측 선박의 남측 영해 통항 금지, 한미 및 북한의 군사훈련 확대, 연평도 사건, 남북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여성과 아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한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은 고사하고 민간의 대북식량지원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조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은 각각 한미 동맹 강화, 북중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5월 22일 한중일 정상회담, 5월 20일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볼 수 있듯이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주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매달리고 있다.

언제든지 남북 사이에 군사적 대립이 있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역에 사는 우리 여성들은 오늘의 현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벗어난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1주년이 되는 오늘, 남북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남북 정부는 직접 대화와 협상채널을 회복하여 창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긍정적인 행위주체가 되기를 결심히 요청한다. 남북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고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떠나 남북 공동으로 win-win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상호비난하며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상호 위협과 불신을 뛰어 넘는 꾸준한 정치적 소통으로 위기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촉과 대화를 통해 평화정착의 대안을 찾을 때 한반도 화해와 평화는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 대화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으로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유엔 기구에 따르면 600만명에 달하는 북한의 취약계층들이 국제사회의 긴급한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도적 대북지원은 실종위기이다. 남한 정부의 지원이 멈춘 것은 물론이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선별 승인으로 남한 민간단체의 지원은 멈췄다. 정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분리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율적인 대북지원을 통제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이 화해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쌓기 바란다.

셋째, 남북은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위기관리 협조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자연재해와 원자력 발전소 파고를 경감하며 자연재앙과 인제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지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 사이에 더 나아가 동북아 차원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자원 분배가 필요하다.

넷째,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전쟁의 종식과 핵 없는 한반도는 한반도 평화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힘력으로 나아가게 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은 남북 협력 없이 주변국과 외교를 통해 상대방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평화해법을 찾아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평화과정에서 민간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5.24 조치이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중단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는 정부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적대적 대결의식을 약화시키며, 서로 다른 체계하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상호이해를 확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류과정에서 각종 오해를 분식시킬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5.24 평화와 균속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가 생명, 평화, 희망의 땅이 되기를 열망하며 남북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평화·안보·외교 분야 정책과정과 공식적인 협상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통합되고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 유연 안브리 결의문 1325호의 이행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국내외 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다.

2011년 5월 24일

기독여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 5.24조치 1주년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가 오늘로 1년을 맞는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발표된 5.24조치는 남북해운합의서를 무효화하고 일체의 남북교역·교류의 중단
을 선언했으며, 천안함 문제의 UN안보리 이관과 대북군사조치를 포함한 전방위
적 북한 압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5.24조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정당성의 취약에 있다. 이 조치의
전제가 되었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조사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정부 스스로도 이 발표 이후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달 바꾸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급한 것이었다. 결국 이 발표는 6.2
지방선거를 위해 안보정국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의 안보정국 기도를 냉엄하게 심판
하였다. 따라서 안보정국을 위한 정부의 조급한 대응의 일환이었던 5.24조치는 출
발부터 정당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5.24조치가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점은 지난 1년의 남북관계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잘 보여준다. 5.24조치로 인해 6.15공동선언 이후 제도화가 추진되
고 있던 한반도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섭
이 현실로 다가왔고, 군사적 대치가 일반화되었다. 군사훈련의 명목으로 서해에
끌어들인 미국의 항공모함은 중국을 긴장시켰고, 서해는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군사대결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의 일
상화로 이어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래 6.15선언
과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향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온 한반도는 5.24조
치로 인해 결국 한국전쟁 직후의 정전체제로 되돌아가버린 것이다.

5.24조치는 남북교역을 중단시켰다. 신규투자를 불허했고 기존 사업의 투자 확
대도 금지했다. 당연히 남북 교역기업이 위기에 몰렸고, 특히 임가공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순수경제활동조차도 북에 조금이라도 수익
을 가져다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
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동만 규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남북교역의 중단은 북이
입는 타격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우리 기업에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
다. 이로 인해 남은 물론 북도 남북교역의 하청관계를 타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

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5.24조치는 상호 이익을 외면하고 상호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5.24조치는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조차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우호정서는 점점 대결적 적대의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내외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속 보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긴장 없는 인도주의는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다.

민간 자원의 대북교류는 더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 당국관계와 달리 어떤 경우에도 민간의 교류마저 차단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자거 권 위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면 민간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민간의 교류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극심한 남남갈등은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5.24조치는 법에 의해 견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초법적 일방조치라는 점에서 5.24조치는 유신정권 시절의 악명 높은 '긴급조치'와 꼭 닮아 있다.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남북관계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회에 대한 보고와 승인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초래한 한반도 위기는 국방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31조 2,795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방예산은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날치기 통과되어 마구 쓰이고 있다. 결국 6.2지방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안보정국이 여당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동기가 위협스런 5.24조치를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파탄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냉전 상태로 회귀시킨 근본 원인이다. 또한 5.24조치는 민족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이기도 하다.

남북교역기업의 경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5.24조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에 의해 보전되어야 하며, 기업 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반 지원은 타 기업과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활동과 사회문화교류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을 정부는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사안별 남북 당국간 대화를 진정성 있게 대화와 동시에 이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함은 물론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하나의 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5.24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이다.

2011년 5월 24일

종교계

자승(조계종 총무원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김원(원불교 중앙교구장) 총장김(신부) 강태훈(원불교 은혜의집) 원오준(한빛갈매교회 목사)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신부) 김기택(성천교회 감독) 김대진(원불교 문화사회부장) 김삼(강동교회 목사) 김신애(목사) 김영일(목사) 김인경(원불교 제주교구장) 김태현(목사) 김현호(대한성공회 교무원, 신부) 김화봉(원불교 수학휴무) 나백집(영일교회 목사) 도원(홍부암 주지) 오갑(연화사 주지) 박명숙(교수) 박영민(목사) 박영민(신부) 박창호(민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영안(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변진홍(가톨릭대학 정임교수) 서철(상등교회 목사) 송병구(백동교회 목사) 송용환(원불교 문경교당) 양덕갑(은거래손잡기운동본부 총무위원장) 오광진(원불교 영산사무소) 오경택(원불교 한울안신문) 이길수(기장총회 목사) 이봉준(갈매리교회 목사) 이명남(달진교회 목사) 이상일(장로) 이진조(원불교 분당지구장) 이승열(총회본부 사회봉사부 목사) 이용환(원불교 구로교당) 임상희(장로) 전병호(군산복음교회 목사) 권용호(간지교 서부연회 목사) 정봉원(원불교 수학휴무) 정상덕(원불교 청소년국장) 정인성(원불교 남북한삼운향본부장) 정지강(대한기독교서회 목사) 정해선(국경) 제정(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조성현(원불교 서대원교당) 조현정(향린교회 목사) 지원(문수사 주지) 차림(다해생활명랑) 김관(불교인권위원회) 진호(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채해원(예루사미암 포럼 목사) 허상덕(원불교 문화사회부) 한기일(울산 새생명교회 목사) 허경(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시민사회

매나철(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강대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인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사홍(6.15추남본부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현(당심수후회회 명예회장) 김경은(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정호(예수살기 남북교류위원장) 김근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동순(천도교여성회 부회장) 김동현(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동국대 겸임교수) 김삼익(독립유공자유총회 회장) 김상근(6.15 제주본부 공동대표) 김선분(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회장) 김성복(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김수남(우리민족번영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여영(6.15학술본부 정책위원장, 한신대 교수) 김재우(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김영민(6.15 경남본부 대표)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유우(6.15대전본부 대표) 김용환(전 민예총 회장) 김윤수(민주자유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김정길(6.15당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주연(기독교연회 대표) 김장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철관(한국인더넷기자협회장)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위원장, 교수노조 위원장) 나경숙(천도교여성회 부회장) 남우린(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노영우(6.15총북본부 대표) 류명희(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덕신(6.15서울본부 대표) 박원철(홍사단연륙동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박자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회장) 박정숙(한국여성노동자연맹 회장) 박정숙(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박정우(6.15대구경북본부 대표) 박종기(연극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의 상임대표)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방용승(6.15연북본부 공동대표) 배유환(6.15경북본부 대표) 배은실(한국인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변승환(통일당장) 서재숙(장상수기념회 부회장) 손미희(한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여해숙(평화통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오종철(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우경관(한국기자협회 회장) 유근숙(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신도 전국연합회 총무) 윤기석(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윤미향(한국청년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소연(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윤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이강철(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임(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강태(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이광식(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명신(원불교 교육)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석태(연호사) 이상훈(시민경회포럼 공동대표) 이용득(한국노동 위원장) 이용선(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상희(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순(대전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대표) 이정아(통일여성회 회장) 이종민(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종복(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상집(한국PD연합회 회장) 이재인(6.15학술본부 집행위원장, 전남대 교수) 이필무(전국민연연합 회장) 이학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공동대표) 이해희(자유평화통일연속회의 상임의장) 임은필(6.15제주본부 대표) 임봉태(가톨릭농민회 회장) 임정순(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임연경(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식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도상(6.15민족문화인협회 집행위원장, 소설가) 정동익(8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우식(대한불교정년회 회장) 정옥희(광화문네트워크 대표) 정인용(6.15인천본부 공동상임대표) 정진우(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정순숙(한국여성지원회 상임대표) 정원택(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효(살인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조상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조영건(6.15학술본부 명예위원장, 경남대 명예교수) 조영희(6.15여성본부 전대표, 평화통일만드는여성회 이사) 지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소영(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최현오(6.15울산본부 대표) 표달영(평화재단근교인회 대표) 한국염(청암교회 목사) 황기명(6.15대구경북본부 상임고문) 한상백(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경숙(서울대 교수) 한중옥(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세훈(신부) 해성(역원사 회주) 황원주(6.15경북본부 상임대표)

정당

손학규(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승환(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김성리(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진(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영춘(민주당 최고위원) 박우선(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우원식(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우희영(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윤금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상구(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이영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인영(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정(국민참여당 전 대표), 이해선(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장세환(민주당 국회의원) 장원삼(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정성화(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조재숙(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한정애(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최은민(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성명서>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성희롱 국회의원,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라!**

오늘 오후2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강용석 의원 징계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작년 8월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상정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10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오늘 국회 윤리특위가 성희롱·성력비하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을 반드시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저급한 여성인권 의식을 가진 강용석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다.

강용석 의원은 대학생들과의 회의자리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남자는 다 똑같다. 그 날 대통령도 니만 쳐다보더라.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이다"는 등의 성희롱과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특정 직업군의 여성에 대한 성력비하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의 위도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 나 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 없다."는 등 동료 여성 국회의원에게 조차도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발언들을 했다. 이러한 저급한 여성인권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강용석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며,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강용석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지난 25일 서부지방법원은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3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명'의견을 의결했고, 5월 6일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제명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와 같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만일 오늘 윤리특위가 어떤 이유든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결렬시킨다면 '동료의원을 감싸는 행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치인의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타파해야한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수없이 발생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정치인들의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별 것 아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식으로 여겨져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정계를 받지 않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인류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면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희롱 국회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만일 국회가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미루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준다면, 2012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그 심판의 표를 던질 것이다.

2011. 5. 30

성희롱 국회의원 퇴출·강용석 의원 제명 촉구 긴급공동행동

시민사회 : 풀이연대, 한국YMCA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연합, 함께하는시민생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우리민족서모듬기운동

언론/방송계 :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청년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KYC

여성단체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 새움디, 장애여성세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광고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인우회, 포항여성회, 평화한민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지원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민족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 불허에 관한 논평 >

5월 31일 개성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이 정부의 불허조치로 인해 또다시 무산되었다. 이번 실무접촉은 개성에서 6.15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 이외에도 여성, 학술, 언론 공동행사 추진을 위해 남측의 6.15여성본부, 인문본부, 학술본부가 함께 할 예정이었다.

이번 불허조치는 지난 4월과 5월의 실무접촉과 지난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장단회의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 불허 조치이다.

통일부는 이번에도 '남북교류협력 질서유지 및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허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남·북·해외 공동위원장단회의 불허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통해 통일부의 이같은 태도가 교류협력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범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교류협력법을 모든 민간교류를 봉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간교류를 조건 없이 허용할 것을 촉구할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여전히 전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초법적 일방조치인 '5.24 조치'를 근거로 민간교류를 불허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남측위원회가 제기한 '개성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한 6.15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사이의 각종 접촉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 문제는 일시적으로 정부를 달은 세력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역사적 대업이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6.15를 남북 민간교류가 만개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여성계 선언문>

제주의 강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생명치유로 집결하는 곳이어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제주해군기지문제는 화순리에서 위미리로, 다시 강정마을로 옮겨 가며 대대손손 삼촌, 이모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다. 이문제는 도민들간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으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군락지이고, 철도보전연안지역이다. 이곳 역시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구림비의 보석같은 생태계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뚝지등 수많은 강정 생명들이 주검의 모습으로 바뀌며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이 공사업축의 무차별한 버린 쓰레기로 뒤덮히고 있으며 생명의 물줄기 지하수가 공사과정에서 뚫어내는 언저와 이물질, 그리고 지하수 폐공 방지로 지하수까지 신음하고 있다.

홀로 강정마을에 숙소를 차려놓고 이 곳을 지켜내기 위해 3년여 주민과 함께해 온 양운도 선생이 옥중 단식 60일이 되며 “나 죽거든 뱃가무를 구림비 바다에 뿌려달라”며 옥중까지 내어 놓고 있으며 이어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저항해 오던 최성희씨 또한 옥중단식 12일째를 맞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군사기지 건설에 혈안이 되어 탄압을 멈추지 않는 해군측의 행보는 현재 전국의 반대 여론의 확산과 전국 각처지에서 모여든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물품으로, 현수막으로, 성금으로, 자원봉사로 연대와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더욱 군사적인 폭력성으로 맞서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과 이를 묵과하는 제주도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제주는 이미 4·3이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의 기억이 있다. 부모형제를 잃고도 하루하루 숨죽이며 속울음을 삼켜야 했다. 거기다 연좌제의 굴레마저 뒤집어쓰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억울하다는 말도 못한 채 통원의 세월을 살아 온 유가족과 제주도민의 한(恨)은 아직도 온전히 씻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해군기지라는 또 다른 거대한 국가 폭력이 우리의 생명·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해군의 기지건설 강행으로 인한 주민 간 반목과 다툼이 4·3 사건의 아픔을 되풀이하게 되지 않을꺼리는 제주도민의 우려에 마음 속 깊이 공감한다.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가 있고 아직도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기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해군기지로 인해 또 다시 그 아픈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되풀이 주고 싶지 않다. 원래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평화가 없는 마을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힘을 얻고 쉬고 싶을 때, 배고플 때 아낌없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금의 바다가 있는 곳하기를 원한다.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삶을 이루며 수많은 이야기와 숨이 붙어 있는 곳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 갈 수 있는 평화로운 제주도로 남겨주기를 원한다.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여성들은 군사기지를 반대한다.

평화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한지역, 한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매우 소중한 실체인 것이다.

그리고 제주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에게 제주해군기지라는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평화와 군사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가?

국가의 시책이라면 폭력앞에서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현실적인 실리라는 변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 하고 있지는 않은가?

평화의 섬 제주도는 몇몇 정치인과 군인들의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제주도의 주인이며 그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 갈 권리가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생명 · 평화가 살아 숨쉬는 제주도를 위한 해결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려고 한다.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시키는 전국의 활동과 연대함은 물론 국제연대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널리 알리고, 강경주연들과 평화의 섬 실현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1. 6. 1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제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친구교여성공동체, 서울터, 성태해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회전화,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34개단체)

Korean women's stat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Gangjeong Village on Jeju Island must be a place of peace, life and
healing for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ast ten years, the issue of the naval base on Jeju has changed from Hwasunri to Wimiri to Gangjeong, totally destroying the communities of these villages who have been living together like family for generations. This issue has caused deep frictions within the residents of the island, and not only the residents of the proposed base area, but the majority of the Jeju Prefecture population are against the base construction. The ocean around Gangjeong Village, the proposed base site, borders a UNESCO-designated Biosphere Reserve, and is also designated as Natural Memorial 442, a natural protection area home to clusters of soft coral. This place is now being destroyed by the military's unilateral forced construction.

In the local ecosystem, as the precious rocks of Gureombi, many lives of Gangjeong are dying, including the crab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s an endangered species, *Sesarmops intermedium*. The beautiful scenery and nature is being covered by garbage indiscriminately disposed of by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underground water which is the source of much life is being tainted by dust and foreign objects discharg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left neglected with holes.

Professor Yang Yoon-Mo, who settled by the sea of Gangjeong on his own and spent over three years with the local people trying to protect their village, was jailed and even now more than 60 days since he began a hunger strike is putting his life on the line, asking "If I die, scatter my ashes in the Gureombi sea." Choi Sung-hee, who has also dedicated herself fully to protecting the peace of Gangjeong, is also in jail on the 12th day of a hunger strike.

As popular opinion throughout Korea strengthens against the base, and as activities by people around the country supporting actions in solidarity against the base construction such as sending support items, banners, donations and volunteers continue, the navy is becoming more frenzied to build this military base - with no clear purpose - and continues its oppression, reacting to protests with more military violent methods. Knowing these facts, we women

strongly condemn the navy for forcing through the naval base construction, and the Jeju Prefectural Government for silently allowing this to happen.

Jeju still has the memory of the massive state violence of 4.3. Despite losing their parents and siblings, every day the people had to hold their breath and hide their tears. Furthermore, through the "guilty-by-association" restrictions, innocent people had to live as if guilty. Even now 60 years on, the people of Jeju Island who lost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have been living with grief for years are not able to raise their voices, and their bitterness cannot be brushed away. However, the new form of massive state violence in the form of the naval base is threatening our lives and peace.

We deeply share the concern of the Jeju Islanders that the animosity and conflict amongst the community as a result of the forced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may once again repeat the pain of the 4.3 Incident. Having experienced the tragic history of the 4.3 Incident, and still feeling the pain of this experience, Jeju understands just how important peace is. Thus, we do not want such a difficult past to be once again brought upon the next generations of Jeju through the naval base. We do not hope for a village without peace, with the blessings of nature destroyed and the community broken down.

We hope that the ocean will be able to retain its current form, generously providing us all we ask for when we need a rest or when our stomachs are empty. We hope that will remain a place where the mothers of mothers connect lives, and many stories and breaths are left. We hope Jeju Island to be left as a peaceful place where we ourselves and our children can continue to live. We women, deeply hoping for peace and not war on this land, oppose the military base.

Peace is not just a value that cannot be seen, but is an extremely important, real thing that can change the fate of a community or a country. And, as people who can shape Jeju, want to ask about the Jeju naval base. Can peace and military bases coexist? Is a wrong choice being rationalised with the excuse of supposed practical advantages?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does not belong to a few politicians or military officials. The many islanders of Jeju are the custodians of Jeju Island, and they have a right to live in peace and safet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future of the children.

We intend to work together with the people of Jeju Island to build a path of solution for Jeju, where life and peace breathe. As well as national actions in solidarity to stop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we will spread word of the naval base issue internationally, and actively stan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of Gangjeong to protect the beautiful natural legacy and realise Jeju as the Island of Peace.

2011. 6. 1

<<34 Women's Groups>>

Women Making Peace, Kyu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Gwangju-Jonam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gu-Kyungbuk Women's Association United, Bus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yungnam Women's Association,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Daegu Women's Association, Daejeon Women's Association, Busan Counseling Center Against Sexual Violence, The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a New World, Sunan Women's Association, Ulsan Women's Association, Jeju Women's Association, Jeju Women's Human Rights Solidarity, Chungbuk Women's Association, Pohang Women's Association,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n Womenlink,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Korea Women's Hotline,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National Solidarity for the Solution for Sexual Trafficking,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rm/education, Women' Social Education Center, Kyungnam Women's Associations United, Chonbuk Women's Associations United, Pusan Women's Center for Social Research, Saewoonstuh for Prostituted Women, Korean Differently-Abled Women's United,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Housewife's Movement for Togetherness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개성 민족공동행사' 수용을 촉구하는
진급기자회견문**

**정부는 6.15공동선언 계승의지를 밝히고, 개성에서의 남북공동행사를
수용하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1년을 맞고 있다.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이 상징해주듯, 6.15공동선언은 민족 화해와 협력을 향한 역사의 대전환이었다. 남과 북은 '이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고, UN의 192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의 결의로 이 선언을 지지해주었다.

6.15공동선언 발표를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는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기초하여 정상회담 이듬해인 2001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남북을 오가는 민간교류의 상징으로 성장했다. 모두의 기억에도 선명하듯이, 2005년 평양의 공동행사에서 남북 당국 사이에 6자회담 재개의 합의가 나왔고, 서울의 공동행사에서 북측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당시에 보였던 남북의 협력 의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기초가 된 9.19공동성명의 주된 동력이 되었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이렇듯 민족공동행사는 민간 차원의 행사를 넘어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대개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지난 2.3년 사이에 최소한의 민간교류마저도 차단해왔고, 그 결과 민족공동행사는 3년째 단절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을 누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을 봉쇄하며 제재로 일관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군사적 긴장이 가득한 현재의 한반도가 잘 보여준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이 정부의 성취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난 6월 1일 공개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답변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정상회담 구걸'이나 '돈 봉투'로 드러난 정부의 행태나, 비밀접촉에서 오간 이야기를 전례 없이 폭로한 북한의 태도가 아니다. 문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상회담 추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동시에 진행해온 '이중성'에 있다. 이러한 이중성이 신뢰의 파산을 가져왔고, 그것이 이번 폭로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 대다수는 남북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로 사태로 이제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명백히 신뢰문제이고,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이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민족공동행사는 이 진정성의 또 한번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방위 대변인 답변 보도 이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무엇보다도 민간교류를 정상화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민간교류가 당국관계 경색 해소에 기여했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인간의 지혜를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성숙한 자세를 통해 정상회담 추진의 진정성을 보일 때인 것이다.

정부는 6.15선언 11주년 개성공동행사의 성사를 보장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올해 6.15 기념행사를 ‘성명과 구호’가 아니라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소통의 전기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남측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북측의 뜻을 남에 전달할 것이다.

정부는 6.15남측위원회가 5.24조치의 화중에도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과 개성공단 지역을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공동행사의 장소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깊이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6월 15일 개성으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화해와 평화로 가는 이 길에 정부도 함께 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1년 6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제주는 '평화의 섬'이어야 합니다
강정주민의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제주를 지금 평화롭지 못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하는 거대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정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정을 다녀 오거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강정의 풍경을 접한 많은 시민들도 왜 그곳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어떠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한 것인지, 과연 그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최선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대양해군의 발판으로 삼아 해군의 해외이동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는 국방부가 대양해군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국방개혁 법을 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돌아볼이기 전에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방부와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애초부터 후보지가 아니었던 강정마을입니다. 해군기지 후보지였던 다른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없이 일률적으로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강정마을은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며, 절대보전지역이자 세계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지건설을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은 날치기로 해제되고 환경영향평가조차 요식행위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한편에서는 날치기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도정과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강정마을을 둘러싼 천혜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건설용역업체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묵인되는 반면, 기지건설 공사를 저지하려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고소고발과 구속 등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후손에게 빌려온 환경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동의할 적이 없음을 수년간의 비폭력 투쟁을 통해 달하고 있습니다. 해

군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는 이간질과 협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자위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 탄압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야5당 진상조사단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규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 정지 및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각종 권법적, 불법적 문제점들이 명명백백 가려지고 모든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방부와 제주도정이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신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을 공동체와 아름다운 중딕바다를 지키려는 강정 주민들의 저항이 전국적인 해군기지 건설 반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군 군사기지 건설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조속히 극복하여,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 안보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평화의 섬', 한반도와 국제사회로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섬'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와 대안을 모아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 수요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사람들 416인 일동

1강내회(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동근(강정마을회 회장), 강동수(제주군사기지저지화평화희생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동진(민권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강단영(내오이아주 에디터), 강민준(한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대표), 강소영(기회 <레포장>), 강순희(49통일평화재단 이사), 강신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강영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우일(전주교 주교회의 회장), 강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연구원소 소장), 강권희(대천여민회 상임대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강태희(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강태유(원불교 사회경제교무단 공동대표), 경순(감독 <소림과필리>), 고권일(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고대연(제주군사기지저지화평화희생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용수(인디스토리 대표),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목사), 구자환(감독 <희색도시>), 권경우(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권나기(통일평화공동대표), 권미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명길(영화제작), 권영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오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홍삼(대전통영자치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정록(감독 <청계천의개>), 김정일(광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김경숙(한인대 명예교수, 목사), 김경광(한국아나발리스트센터 총무), 김경형(감독 <봄날개 피의하기>), <뜨거운 것이 좋아>, 김정호(예수알기 교육영성지원장, 들꽃향원교회 목사), 김정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고운(내오이아주 에디터), 김귀(감독 <고갈>), 김규옥(한상대 교수),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석(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기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기현(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장, 김남규(함여차지친북서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남준(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법위원장), 김봉민(감독 <수훈>, <관나지 않은 전쟁>), 김영준(성공회대 교
 수), 김광현(예수살기 공동대표, 정신도정의평화연대 공동대표), 김동현(서울총합영회에 사무국장, 김
 영준(민주주의실천사상사추모재단재단대표의 공동대표), 김명준(감독 <우리학교>), 김미숙(총독여성인
 우회 대표), 김영건(예수살기 공동대표, 광주 전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병수(한국독립영화
 협회 국본과회원), 김상근(동일벗이 이사장), 김서경(학술단체협의회 미디어대위원장, 성공회대 교
 수), 김석봉(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선(감독 <자카르타>), 김진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성운(기독교사회실천연대회의 대표위원위원장, 제시대총무는총회사모임 대표, 목사), 김성일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김재근(서울대 교수), 김수남(우리민족연방총동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
 수연(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처장), 김승익(울산대 교수), 김승호(전태일노동대학 대표), 김연환(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영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영순(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영은(불교평화
 연대 공동대표), 김형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옥
 연(경인여자대학 교수, 목사), 김유리(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위원), 김유진(민주연론시민연합 사
 무처장), 김은정(배우), 김은숙(농민대학 대표), 김은정(감독 <Squashblossom>), 김순수(민주자유평화
 통일중앙회의 상임의장), 김인숙(한국여성민주회 상임대표), 김인영(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
 일권(프로듀서 <올레야>), 김정택(제주군사기지저지평화회의상설현을위한범도연대위원회의 공동대
 표), 김재복(배우 <만두부>), 김정주(학술단체협의회 연구위원, 한양대 교수), 김정현(예술과 마음
 네트워크 대표), 김정희(부산여성사회교육원 회장), 김정훈(제주에바아일랜드 대표), 김재남(녹색연합
 정책위원장), 김조광수(감독 <사랑은100도서>),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홍수(전국목회자정
 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 하남성교회 목사), 김주연(기독교연회 회장), 김주익(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
 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준철(전주시미디어센터), 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
 위원장), 김진이(프로듀서), 김진옥(참여연대 집행위원, 변호사), 김장규(한국기독교교신회의 평행선교
 연대 회장, 목사), 김장후(제주군사기지저지평화회의상설현을위한범도연대위원회의 공동대표), 김철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태리(울산시민연대 회장), 김현기(민주시민대아선
 대), 김형국(한빛누리 기획이사, 목사), 김형남(감독 <희가>), 김형태(민주인권연회회의 이사장), 김홍
 수(예수살기 교회학회위원장, 대인교회 목사), 김희별(인디스토리 제작기획위원장, 김효일(제주여성인
 권연대 대표), 김효순(한겨레 대 기자),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회장, 나무꿈(감독 <우리는 이루어
 놓다>), 나왕순(교구통일범민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나태림(기상청여성운동본부 공동의장, 목사),
 남부원(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세환(전국학생행진 회장), 남윤진순(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은주(대구여성회 사무처장), 남인영(영화평론가), 남재원(전국문화자정의평화회의의 공동
 의장, 대전민광고회 목사), 남태우(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표), 남희갑(독립영화협회 대표), 노준대(전
 국목회자정의평화회의의 부의장, 목사), 노해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도명(조계종 화쟁위원
 장), 류영희(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성철(함여과자지침위원회시민연대 사무국장), 류선환(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 유재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마대중(에바
 여 재교육), 명봉희(영화배우), 명진(영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지도위원), 모성진(독립영화 프로듀
 서, 문규영(영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성근(국민의 힘 대표), 문정현(영화배우 단장,
 49동일평화재단 이사장), 민경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민동현(감독 <눈부신 하루>),
 민민기(전 녹색교통 사무처장), 민용근(감독 <희화, 풍>),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
 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광수(정통진보입영회세 프로그래머), 박규민(전국목회자정의평화회의의 부
 의장, 목사), 박기남(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대근(민권재단 사무장), 박세진(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서울대 교수), 박성중(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석운(한국전보연대 공동대표, 민주연론시민
 연맹 공동대표), 박성미(영화인), 박성용(여독립영화동결 대표), 박성희(제주군사기지저지평화회의상설
 현을위한범도연대위원회의 공동대표), 박순성(동국대 교수), 박승택(전국목회자정의평화회의의 부의
 장, 목사), 박영택(전국목회자정의평화회의의 서기, 목사), 박영숙(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
 옥(새서상총무는민주교여성공동체 대표), 박우진(민주연론시민연합 이사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
 이사), 박이은실(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가톨릭대 교수), 박인규(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사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회장), 박정옥(한국여성노동자회총연합 회장), 박필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박정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박정숙(감독 <첫사랑1999>수미의기억>), 박정운(참여연대 회장)

국제법장), 박정호(전주시민미디어센터), 박중기(연륙민주영사회생자수모단세연대회의 명예회장), 박진실(상대기평연구소 부소장), 박원자(디자이너),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방영식(예수살기 상임대표), 배기영(제주군사가지지지와평화여성실현을위한법도인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배성인(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현시대 교수), 배은심(전국인속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종영(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을 상임대표), 배형국(민법대법실천연대 회장), 백진영(영화평론가), 백기환(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나침(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현(희망과대인 상임공통운영위원장), 백인(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변경수(예수살기 사무국장, 동녘교회 목사), 변성진(영화평론가), 변연익(공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변영주(감독 <말레교수소>), 부지영(감독 <대장만화>), 서광진(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서윤미(새올터 상임대표), 서왕희(중앙대 교수), 성나현(전국목회사경의평화협의회 부의장, 목사), 성영관(경희대 교수), 소준문(감독 <REC>),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송상교(변호사), 신승훈(가톨릭대 교수), 신원희(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부산대 교수), 신은성(영화평론가), 심익립(죽자면 할 공동대표), 안기홍(가톨릭언어아카데미),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안태용(감독 <나의 마음은지지 않았다>), 안기환(스크린라이프문화연대 이사장), 안달순(녹색별천 회장), 양재성(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목사), 양한승(불안정노동절제연대 대표), 임은희(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부산대 교수), 이석숙(영화평론가), 임상호(감독 <대지의 향>), 임형국(소수자인권 위원장, 변호사), 오동석(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아주대 교수), 오미익(제주참여자치시민사회장), 오상영(기독교평화센터 소장, 목사), 오석훈(제주군사가지지지와평화여성실현을위한법도인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성규(희망과대인 상임운영위원), 오세욱(한국기독교교로망의 총무교도 목사), 오영덕(제주군사가지지지와평화여성실현을위한법도인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재식(전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오재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오종철(한국청년연대 상임교문), 오주연(예수영교회 사무국장), 우희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회장, 서울대 교수), 원승훈(전독립영화제작지원센터 소장), 원용진(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원정(녹색연합 공동대표), 유종중(한국독립영화협회 회장), 유영민(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유종일(한국대학연구회 교수), 송광호(감독 <가자없는, 모든 것들>), 윤경희(포항여성회 회장), 윤기문(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인중(전국목회자평화평화협의회 부의장, 목사), 윤정숙(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윤지익(감독 <스피치>), 윤원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홍식(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인하대 교수), 윤희상(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삼(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이경남(감독 <달리기>), 이경진(제주군사가지지지와평화여성실현을위한법도인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서(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이광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이규재(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본부 회장), 이난(감독 <결명날남들>), 이남주(상공회대 교수), 이대훈(상공회대 교수), 이도훈(한양대 교수), 이동림(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우나(감독 <여국의파도>), 이명남(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이병호(경희대 교수), 이병(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삼실(한림대 교수), 이상영(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상석(은혜문화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상욱(프로듀서 <소중할나의 꿈>), 이상준(21C코리아연구소 대표), 이상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청산위원장), 이상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상희(감독 <후회하지 않아>), 이순중(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숭실대 교수), 이상환(민족회의 공동회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영희(499평화영화재단 이사), 이영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장), 이윤선(시민영화포럼 공동대표), 이원주(감독 <살물의 삶>), 이원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성(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은진(서울대학교 교수),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재명(동북아평화교육기관 대표), 이재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이재현(현장실천연대 회장),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환(잠리고신학대학교 교수), 이장훈(제주군사가지지지와평화여성실현을위한법도인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종민(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회장), 이종희(예수살기 공동대표), 이진연(승평영화기독교연대 운영위원장), 이찬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이상연(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이천희(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교문),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득(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이태동(영화평론가 이사장), 이태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목사), 이현희(사회화진연대 운영위원장), 이현희(인디포럼 프로그램담당), 이형우(제작자들) 대표, 이혜경(서울국제여성영화회 집행위원장), 이훈규(감독 <파라다이스 온 리츠>), 이윤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국장), 임광민(전국목회사경의평화협의회 상임회장, 최주교교회

목사), 임나복속(경남여성회 이사장), 임문철(제주군사기저지저해평화희생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
 회 공동대표), 임봉래(한국가톨릭농민회(사) 회장), 임은혜(감독 <우리상에 최고의 순간>, <와이키기
 브라더스>), 임은혜(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임승철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실질, 목사), 임영신(이재진피소 활동가),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정재(감독 <화산방>, <마릴러 노래>),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혜경(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정경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장
 금석(평화와참여로가는인연연대 사무처장), 장두석(한민족정환문화연구소(사) 이사장), 장명숙(한국여
 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시기(영국대 교수),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장은주(감독
 <안과 밖>), 장진호(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장정운(예수살기 평화통일위원
 장, 오산시국인교회 목사), 장민용(주)진치신문 대표이사), 전승우(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풍곡대
 교수), 전승일(감독 <오월상상>), 정경민(평화통일노는여성회 정책위원장), 정경복(감독 <고기도사>),
 정경숙(함께하는주부모임 상임대표), 정광진(전국노동자회 대표), 정근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의장, 목사), 정동익(사회평명회 상임의장), 정두영(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정은자(한국여성노동
 자회 대표), 정미애(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연규(민주인본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연우(민주연본시민연합 상임대표), 정우철(감독 <사
 람이 무서워>), 정유서(영화비평리크 대표), 정인성(원불교 교무, 정종교(교역대 교수), 정종규(가톨릭학
 스 지금여기 편집위원), 정지연(영화평론가), 정지영(감독 <남부군>, <화산전쟁>), 정진우(서울 제일
 교회 목사), 정준숙(여성인권회 상임대표), 정중일(기독교사회연교연대회의 상임대표, 목사), 정태식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전북대 교수), 정태효(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회계, 목사), 정현관(한민
 도평화포럼 기획위원, 세교연구소 연구위원), 정현택(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기복(가제인디언지 운영
 자), 조국희(노병노동연대 대표), 조문순(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가톨릭대 교수), 조성봉(감독 <래
 드드연>), 조성우(민주화평화협력법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순익(민주화실천가각운동협의회), 조순현
 (방송대 교수), 조영미(서울특별영역회 집행위원장), 조영선(변호사), 조영숙(한국여성당서면학 국제연
 대서면학), 조유복(다문화전 부메이지지시연연대 사무처장), 조은성(크로포우 <나이거즈의눈물>, 조주영
 (메비여 공군대령), 조진규(감독 <조복아누과>, <어제동무>), 조한정(예수살기 공동대표, 향교교회 목
 사), 조희필(감독 <재구성된 정로들>유권순드모리크), 조희주(노동권선 대표), 주두원(학술단체협의
 회 운영위원), 주광환(민족화합운동연합(합사) 대표의장), 주현숙(감독 <몇년 그녀를>, 지영선(평등운동
 연합 공동대표), 지구평화학술단체협의회 학술위원장, 서경대 교수), 진권(한국인권위원회 위원장), 채
 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천나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천준호(한국청년연
 합 전 공동대표), 최민아(인디다함페스티벌 사무국장), 최민희(민주연본시민연합 전 상임대표), 최영
 준(다함께 사무국장), 최영태(전남대 교수), 최우진(한국독립여성내이연협회 사무국장), 최은순(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최재봉(기독교사회연교연대회의 사무국장, 목사), 최은영(문화연대 사
 무처장), 최진성(감독 <겨수지의겨울>), 최진숙(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최화동하(감독 <택시블루스>),
 최현국(예수살기 총무, 평명평화교회 목사), 최준권(영상이미디어센터미디어팀), 최유(실천불교전국승가
 회 상임대표), 표명철(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하승정(더 체인지 대표, 쉼크카레 코디네이터), 한경
 래(제주군사기저지저해평화희생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일(한국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국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상원(민기협양심수후원회 회장), 한상원(예수살기 공동대표,
 목사), 한상진(함께가는사람들(전), 한중숙(한국인본연대 공동대표), 한홍규(평화자율권 상임이사, 중
 공회대교수), 함기일(한국여성학지협학회 공동대표), 함홍호(4.9인혁일사계승사업회 부이사장), 허
 중(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의장, 목사), 허상수(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장), 허영규(아시아공명평등
 한국위원회의 대표), 허옥(용인대학교 교수), 허진영(제주군사기저지저해평화희생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
 위원회 공동대표), 현기영(소실가), 현순호(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의장, 목사), 현승일(제주커피
 아일랜드 이사장), 홍근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홍성국(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
 의장, 목사), 홍성태(평화노래단, 별음자리표), 홍원표(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황건원(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총무, 목사), 황정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황필규(주한미군법외결혼운동
 본부 공동대표), 황희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발족 선언문

오늘 <대화와 소통>은

국민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향한
길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6백 만명 이상이 식량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이 지나면 사정은 급속히 더 나빠질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정치는 서로 등을 돌리고, 인도적 지원조차 정치적 조건을 우선하여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은

북의 정치가들이 아니라 북의 배고픈 아이들을 봅니다.
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아픈 아이를 그저 바라보아야하는
북의 엄마들을 봅니다.
또한 북의 어려운 처지를 놓치지 않고, 기꺼이 돕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도적 지원조차 막혀있는 현실을 봅니다.

<대화와 소통>은

오늘 여기에
지원물자도 사람교류도 모두 막혀있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절박함으로 모였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만은 반드시 계속 되어야한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는 이유를 묻지 않고 먼저 구하는 것이 인도주의 정신입니다.
북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정치가들의 엇박자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식량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국민의 성금으로 모은 대북지원물자는 즉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평화를 살리는 일입니다.

총구로 지키는 평화는 불안합니다.

인도지원의 정상화는 곧 남북관계 정상화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상화되면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더 이상 극단으로 치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남과 북의 평화를 살리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미래를 살리는 일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한반도, 그러나 갈라지고 더 멀어진 한반도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불안과 분단의 고통으로 대물림되는

한반도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조차 하지 않는, 정치적 대립으로 불안하기만한 한반도의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국제사회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남과 북의 하늘이 이어져 있듯, 인도적 지원은 남과 북의 미래를 이을 것입니다.

<대화와 소통>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케이스 릴레이 선언과 시민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것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정신과 실천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어른들을 멘토로 모시고, 개인 및 단체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참여자들과 현재 인도적 대북지원의 쟁점들이나 상황 등을

함께 토론하고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북식량지원과 의료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을 위한

공동과제와 행동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상화할 때 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공동모금과 대북지원물자 전달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동과 실천을 해나갈 것입니다.

막혀있는 길도, 없었던 길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됩니다.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우직하고 단호한 지원의지가

인도적 대북지원의 넓은 길을 열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대화와 소통>은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여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향한 첫 걸음을 뒹습니다.

2011년 6월 8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정신에 호소합니다.

6월입니다. 한반도의 6월은 이제 봄을 지나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자연의 신록이 그 싱그러움 연한 빛에서 벗어나 짙은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그 푸르름과는 별개로 한반도의 6월은 과거 태고종의 기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생산된 곡식은 이제 거의 소진해 가고 새로운 곡식은 아직 추수되지 상황에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태고종에 고봉을 겪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인 한국은 다행히도 이런 상황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북쪽인 북한은 아직 이런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북쪽의 식량 상황은 국제사회의 긴급 북한식량상황 조사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WFP와 FAO, UNICEF 등 유엔 기구는 지난 3월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철의 홍수와 겨울철의 혹한 등으로 식량 생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으로 6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긴급한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5개 NGO도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미국 5개 NGO의 보고서는 6월 14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평안북도 관리들의 경우 현재의 식량 비축량이 고갈되는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었는데, 그 날짜가 바로 6월 14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앞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적어도 평안북도의 주민들은 만그대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급마저 완전히 끊겨 더욱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우리 남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남쪽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학지인 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사회가 앞장 서 북한 식량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접촉과 지원 등이 모두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한국의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의 일환으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더 나아가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도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들의 뜻은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동포애와 더불어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오직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한국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은 한국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600여만명에 이르는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이 배고픔에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가득찬 국제사회가 한국 시민사회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1년 6월 8일

대화와 소통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정부 공개 질의서

작년 5.24조치 이후 1년이 넘도록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지속되는 사태에 직면하여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과 소통'>은 정부의 공식입장에 관해 질의 합니다. 선득력 있고, 공명정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어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상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첫째는 인도주의의 기본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주의란 정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근본정신으로, 애초 정부의 방침처럼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의 사과 없이는 인도적 지원마저 안 된다'며, 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단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금년 5월부터는 영유아를 위한 극히 일부의 물자만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 어디든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애에 입각한 나눔을 전파하는 것'을 의무와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들의 성금으로 모은 대북지원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고자 국민들은 땀돈을 모아 정성어린 지원성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지원단체들은, 그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동의하여 <농기구 및 농자재지원 구입기금>, <축산시설 및 가축구입기금>, <의약품 및 병원설비 구입기금> <산림녹화 기금>을 모아왔으며 이 모든 기금들은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지원단체가 원료를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지어놓은 병공장, 풍우유 공장 등 북한 생필품 공장들은 가동이 중단되고 아이들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지원활동을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불허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원물자의 분배투명성 확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탈북자들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증언을 들어, 지원물품이 전용되거나 북한 정권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며, 전용 불가능해 보이는 물품으로 한정된 지원을 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분배투명성 확인이 비교적 원활하게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국제 구호단체들과 국내 지원단체들의 대체적인 증언입니다. 분배투명성 확인을 가로 막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의 방북 불허조치입니다. 모니터링 방북은 막으면서, 지원물품의 전용을 운운하는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배투명성을 인도 지원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오히려 인간의 인도지원을 규제하는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허용 가능한 지원을 영유아 영양식으로 국한하는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에 긴급구호는 한다고 합니다만, 영유아 영양을 위해서도 쌀,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식자재를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 아이들에게 우리 농민들의 손으로 농사지은 밥 한끼 먹이지 못하는 정당할 이유가 과연 존재할까요? 또 서울에도 결식아동이 있듯이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이든 어디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영유아가 있는 곳에 지원의 손길은 필요합니다. 가급적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물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민간단체와 북한의 자율적 협력을 보장해야 내실있는 배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하여 북한 어린이를 잘 도울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 의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사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북지원을 극도로 축소시키면서도 여론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북한과의 실무접촉과 협의마저, 불허를 남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국제구호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물자 수송과, 배분,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해당 나라 정부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협력을 하기 위하여 물자전달 이전에 북한과의 실무접촉을 합니다만 정부는 최근

이마저 이것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불허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원물자 수송 및 배분, 모니터링에 대한 접촉은 불허하면서, 북한 정부의 협조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북한 오지로 들어가는 물품 전달과 현장방문을 강제하라고 민간단체에 압력을 넣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행정이라는 반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정부에게 바랍니다.

북한 정부를 무릎 꿇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인도지원은 이미 정당한 인도 지원이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대응과 인도주의를 연계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민간 스스로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들은 현 정부가 인도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와 조치로 민간을 통제하려는 행위에 깊은 우려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치공방의 영역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상생, 그리고 화해협력과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도주의 정신의 존중과 조속한 방침 변화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발족식 참가자 일동

Appeal for Food Assistance to the DPRK

It is June. The season of verdure is slowly fading out and summer is actually starting to set in. The mountains are covered with full of flowers and lush landscapes.

We, Koreans, still remember what was like to endure June. June signals harvested food from last year is almost gone and there will be still several months before this year's harvest starts. June indicates we will need to endure hunger before the autumn.

Fortunately people in South Korea no longer suffer from hunger in June. However, the same cannot be said to people in North Korea. A recent report from WFP, FAO, UNICEF reflects the dire situation in North Korea. In March 2011, WFP, FAO, and UNICEF published a special report on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is report, North Korea has experienced a series of natural disasters, including floods last summer and unusually harsh and prolonged weather this winter, and this has resulted in much reduced harvest of last fall and this Spring. Further, the reduction of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in recent years ha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current food crisis in North Korea. This report estimated that more than 6 million people in North Korea will be in dire need for immediate food assistance and nutritional intervention.

In February 2010, 5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of USA visited North Korea and published a report that North Korea is in clear need of immediate food assistance. Especially this report stated tha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official in North Pyongan province, foods stocks are extremely low and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will run out of food in June 14, 2011. In other words, in about a week from today,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will be forced to stop rationing food to people in North Pyongan province, which will substantially increase food crisis in these regions.

These reports alerted sever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the current food crisis of North Korea. Several religious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urged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sume immediate food assistance and have pledged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ll also initiate food assistance and interventions to relieve the current food crisis in North Korea. However,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food assistance and interventions from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can star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needs a special permission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to contact North Koreans or provide any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having the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not been enthusiastic about providing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 Further, it is report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opposed the US government providing food aid to North Korea.

It should be noted that not all the South Koreans agree with this policy of South Korean Government.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at it is morally and ethically wrong not to provide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ns because of political consideration.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at it will be critical for international society to provide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n to relieve the current food crisis.

We strongly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rgently carry out food aid to the DPR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only be respond to and considered humanitarian principles. We dare to say that this is what the most of Koreans would want. Humanitarian food aids from international society for North Korea likely influence the hardline policy of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South Koreans will do our best to help 6 million, vulnerable North Koreans suffering from hunger. We strongly urge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will also be a part of humanitarian aid to help feed North Koreans.

June 8th, 2011

Korean NGO's Voic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6.15 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 참가 불허 규탄 기자회견

2011년 6월 15일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모여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지 11돌이 되는 날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를 6월 15일 개성에서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5.24 조치의 이행과 남북교류협력 전서의 유지를 위해 민족대회 참가자들이 개성으로 가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평화통일민족대회로 향하는 개성행 버스는 통일대교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1998년 6월 15일 통일대교 개통,

1998년 6월 16일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이 통일대교를 건넜습니다.

2007년 10월 2일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통일대교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2011년 6월 15일 100여명의 평화통일민족대회 참가자는 통일대교에서 정부의 평화통일민족대회 참가 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래글은 통일대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우리 걸음은 가로막혀도 6.15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행 발걸음은 여기서 가로막혔습니다.

만드시 이루어라 다짐했던 개성 땅에서의 6.15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는 이렇게 차단되었습니다. 이번 공동행사가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금대이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의 불고불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 우리의 반복된 호소는 외면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남북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 정부의 어리석음과 무능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강조하던 정부가 남북간 비밀접촉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이중 행태를 보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여전히 5.24조

치를 저변하면서 6.15선언 11주년 공동행사는 물론 민간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적 긴장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주의만이 아니라 대북 강경대결정책만 고집해온 이 정부의 무능과 어리석음의 결과물입니다.

대북 인도지원 중단과 심리전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은 남북간 적대적일만 날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외 중단은 우리 기업의 손실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최악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북핵문제의 해결은, 진전은커녕 오히려 북의 핵무장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사실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어리석음은 결국 6.15선언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성으로 가는 우리의 발길은 여기서 막혔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 우리 뜻을 전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5.24조치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또한 군사분계선과 서해 일대의 대규모 군사훈련 등 긴장을 고조시킬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경협과 민간교류를 보장하십시오. 그것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이고, 10.4정상선언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고, 그런 후에 북의 잘못을 얹히 따지십시오. 그 길에 상생과 공영이 있고, 평화와 통일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개성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 하여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온거리의 염원까지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의 의기가 살아 있는 한,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권의 생명은 잠시지만, 한반도 평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민이 열어가는 6.15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2011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 남북대표단

[공동호소문]

**6.15정신으로 굳게 손맞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
새 국면을힘차게 열어 나가자! - 6.15공동선언발표 11돐을 맞으며 -**

오늘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1돐을 맞이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은 분신과 대결의 민족분열사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로 바꾸어놓은 일대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에 의해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하나로 이어지고 각계각층 사이의 접촉과 왕래, 통일회합을 비롯해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문화유산이 발굴되었다.

남북 사이에 경제협력은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이 폭넓게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오늘 남북 사이에는 왕래와 접촉, 대화와 통일회합의 길이 막히고 대결과 전쟁의 기운만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민족의 대결을 조장한 결과이다.

더욱이 남과 북, 해외의 민간단체들이 합의하고 추진해온 개성에서의 6.15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끝끝내 차단한 것은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다. 민족의 단합과 교류 대신 기어이 대결의 길을 고수한 이 민족분열 행위는 역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해 나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 가는 새 길을 열어놓았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은 민족의 안녕에 관한 사활적인 문제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다.

전쟁이 없는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지향이며 염원이다.

남북공동선언에는 민족의 힘을 믿고 동족끼리 서로의 이해와 슬기를 하나로 모아 공동번영을 이룩하려는 민족자주의 정신이 구현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서로 돕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자주의 정신은 남북사이의 신뢰와 화합의 근본비탕이며 여기에 평화와 있고 통일이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는 민족대단합의 정신이다.

당파의 소속이나 좌우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며 공동선언 이행에서 마 음과 뜻을 같이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남북공동선언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들을 고수하며 6.15시대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의 길에서 온 겨레가 하나가 되자.

이것이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겨레 앞에 내놓은 약속이자 다짐이다. 무려총돌까지 치닫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6.15공동선언 이행에 우리 민족의 살길이 있다.

6.15의 정신에 역행하여 대결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단호히 저지시켜 나가자.

한쪽으로는 대화의 손을 내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상대를 무너트리려 한다면 어찌 신뢰있는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겠는가? 대화와 만남을 외면하면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이것이 6.15공동선언이 가르쳐주는 길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남북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왕래, 협력교류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자.

6.15공동선언발표 11돌 기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차관되고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엄혹한 현실에 온 겨레가 분노하고 있다.

그 어떤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6.15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다.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심장의 고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6.15공동선언정신에 대한 온 겨레의 지지와 열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해내외 온 겨레여!

우리 모두 6.15정신으로 굳게 손맞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 만세!

2011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논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월 24일 폐회회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32명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2.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의 경험 속에서 전쟁과 분쟁이 여성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을 보아 왔다. 다른 한편 우리는 여성들이 분쟁해결의 주체로서 당당한 남북 화해협력 및 평화과정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호"는 분쟁이 남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여성이 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평화형성의 주체로서 평화와 안보정책에 참여하고, 평화과정에 온전히 개입할 것을 국제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우리는 1325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4. 이번 결의안에서 밝혔듯이, 한국정부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조속히 작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행동계획 작성은 한반도 분쟁 해결·관리·예방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촉진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5. 국가행동계획은 통일·국방·개발 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현실적인 목표, 이행 시간표, 확실한 예산, 실행 조직체계, 보고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행동계획 작성과정은 국가행동계획 만큼 중요하다. 의회 및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여성단체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협의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6. 한국정부는 1325호 관심국 그룹(Friends of 1325)의 일원으로서 결의 1325호와 후속 결의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 채택에 기여하였다. 결의안에서 촉구한대로, 한국정부가 동일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7.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이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위해 국내에서 의회,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협력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국제여성단체, 유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정부, 시민사회, 여성단체와 연대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011.6.2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Comment on 'Draft Resolution Calling for the Adoption of the UN SCR 1325 National Action Plan' in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omen Making Peace &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2011.6.24

Women Making Peace and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welcome 'a draft resolution calling for the adop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National Action Plan', submitted on June 24th by 32 Korean lawmakers including Rep. Young-Hee Choi (Chair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We have observed, through the issues of the 'Comfort Women',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how war and conflict devastated women's lives and used human beings as a tool. On the other hand, we confirmed that women played principal roles in the inter-Korean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rocesses.

"UNSCR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recognizes the differential impact of armed conflict on women and men, highlights women's role to participate peace and security policy as not victims but peacebuilders and demands the full involvement in all peace processes. We fully support Resolution 1325 and have conducted a variety of activities to implement it.

As found in the draft resolution, we strongly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ubmit a National Action Plan to implement "UNSCR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The National Action Plan will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realiza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and incorporating gender perspective in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The National Action Plan should be related to the national strategies - such as reunification, defense and development policies - and include realistic goals, a timetable for implementation, concrete budget, accountabl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a reporting mechanism. The process of the developing of the National Action Plan is as important as the actual Plan itself. Therefore, it should be proceeded in a cooperative manner by including the different branches of the government -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the Ministry of Defense,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and relevant actors such as women's organizations.

As member of Friends of 132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ontributed to the adoption of Resolution 1325 and the successor resolutions 1820, 1888, 1889 and 1960. As stated in the mandates, we strongly reque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actively promote such resolutions and run an education campaign.

We recognize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contribute to the regional and world peace; therefore, we will cooperate with the National Assembly, civi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at home, and will seek ways for solidarity with governments which already adopted the 1325 National Action Plans, civil society and women's organiz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호소문]

호소합니다. 강정을 지켜주세요!

제주 강정 중대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존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한 제주, 43의 한을 위무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섬, 그 중에서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 앞바다가 해군기지건설로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군은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건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워진 대양해군 논리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법률안이 임박 예고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국회 예산 통과 시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던 민군복합항 건설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군사기지 건설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인도 등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과 잇따라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국의 영토에 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무상주방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데 이 기지를 활용하리라는 것은 물을 보듯 뻔합니다. 이럴 경우 평화의 섬 제주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다투는 분쟁의 중심지역이 되어 안보가 오히려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평화와 생명에 대한 의침도, 아당과 국회 진상조사단의 공사 중단 요구도 철저히 외면한 채 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군은 직접 민간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정부가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던 마지막 국유지인 '중대해안 입구 농로'에 대한 용도계기를 권고했습니다. 중대 해안 진입로를 폐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 용지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국방부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이러한 정부와 군의 태도는 기지건설을 결사적으로 지지하려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거센 저항과 충동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기지건설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군에 호소합니다.

정부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건설 논리는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또한 기지건설을 추진하는 절차와 방식 또한 기만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더 많은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기지건설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와 군이 농로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군민 제주도지사께 호소합니다.

지사에서서는 일찍이 제주해군기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옳습니다. 기지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라는 무절제한 환상을 집으시고 대신 주민의 치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중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시길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지사를 제주와 한반도 평화를 지킨 이로 기억할 것입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강정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시길 것을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한나라당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적자로 허덕이는 국가 예산을 군의 몸집키우기와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써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강정 주민들이 4년이 넘도록 힘겹고 치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을 공동체가 갈갈이 찢겨져 주민들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날아드는 각종 고소고발장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고지서도 주민들을 불안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 꿈과 추억이 서린 드넓은 구덩비 바위가 콘크리트에 뒤덮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부디 주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십시오.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지지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에게 호소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운동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연대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더 많이 더 널리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를 알려주시고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의 삶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막아내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4.3의 원혼이 서린 제주에 대한 역사의 책무이자, 고통당하고 있는 강정 주민들에 대한 양심의 표현이며, 평화를 지키고 이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제주 강정을 지켜주시길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1. 7. 13.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회회의

Statement of Appeal
We appeal to save Gangejeong!

The Joongduk coast of Gangejeong Village in Jeju Island is now suffering. In 2006, Jeju Island was designated as an Island of Peace for the purpose of consoling the deep sorrow of the April 3rd Massacre. And the Joongduk coast was appointed as a Biosphere Reserve, World Heritage Site, and Global Geological Park by UNESCO. It is an Absolute Preservation Area, which is now suffering from naval base construction.

Insisting that the naval base is vital for national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vy are enforcing the construction. However, the Ocean Navy expansion plan upon which the base construction was justified has been discarded in revisions to the national defense bill regarding strategies to counteract recent security threats, leaving no justification for this new base. In addition, the original argument from the government when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bill was passed was to construct a Joint Civil Military site to be used for tourism as well as military purposes. However, that plan has disappeared and now only the military base is being constructed.

By maintaining military alliances with Japan, Australia, South Korea, and India, and through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Philippines, Vietnam, and Taiwan, the U.S. is attempting to build up its defense line against China. If the Jeju naval base is constructed, the U.S., which possesses the right to station there according to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will surely use this base to stand up against China. In that case, Jeju Island, an Island of Peace, will become a center of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jeopardizing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however, are turning a blind eye to the voices of Gangejeong residents and civil peace activists, as well as to the demands to suspend the construction coming from the opposition parties and the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vy has even used violence against a protesting civilian. On July 11, the national government recommended that the city government barricade a farm road on the Joongduk coast, which is the last remaining piece of state-owned land under the jurisdiction of Seogwipo city within the site of the naval base construction.

This action was a response to the demand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discourage any attempts to stage a protest against the naval base construction. However, such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enforce the construction only bring about stronger resistance and conflicts from Gangjeong residents and peace activists. The construction must be stopped before any unfortunate accidents take place.

We appeal to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The argument for the base construction by the government and the navy is no longer valid. Moreover, the means and procedures used to promote the construction have been so violent and deceptive that they are only causing more resistance and resentment. Unilaterally pushing ahead with the construction, in the name of the national project, is obviously not a wise way. We call upo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to withdraw their plan to close the farm road and to completely reexamine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project.

We appeal to Woo Keun-Min, Jeju governor

Governor Woo, you were aware of the negative consequences that could result from the naval base construction and you were right. We urge you to give up the futile illusion about the development profit and to listen to the desperate voices of the residents. We further request you to use your authority to cancel the removal of the "absolute preservation area" designation of Joongduk coast. If you do so, history would remember you as a person who protects the peace of Jeju and the Korean peninsula.

We appeal to the national assembly

As an entity representing citizens, the national assembly has a duty to listen to and respond to citizens' voices. We appeal to the opposition parties to be more active in nullifying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project. The Grand National Party, as the current ruling party, should seriously examine whether the base is really needed and whether national budget should be spent on inflating military forces and feeding construction capital.

We appeal to citizens.

Gangjeong citizens have been fighting alone for over four long years. In the meantime, the village community has been torn apart, leaving indelible scars. Citizens are also engulfed with fears due to various lawsuits from the government and construction companies, as well as fines up to tens of millions of won. They are suffering from the fact that the Goorungbi boulder, which represents their dreams and memories, might be covered with cement block.

Please express your solidarity and give them your consolation. And if you can, please visit Gangjeong Village. Then you might be able to understand more clearly why the construction must be stopped. In addition, please use your wisdom and energy to do whatever you can in your position to prevent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We appeal to peace advocates worldwide

International support, advocacy, and solidarity to stop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give Gangjeong residents and peace activists strength and courage. Please spread the news of these problems related to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with your networks and show us your support and solidarity.

We will try our best to prevent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which endanger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which is destroying the lives of Gangjeong resident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 gift from heaven. We firmly believe that this struggle is our responsibility to Jeju Island, where the sorrow of the April 3rd massacre is deeply embedded, that this is an expression of our conscience regarding the suffering Gangjeong residents, and that it is the demand of the times to protect and ensure peace for our children. We sincerely appeal to everybody who stands alongside us to protect Gangjeong Village and Jeju Island.

July 13, 2011

National Network of Korean Civil Society for Opposing to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We strongly condemn the government's crackdown on and sudden arrest of Jeju Gangjeong residents

In order to enforce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government and navy, the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Jeju police are using every means possible to suppress Gangjeong residents and the activists opposing the construction. Today, July 15, approximately 20 plain-clothed police officers raided the home of Gangjeong Village chief Kang Dong-gyun and arrested him. In addition, they also arrested Ko Gwon-il, chairman of the military base construction opposition committee, and peace activist Song Kang-ho. It is definitely a case of abuse by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as they arrested those who were by no means considering escape. Thus, we strongly denounce this crackdown on the Gangjeong residents and activists, who have fought against the construction for over four years, which just shows that the police authorities are a faithful puppet of the government and the navy. Furthermore, we strongly call upon the government to release them.

This is not the only case of oppression of the residents and activists by the government with the purpose of enforcing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as they are now confronting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construction project. Filing diverse lawsuits against the residents and activists, the navy has recently lodged a compensation claim of 290 million won against fourteen residents. They have also submitted an application requesting termination of the interference of 77 activists and residents, including the village chief Kang Dong-gyun. The prime minister's office urged the local Seogwipo-si government to blockade the entrance of the Joongduk coast farm road, which was the center of the resistance against the base construction. It is also said that soon Korea Electric Power will stop supplying electricity to the facilities in the Joongduk coast.

Surely this overall suppression by the government and the navy is nothing but an expression of their anxiety about the growing opposition to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and their intention to enforce the construction in spite of the opposition. They have disregarded a sincere appeal made by civil society to reexamine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a demand from the opposition parties to suspend the construction until a solution to settle the dispute over the construction is found, and the voice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to

suspend the construction while they investigate the flaws in the construction procedure. Kim Kwan-jin, Minister of the National Defense, has not kept his wor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suspending the construction while the investigation committee conducts the investigation.

We, however, warn with certainty that the government and the navy will have to face stronger protests should they enforce the base construction, disregarding the public opposition and the voices calling for explanation about the validity and legitimacy of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re are many residents who have been figh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putting up with numerous obstacles and sacrificing themselves, and there are many citizens supporting them. The base construction must be stopped before other adverse accidents occur. It is never too late. The government and the naval authorities, even now, must give up their obstinacy and stop the crackdown on the residents. Their actions to suppress the residents are totally unacceptable, destroying the environment gifted from heaven, and threatening our right to lead a peaceful life i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at, in order to protest the crackdown by the navy and to show our opposition to the naval base construction, we will be standing again in front of Daehan-Mun at six o'clock on July 16.

2011. 7. 15

National Network of Korean Civil Society for Opposing to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위한 농로폐쇄 및 공권력 투입 시도 규탄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평화롭던 강정마을이었다. 사시사철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강정마을의 이 땅 때 풍경은 피서객들이 여름을 즐기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경찰들이 점령한 강정마을은 행정대집행을 위한 무력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운에 휩싸여 있다. 제주도의 작은 농촌마을의 주민 누구도 이토록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지금 일손을 놓은 채 불안하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일강정을 지키기 위한 비폭력·비타협의 결사항전에 돌입하였다.

며칠 전 조현오 경찰청장의 전격적인 서귀포경찰서 방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청장은 해군기지건설을 저지하는 주민과 NGO의 활동을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강하게 독촉하였다. 과거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강제진압을 지휘하던 43의 기억이 절로 연상되는 대목이다. 경찰병력을 유지에서 제주도로 내려 보내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도 그렇다. 지금은 한국 현대사의 큰 생체기인 43이라는 제주의 아픈 역사가 강정에서 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해군 측도 제주해군기지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야 5당의 진상조사활동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갈등해결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기지공사를 중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연행, 구속하고,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경찰병력을 앞세워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 위협하면서 강제진압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안보에 관계된 것이라면, 국책사업이라면, 이렇듯 무적다짐식으로 강행해도 된다는 것이 정부와 해군 측의 입장인가. 정부와 해군 측의 유일한 문제해결 방식이 공권력을 동원한 강압적인 방식이란 말인가. 그렇게 해서 세우려는 제주해군기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명히 밝히려는 바, 우리는 강정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해군 측이 당장은 폭력을 앞세워 강정주민들과 활동가, 강정을 지키려는 시민과 정치인 등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부와 해군 측의 기지건설의 명분도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에서 시작된다. 맨 손으로 저항하는 주민들을 범과 공권력을 남용하여 탄압하는 국가권력 하에서는 해군기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한들 국가안보가 강화될 리 만무하다.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환경을 경시하며, 평화와 생명의 목소리를 짓밟으면서 구현할 수 있는 국가안보란 없다.

그리고 정부와 해군 측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여 구럼비를 콘크리드로 물어버린다면, 연산호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들의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면, 그리고 주민들과 제주의 평화로운 생존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은 더욱 큰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해군 측이 주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지 말고, 문제만 더욱 악화시킬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촉구한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정부와 해군의 공권력을 앞세운 치졸한 공세를 방관하지 말라. 강정마을이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도록 우근민 지사가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의원 역시 마땅가지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공권력 투입 앞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이유를 대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강정주민의 생존권적 저항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해 예의없이 색깔론을 입히는 조선일보 등 극우 언론들에게도 엄중히 경고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공권력을 앞세워 해군기지 공사를 폭력적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와 해군, 경찰 등에 의연히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강정을 지키기 위해,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제자율이 함께 나서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1. 7. 25

제주강정마을을 사랑하는 사람 일동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국제평화인사 기자회견
Press Conference by International Peace Activists to Call to Stop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on Jeju Island

일시 및 장소 : 2011년 7월 28일 (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July 28, 2011(thur) PSPD, Neutnamu Hall(B1)

주관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National Network of Korean Civil Society for Opposing to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암 촛스키를 비롯한 25명의 해외 인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세계 각지의 평화운동단체와 인사들도 제주 강정마을 방문 및 국제서명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해군 측이 공권력을 앞세워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어, 강정마을과 그 주변 지역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온 해외 인사 5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틴 안(미국), 암전문의이자 해양환경 전문가인 차잉옥 박사(미국), 군축문제 전문가인 데류 호이(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크리스틴 홍 교수(미국), 평화활동가이자 선교사인 루츠 드레서(독일) 등은 강정마을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정경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변연식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웹사이트 Save Jeju Island 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국제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1년 7월 27일 현재 2735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은 <http://signon.org/sign/save-jeju-island-no-nava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International Delegation Calls on President Lee Myung Bak
to Stop Construction of Naval Base on Jeju Island**

We are five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and we have traveled all the way across the Pacific Ocean to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residents of Gangjeong village who are resisting the construction of the ROK/US naval base that will turn their small fishing village into a target of a US proxy war against China. Our delegation includes a reverend, medical doctor, defense policy analyst, professor and writer. We are here to bear witness to the grav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the Jeju police against the villagers and activists. We are appalled by the violence used by the ROK Navy and Government to repress the nonviolent villagers and activists who have been calling for a just and democratic process.

Growing numbers of individuals worldwide have been monitoring the situation in Gangjeong village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We have grown increasingly concerned as more activists have been arrested, including Professor Yang Yoon Mo, peace activist Choi Sung-Hee, Village Chief Kang Dong-gyun, Leader of the Anti Base Construction Committee Ko Gwon-il, and peace activist Song Kang-ho. Today three remain in pris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ve committed no crime. Instead, these individuals have used every possible democratic means to challenge the unilateral decision by the ROK Navy to construct the base in their small fishing village. In their pursuit of peace, they have been arrested, dealt heavy fines and barred from entering the waters and land that they have known and lovingly preserved for generations. This is a frightening indication of the return of authoritarian rule by the Lee regime and stains the reputation of South Korea's hard-won vibrant democracy.

We are inspired by the courage of the villagers who have steadily resisted the

base construction for four long years, living in tents and placing their bodies in front of cement trucks and tractors that have destroyed their way of life. On Monday, as 1,200 police descended upon Gangjeong, politicians and members of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joined residents who chained their bodies in a human fence to prevent the trucks from tearing up the road into the construction site. This is the power of humanity to stand up for what is morally and ethically right, and we, as observers of the global peace community, join these courageous leaders in their resolve to keep Jeju the Island of Peace.

Our time here coincides with the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formally ended the Korean War. We know that the unresolved Korean War has served as a justification for the build up of arms, the expansion of military bases and the intensified US-ROK military exercises. As people living across the world, we are working to bring awareness of how the naval base in Jeju will forcibly destroy the livelihoods of farmers, fishermen and women sea divers and the rich marine ecology surrounding them - all in the name of building a base to stage Aegis destroyers that will be central 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At a time of severe global recession, we as a global community can no longer afford to spend billions of dollars daily on a false notion of military security that only leads to the death of human life and destruction of our planet.

2011. 7. 28

The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
www.savejejuisland.org

<기자회견문>*국문번역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평화인사들의 기자회견문

우리 국제사회 5인은 강경주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 강경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작은 어촌을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바쳐놓을 한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항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회 대표단은 목사, 의사, 국방정책 전문가, 교수, 그리고 작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제주 경찰이 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행한 심각한 수준의 인권유린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군과 정부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의와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지난 몇 달간 세계 각국에서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강경마을의 상황을 지켜봐 왔다.

양운도 교수와 최성희 평화활동가, 강동균 강경마을회장,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위원장, 그리고 송강호 평화활동가 등 체포된 이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이 여전히 구속되어 있다.

이들은 그들의 작은 어촌 마을에 기지를 건설하려는 해군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항하며 모든 수단을 민주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들은 평화를 추구하던 중에 체포되었고, 많은 벌금을 징수 당했으며, 그들이 잘 알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애정을 갖고 보존해온 땅과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독재로의 회귀를, 그리고 어렵게 달성한 확고한 한국 민주주의의 명성에 오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여 지난 4년이란 긴 세월 동안 싸워온 강정마을 주민들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텐트에서 지내며 그들 삶의 방식을 파괴한 시멘트 트랙과 트랙터 앞에 서야만 했다.

월요일 1,200명의 경찰들이 강정마을로 내려갔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트랙들이 건설부지로 들어가는 길을 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몸을 최사설로 묶어 인간 울타리를 만들었으며, 정치인들과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들과 연대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위한 인류애의 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평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려는 이 용감한 리더들과 함께하려 한다.

우리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휴전협정 기념일과 일치한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이 군사력 증강과 군사기지 확장,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미군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이지스함의 정박을 가능케 하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농부와 어부, 그리고 해녀분들의 생계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지에 대해 알리려고 한다.

세계 경제 불황의 시기에, 우리 전 세계 공동체는 지구의 파괴와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 안보에 대한 헛된 환상에 하루 수백만 달러를 소요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2011.7.28

The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
www.savejejuisland.org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주민투표 거부!

여성, 아동,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8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했다. 2주 뒤인 8월 24일에는 주민투표가 강행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아동, 여성, 학부모 단체들은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민투표 운동 기간 동안 아이들 밥 한 끼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나누고 형세를 낭비하려는 나쁜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평등한 교육의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치농음에 혈안이 된 관계 투표일 뿐 아니라 서명과정에서 허위, 대필 등 불법이 드러난 불법투표이다. 주민투표 문안 역시 청구인 서명지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취지일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계획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꿈수이자 시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다름없다. 더구나 학교급식이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서울시장의 발의 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교육자치의 법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핵심쟁점은 학교급식을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실시'를 할 것인지, 소득에 따라 '선별적 실시' 할 것인지이다. 오세훈 시장의 소득하위수준 50%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차별적 실시' 주장은 아이들의 학교급식비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복지비가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할 교육비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실시시키만을 내세우는 '단계적 실시'나 '전면적 실시'나로 본질을 왜곡해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를 대면해야 할 시장이 시민과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에 혈안이 되어 헌법에 무시하면서 시 재정의 0.4%에 불과한 695억원을 우리 아이들의 밥값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182억원의 형세를 들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로 밥그릇까지 구분하면

서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실정에 개탄한다

세상 어느 부모가 제 자식 밥그릇 빼앗는 것을 두고 보겠는가? 누구를 위하여 투표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허황된 정치논술에 맞장구칠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조작된 민의에 허위, 불법으로 경찰된 오세훈의 정치행각에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여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권 가르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차별적 급식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기죽이고 왕따 시키는 반교육적인 행태임을 명백히 밝힌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의무급식이자,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 문제로 한 방에서 잘사는 아이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 발의를 불법적 행위이자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며 서울시민과 학부모, 여성, 아동,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인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 낼 것이다.

2011년 8월 10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아동, 여성,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일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행회의

성명

제주 강정마을회장 구속은 두려진압의 신호탄

- 대화어른 목살하고 공안 본위기 조장하는 군, 검찰, 보수언론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24일 서귀포경찰에 의해 체포·연행된 강동군 마을회장과 주민 1명, 평화활동가 1명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행자 권원 석방 약속을 지퍼민 경찰의 신의 없는 행동과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검찰의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 역시 25일 체포돼 아직(26일)까지 풀려나지 않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오히려 마을주민과 협상했다는 이유로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다. 우리는 마을의 대표인 강 회장에 이어 종교계 어른인 문 신부까지 체포한 경찰의 태도에 경악한다.

2. 지난 24일은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과 갈등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예결소위 명단이 국회에서 공개되는 등 국회 논의가 시작된 날이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해군이 보낸 듯이 크레인을 조립하기 시작한 것은 누가 보기에요 공사체제로 간주할 만한 것이었다. 여기에 놀란 마을 회장과 주민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항의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을 따치 가다렸다는 뜻이 신속히 재포했다.

3. 이런 경황을 잘 알고 있는 서귀포 경찰서장은 주민들의 합의를 경청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대응한 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고, 검찰은 대화의 최종제널인 마을 회장 등 3인에게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다. 게다가 검찰은 오늘 공안대행회의까지 열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등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히기까지 했다.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이런 처사는 제주 강정마을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유 있는 갈등을 대화와 협상 없이 오직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방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아집과 만용이다.

4. 우리는 정부에 이번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고,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사과하지 않고 계속 공권력을 투입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세월호 사태'와 같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행정부에 물을 것이다.

5.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일부 인터넷 보수 언론에도 엄중히 경고한

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친북세력, 중북세력, 반정부 세력 등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008년 광화문-시청앞광장을 가득 채운 60만 시민을 상대로 했던 이념논쟁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과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 모두 숙청해야 할 상대인가. 보수 언론은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 도민과 국민을 괴인 취급하는 보도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6. 국방부와 해군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없이 무력을 사용하며 들어오는 해군기지는 마을주민들에게도 제주도민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제주 강정마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우리는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1. 강동균 마을회장, 문정원 신부 등 연행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2. 조현오 경찰청장은 제주도에 파견한 육지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제주도민 앞에 공권력 투입을 하지 말겠다고 약속하라.
3.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은 먼저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에게 사과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공사 중단을 약속하라.
4. 보수 언론은 해묵은 색깔 논쟁을 중단하라.

국회는 자정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시킨 18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18대 국회는 국민 앞에 사퇴하고, 강용석 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국회 역사상 최초로 성희롱 국회의원 퇴출이 눈앞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좌초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반대표로 부결된 것이다.
우리는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낮은 인권 수준을 보여 주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18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준 한나라당은 명백한 ‘성희롱 비호 정당’이다.

이번 부결의 명백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오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으로 반대표가 과반수 이상 나왔다.

한나라당이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것과 다름없다.

특히 김병오 한나라당 의원이 강용석 의원을 막달라 마리아에 비유하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을 인용하여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 정도 일로 제명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의 발언에 한나라당 의석에 서는 ‘잘했어, 살신성인 했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발언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이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 비호이며, ‘재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성희롱·성추행 국회의원을 비호해 온 한나라당은 오늘 강용석 의원 부결로써 ‘성희롱 정당’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반복되는 한나라당의 성희롱 비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용석 의원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라! 강용석 의원은 이미 법원 1심판결에서 의원의 상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헌정사상 초유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 자체가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강용석 의원은 남은 몇 달의 임기에 구차하게 활동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즉각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자정력을 상실한 18대 국회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결국 오늘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국회 내 윤리심리기구에서 윤리 제명안을 최종적으로 폐기시켰다. 국민들은 자정력을 완전히 상실한 18대 국회의 반인륜적인 작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성희롱 국회의원 강용석의 제명을 부결시킨 18대 국회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2011. 8. 31

성희롱 국회의원 최출 - 강용석 의원 제명 촉구 긴급공동행동

시민사회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녹색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

언론/방송계 : 한국이나온서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청년 : 한국청년유년자연맹, KYC

여성단체 : 여성정치체제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전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광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주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어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어성의전화, 한국어성장애인연합, 한국어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 평화의 목소리를 짓밟는 정부와 공권력의 횡포를 또 다시 목도하였다. 오늘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에 경찰병력 600여명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유기, 홍기룡 등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강서 신부 등 35명 이상이 연행되었다. 오늘 새벽 이동을 시작한 경찰병력은 농성현장 뿐만 아니라 구림비와 강정원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이 날 강정마을은 외롭게 고립된 채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것이다. 이 틈을 타 해군은 구림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중대사거리와 강정포구 주변의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9월 3일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사를 보내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 행위에 깊이 분노하며,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과 무더기연행 그리고 구림비 폐쇄에 나선 정부와 국방부, 검찰,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이 사태는 정부·국방부·검찰·경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보여준다. 주민들이 왜 저항하고 있는 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정부와 공권력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뿐만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만은 안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해 온 국회와 제주도의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를 일거에 무시한 것이다. 오로지 물리력과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부치기만 하면 된다는 이 정부의 뼈뼉어지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국책사업일 뿐더러, 그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군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항변과 호소를 들은 의면해은 오만한 정부와 국방부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도, 그 몫을 고스란히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폭력까지 자행

되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최근의 범원의 가치분 결정은 또 어떠한가. 가치분 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치분 내용 중 어디에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정당하다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던 말인가.

이에 우리는 분명히 밝혀준다. 정부, 국방부 그리고 공권력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강정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중단없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들의 정당한 외침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정으로 가는 평화행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 천 수만 년을 거기에 살아온 모든 생명들을 위한 구원비를 찾아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강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대화 대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와 공권력이다.

2011. 9. 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남북해의 공동보도문>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 개최에 대해

2007년 10월 4일 온 겨레의 환희와 감동 속에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15시대의 전진을 더욱 힘차게 추동하고 나라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보다 넓은 길을 연 또 하나의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10.4선언 이행을 위한 다방면의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고 통일의 기운이 나날이 높아져 가던 역사의 현장들을 통해 우리는 통일의 그날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우며 기쁨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염원과 의지에 맞게 10.4선언 발표 4돌을 민족 공동으로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로 하였다.

행사명칭은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약칭 10.4평화통일축전)으로 하며, 행사는 10월 3일~4일까지 인천과 개성을 오가며 개막식과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평화통일대회, 공동도론회, 부문별 상봉모임, 평화음악회, 폐막식 등을 하기로 하였다.

2.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념행사들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밝은 미래가 있고 대결의 국면으로 치달는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온 겨레의 마음과 의지를 모아 10.4선언 4주년 남북공동행사 성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1년 9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평화선언
 생명평화의 섬 제주도는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

지난 2005년 정부와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였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은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는다.

바다와 육지에 폭히 수 킬로미터의 거대한 빗장과 철조망을 둘러친 초대형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태문도 거지도 도독도 없는 제주도의 정신과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길인가? 수천 년을 평화롭게 살아온 주민들을 변칙과 편법으로 갈라 세우고 회유되지 않는 주민들을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것이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는 길인가? 중국을 겨냥해 미군도 이용할 해군전초기지를 건설하는 일이 평화정착을 위한 탈냉전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고자하는 제주도의 미래인가? 과연 이치스함과 최선에 전향할,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와 양립할 수 있는가?

사찰 맑은 물이 솟아나는 천혜의 강정마을은 제주 역사의 시원지 중 하나이다.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태를 이어 평화롭게 살아온 제주와 전통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정마을의 대지와 강 그리고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주변에서 제주도 칠천년의 역사가 축적된 유구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름다운 구럼비 바위와 풍요로운 강정의 바다를 콘크리트로 뒤덮는 것, 유구한 제주문화의 산실에 철심을 박은 펜스를 둘러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최첨단의 군함 20여척을 결집시키고, 심지어 외국의 군함까지 끌어들여 소모적인 군사패권경쟁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주도는 냉전과 대결의 섬이 아닌 세계를 향한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지금 동아시아에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이 야기할 군사적 긴장과 갈등 속에서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화해와 상생의 미래가 동등기 어렵다.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온전히 가꾸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십억 주민의 공동 번영의 터전인 동아시아의 새로운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권법과 변칙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구럼비와 강정전에 깃들어 살아온 주민들을 비롯한 뜻생명들의 평화적 생존의 권리는 누구도 박탈하거나 꺾박할 수 없다. 주민들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공권력의 권법과 변칙을 안보리는 이름으로 혹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서는 안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자치정부는 주민여론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간소화 또는 생략하는 방식으로 정적결정 과정을 왜곡해왔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싹틔우는 나라의 국가공권력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구속자를 석방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5당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미 기지건설의 절차와 내용이 타당했는지 재검토하고 주민감동을 치유하기 위해 공사를 감정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7대 중단 수장을 역시 정부와 주민이 평화적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칙으로 획득한 형식적 적법성만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면서 이어 항의하는 주민을 무기로 투옥하거나 주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민형사상 처벌로 압박해 오고 있다. 주민대표들을 가두고 협박하면서 무슨 대화가 가능한가? 공사를 잠정중단하고 주민대표와 평화활동가들을 석방하는 것은 주민과의 성실한 대화의 기본전제이다. 우리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석방을 위해, 그리고 민형사상 그들이 지게 될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의 고통에 연대할 것이다.

구럼비 주변 문화재 조사발굴을 위해서도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구럼비 주변에서 제주도 수천 년간의 주거문화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문화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럼비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높은 장막으로 차단한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문화재발굴은 해군이 둘러친 펜스의 기둥 바로 아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문화재 전문기관조차 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방조하고 있다. 문화재를 훼손하는 공사강행은 그 자체도 위법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발굴과정을 시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낱말이 공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추진과정에 수많은 절차적 내용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시설이 기항지인지 민군복합항인지 아니면 해군전력기지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응하여 제주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이 국정조사에서 해군기지건설이 과연 세계평화의 섬과 양립가능한지, 새롭게 시작되는 동북아시아

아 시대에 걸맞은 일인지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구랍비 바위와 강정마음을 살리려 나서는 길이 곧 평화로 가는 길,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길이다.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은 빈손으로 “강정을 살려줌서”라고 예타게 외치고 있다.
그들의 외침은 오로지 평화적 방법에 호소하기에 더 간곡하고 절박하다. 우리 모
두가 그 종인이다. 정부와 국회는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강정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와 주변국 주민들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공존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길이 비록 좁아 보일지라도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평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구랍비를 살리고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는 길, 우리 모
두를 살리는 그 길에 모두 함께할 것이다.

2011년 9월 20일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 비상시국회의 참가자(위임자 포함) 375인

정당/정치인

김진호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이철하 의원(민주당 대표), 권영길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이대경 의원
(민주당, 새당 제주해군기지 건설조사단 단장), 정동영 의원(민주당), 장기복 의원, 김진성 의원, 최영숙 의원, 홍
희덕 의원, 고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오국만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김은주 진보신당대표변호사변, 안효상 사회당
대표, 김영선 새누리당,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

종교계

강정연 (말산은혜교회), 강정규(선부, 수원교구 대표), 강해운(원불교 환경연대 교육), 고영기(성문밖교회), 고영근
(외년함계 사무처장),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권오준(선부, 춘천교구 총무), 김경일(성공회 신부, 생명평화길
사 운영위원장), 김경호(제주삼기 교육위원장), 김동현(제주삼기 공동대표), 김태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
봉순(선부, 전주교구 총무), 김석태(선부, 대전교구 총무), 김성복(NCC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영익(선부), 김
영철(홍불을여는그리스도인을 집행위원), 김승희(천도교한울연대 사무총장), 김인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
무), 김종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김중수(홍불을여는그리스도인을 집행위원), 김중현(함계가는교회),
김준학(선부, 부산교구 대표), 김진화(선부), 김태리(선부, 부산교구 총무), 김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
정익(한빛누리 기피이사), 김종영(선부, 영주교구 총무), 나승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처장), 남요성(교회
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노벨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박재일(선부), 문유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단),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득중(대담교회), 박승중(대전 평화마을공동체 교회 대표), 박승일(전국
교회자립의평화실천협의회 부의장), 박오환(선부, 인천교구 대표), 박종순(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영석(예
수삼기 공동대표), 방인성(외년함계 공동대표), 배광희(선부, 춘천교구 대표), 백남준(NCC 정의평화위원회위원
장), 백승민(조계종 환경위 사무국장), 백종국(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범인(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변하
식(선부, 광주교구 총무), 박 지현(올화사주자) 송남훈(선부), 김동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송길(선부, 원
주교구 대표), 안송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양재일(예수삼기 환경위원장), 양인일(가람교회 목사), 양홍(천
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오남현(선부, 대전교구 대표), 오재택(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유이원(선부, 수도권
대표), 윤인중(2012생명평화기록교령 집행위원장), 이강식(선부, 서울교구 대표), 이상학(선부, 부산교구 대표), 이
인준(원불교 중앙총연합회 회장), 이영일(선부, 광주교구 대표), 이진욱(NCC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재학
(NCC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호일(NCC, 제주해군기지건설지속저항국민연합회대표최희희) 공동집행위원장, 임

장인(한국문화자정회평화실천협의회 회장), 임종원(신부, 제주교구 대교), 장동훈(신부, 한총합(제주교구장기주현전 국가사회 대교), 영도영(신부, 안동교구 총무), 장석환(신부, 피정부교구 대교), 정문형(교과과정실천부 대교장위원장), 정은숙(교과과정실천부 공동대표), 정영일(가톨릭사회선교선대의 상담대표), 조영익(신부, 인천교구 총무), 조영진(상생선교선대의 대지형회복지원장), 조현정(예수살기 공동대표), 제헌(전 조계종 총무원장), 권근(광교평화연대 상담대표), 차복(대한반도예학대학총동맹 사무국장), 최유은(성서한국), 최재봉(기독교사회선교선대의 대교 사무국장), 최재환(신부, 수원교구 총무), 최한규(예수살기 총무), 최홍수(신부, 가산교구 총무), 함재승(신부,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현정진(신부, 제주교구 총무), 황진현(한국문화자정회평화실천협의회 총무), 황영구(한빛누리본부장), 황상진(민주교구장기주현전국가사회)

문화예술계

장인영(비오이아주베르디), 장소영(기회 <레오왕>, 김순(감독 <소성경필리피>, 최유수(인디스튜디오대표), 구자환(감독 <희곡도시>), 김정욱(감독 <영재천의가>), 김정형(감독<동남기 과외가>,<뜨거운 것이 좋아>), 김교훈(레오 이아주 베르디), 김주(감독 <고강>, 김동원(감독 <송환>, <공나지않은 전쟁>, 김동형(서울독립영화제사무국장), 김병준(감독<우리화>), 김병(한국독립영화협회 구분대표위원), 김진(감독<가야당>), 김수현(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김유리(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위원), 김윤정(배우), 김은정(감독<Squabbles>), 김일권(교무부 사무총괄), 김희옥(배우<안두리>), 김정훈(제주서대아일랜드), 김보광주(감독<수상운100>), 김은실(민주시민 미디어센터), 김진아(프로듀서), 김원기(민주시민미디어센터), 김광남(감독<의가>), 김희열(인디스튜디오 제작지원장), 나무늘보(감독<우리는 이주노동자이다>), 남인영(영화평론가), 남태우(대구영화사대아일랜드대표), 남희 독립영화협회 대표), 오종환(시)한국인예총 부총장, 오성진(감독영화 <프로듀서>, 민동현(감독<눈부신하루>), 민홍근(감독 <희곡,광>), 박광우(장문전국영화제 대표그래머), 박성미, 박재환(시)한국인예총 상임이사, 박정숙(감독<역사상 1988수미대외기>), 박정호(민주시민미디어센터), 박원지(디자이너), 박원진(영화평론가), 변성진(영화평론가), 변영주(감독<달의교실>), 부지필(감독<예정연>), 서운은(감독<OX>), 신은실(영화평론가), 신하영(시)한국인예총 회장), 인혜남(감독<나의 마음은저지 않았다>, 양기환(스크린리터뷰화연대 이사), 장유승(영화평론가), 장승효(감독<레지저 왕>, 오석훈(시)한국인예총 상임이사, 오주연(제주영화제 사무국장), 원승환(감독<영화학살의 원천>), 유동진(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 유순용(시)한국인예총 상임이사, 유경교(감독 <가시없는,뜨거운 눈>, 윤석재(감독<수미>), 이영남(감독<달리기>, 이난(감독<평범한남자>, 이종우(시)한국인예총 상임이사, 이두나(감독<여유>), 이수원(시)한국인예총 사무총장, 이상호(프로듀서<소장날의 끝>), 이송희(감독 <후회하지 않아>), 최원주(감독<살음이 있어>, 이은진(시)한국인예총 상임이사, 이복숙(시)한국인예총 부회장), 이연희(인디포드 대표그래머), 이종규(감독<라유에서 온 편지>), 임은애(감독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 <외이 키> 프로듀서), 임종희 감독(장안영,비평가 노태), 장은주(감독<안과 밖>), 전승호(감독<소월산양>), 정경희(감독<고기도시>, 정우철(감독<사랑이 무서워>), 정지연(영화평론가), 정지현(감독 <남부군>, <화산정령>, 정희실(시)한국인예총 부회장), 조기복(과외인디본지운영자), 조성남(감독<레드맨>), 조영기(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은성(프로듀서<아이지저지름>), 조진규(감독<조복>), 조희(감독<구성의 정교함>), 유은숙(유은숙프로듀서), 주현숙(감독<빛그녀>, 최연아(인디다큐페스티발 사무국장), 최유경(한국독립메나비어협회 사무국장), 최연실(감독<저수지저지름>, 최은진(영화선언노조 위원장), 최화영(감독<백시불무스>), 최준원(인상미디어 센터대표), 허옥(유엔대표), 고수, 한총합(제주서대아일랜드)

시민사회단체/학계

강노희(중앙대), 강동진(제주살기아름답게 회장, 구수 강), 강상진(평택대학교총장 소장), 강종구(평화통일운동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강태호(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고경일(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고영진(제주장애인예술 부회장, 고부윤(교협 기획위원장), 고성환(평화누리 공동대표), 고성환(서울대), 고유기(해운안사거리 저지회대표)실천협동위원단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구수 강, 권가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권기혁(시민사회단체대의 공동대표), 권오현(민가협담당수 후원회 집행위원장), 김경순(한국여성민우회소장), 김경희(헌선대 명예교수),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교번(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규희(학계연광 공동대표), 김기욱(한성대),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식(시민사회단체연대의 운영위원장), 김남근(연호사, 김여정), 김동원(영화제작 연구원), 김두현(영화제작연구센터 대교 사무국장), 김명준(민주주의사회정착추진기)단체연대의 공동대표,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유진(민주연선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진석(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연회 회장, 김성일(경희대), 김재현(이음대), 김승숙(울산대), 김진재(민주주의실천연구회) 연회 회장(연호사), 김유수(민주여성평화통일 중앙회의 회장), 김재현(통일전문기자), 김정진(울산교과 대표), 김정주(학술단체협의회 연구위원장), 김재남(학계연광 집행위원장), 김우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이음대), 김진태(경희대), 김진희(경희사이버대), 김형태(민주연선위원회 이사), 김희재(학계연광 연구위원)

소장), 나승순(포구동일업연주연합 남측본부 명예회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연순(대구공무
 소나라 공동운영위원장), 노수희(법민련 서울연합 회장), 노경진(전교조 부위원장), 윤미경(사)평화연구소 사무총
 장, 박기훈(상당대), 박정(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박대균(연권재단 사무처장), 윤미경(사)평화연구소 수석부위원
 장, 박재민(서울대), 박성중(대전평화여성공동체대표), 박성환(성균관대),박순실(공공대 교수, 민주실천연구소
 원장), 박영숙(대덕포럼 이사장), 박용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원익(참여연대 평화사무처장), 박이은(삼가톨릭대),
 박정숙(전국여성노동조합 회장), 박재민(전국민족민주주의총협의회 사무처장), 박우민(변호사, 참여연대), 박
 중(기독교민주실천위원회(기실)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 박진섭(광혜지평 푸소장, 박호진(전교조 사무처장),
 박기희(제주군사기적지서평화위원회상임위원회의상임위원회의 상임공동대표), 배성민(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장), 배종원(평화포럼총동무이사장), 배연희(국회민주연대 대표), 서관호(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서
 창진(환경정의 소장), 서유익(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서정환(민교협 공동의장), 상일권(경희대), 손이희(전국어
 성연대 공동대표), 손운정(영광포신업연교 총무), 손호익(서당대), 송기훈(민주주의법학연구소 기획위원장 / 전북
 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순환(가톨릭대), 신우주(민주주의법학연구소 총무위원)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안길영
 에(주한미아동복지원운동본부 공동대표), 안병욱(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안정화(한국기술교육대), 안지훈(한국
 진보연대 사무처장), 엄은희(부산대), 이복희(평화포럼드노어성회 상임대표), 임종근(평화재단), 오창익(민주주의법
 학연구소 대학협력위원총 / 여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성숙(올해는하늘교육시민포럼 공동대표), 오재희(아시아
 교육연구소 원장), 오창익(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오창익(인간실존시민연대 사무총장), 오하민(평화포럼사무
 처장), 오해민(경동성대 제주예과기초전설복지문화재단대학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유성호(연남대), 유호재(충북
 대), 윤기진(녹색연합 사무처장), 윤미경(한국성전대문화대학협의회 상임대표), 유은희(연희대 교수, 문화학(한국
 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익(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광익(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이규태(법민련 남측본부 지
 장),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대훈(참여연대 평화근축센터 집행위원), 이도훈(한상대), 이병호(경희대), 이병(한겨
 레운동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상원(전 육대스프 한국위원장 / 서당대 법학전문대학원), 임부영(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은중(송성대), 이상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상희(참여연대 평화사무처장), 이윤
 선(시민연대연대회의 전 공동대표), 이재영(동북이평학교육원 원장), 이철우(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광연(법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지근(무기제조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문화재단대학회의 공동집
 행위원장), 이화영(북극국가외교보태평양총위협시민회의 상임대표), 이태동(평화학물론 이사장), 이형주(재직자들
 운영위원장), 이효숙(민주주의법학연구소 학술위원장 / 서당대 법학전문대학원), 임부영(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임소희(나눔문화 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선미 소장), 장영숙(변호사, 민변), 장익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수경(전국어성연대 제주동일업위원장), 장경민(평화포럼드노어성회 집행위원장), 장경호(평화포럼대구시민연대 상
 임대표), 장정훈(이구대), 정미리(상해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병기(영남대), 정옥희(평화포럼대표), 대
 표), 정훈(고려대), 정태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정현진(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정영태(참여연대 공
 동대표), 정현숙(홍사단 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정혜미(연희대), 정혜숙(연희대 교수), 조경철(제주중앙야구회 부
 회장), 조문순(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가톨릭대), 조병태(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순익(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회장), 조순현(민주주의법학연구소 대학협력위원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조영진(법무법인 동화), 조
 영희(평화포럼드노어성회 이사), 조희미(민주화물러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주경복(한국대), 주영선(환경운동
 연합 공동대표), 지구망(학술단체협의회 학술위원장), 정희(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갑수(서울대), 최갑주(농민운동
 직하는모임 대표), 최영호(연 민주사회총위연호사오성회 회장), 최사익(평화재단연구원 대표), 최병애(이성인연
 속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최영준(다행애 운영위원), 최영태(전남대),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소 학술위원장 /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황승철(대덕포럼 이사장), 환안중(전교조 부위원장), 한성익(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
 중희(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허갑수(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장), 허길(재직자들 대표), 홍성희(당지대 교수, 통일
 포(학술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황길환(수한미아동복지원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상 375명

10.4선언 발표 4주년, 정부의 민족공동기념행사 봉쇄에 대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입장

오늘은 10.4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다. 역사적인 그 날의 선언에 대해 오늘 남북 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10.4선언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10.4선언이 발표된 지 4년이 되는 오늘 다시 물어 보건데, 10.4선언의 좌절은 명백히 미사의 후퇴였다. 10.4선언에 담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 실현되었던들 서해에서의 군사충돌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서해는 공동어로구역 속에서 남북 어민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10.4선언이 실현되었다면 개성공단은 1단계 설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고, 북의 해군기지인 해주에서도 지금쯤은 남북경제특구 통사가 한창일 것이다. 신의주로 가는 길로도 개통되어 현재의 북중 경제협력도 남북의 합심 속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을 것이다.

대결로 허비한 시간이 안타깝다. 암약해서 무너뜨리겠다는 이 정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국민이 치른 피와 땅의 시간들이 고달프다.

민족공동행사인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 행사는 개성과 인천에서 치를 계획이었다. 남북협력 공간인 개성공단을 다시 거래에 알린과 동시에 인천시 관내 서해 5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도를 찾아보자는 뜻이 이 구상에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여전히 5.24의 틀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이 정부의 말인즉 “5.24조치의 이행과 남북교류협력 진척유지 차원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남북공동행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이 정부는 1988년 7.7선언 이전의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에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대북봉쇄조치를 발표했을 때 역사가들은 남북관계 역사에서의 긴 후퇴라 말했다. 그것은 남북의 교류가 시작된 7.7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었고, 냉전의 사고에 갇혀 대결로만 치달아 왔던 과거로의 퇴행이었다.

지금 5.24조치가 실패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대북압박은 북중협력을 안내했고, 한중은 더욱 밀어져 서해의 군사충돌에서 이 정부의 외교력은 바닥을 보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손에서 논의되는 국면으로 이어졌던 것이 올 초까지의 모습이다. 그때 이후부터 국민들은 5.24의 폐해를 경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정부는 1988년의 7.7선언을 이제 겨우 넘어간 듯 행동하나 당시의 창구 단일화 논리에 다시 갇혀 서성댄다. 이 정부는 종교인들이 정부의 뜻과 무관하게 밀가루를 지원해 나서자 그때서야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인도 지원 단체들의 평양방문도 허용했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종교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종단 수장들의 평양방문도 허용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주무장관도 바뀌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로부터 얼마 후 박웅길 장로의 소청에 따라 박 장로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개성으로 내려오려는 북의 특사와 장래위원회 관계자의 만남을 봉쇄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크게 분통을 터뜨렸다. 과거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는 이 정부에게 기존 없는 '자외선'으로 존재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진정성도 없다. 그리고 명백히 하긴대 이런 퇴행성으로 미래의 남북협력은 감당할 수는 없다.

10.4선언은 지금 여전히 빛나고 있다. 평화의 방법이 그 속에 있고 남북협력의 길이 거기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국민과 더불어 이 뜻을 나눌 것이며, 국민의 지혜로 더 나은 민족 번영의 길을 찾아나갈 것이다.

2011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북공동선언들을 적극 이행해나가자!

오늘 재회의 온 거래는 자주통일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안겨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4돌을 맞이하고 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역사적인 10.4공동선언은 우리의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에 마련된 또 하나의 소중한 민족적 성과이다.

그러나 오늘 10.4선언 이행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으며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남과 북, 해외의 온 거래는 뜨겁게 손을 맞잡고 통일의 대풍로를 넓혀나갔던 6.15시대를 되돌아보며 이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드넓은 각오와 의지로 가득 차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을 바라는 거래의 강렬한 의사와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의 채택과 이행으로 남과 북은 불신과 대결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털어내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역사적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과 지맥이 이어지고 남북 사이의 다방면의 왕래와 접촉, 통일회합이 활발히 진행되어 댕꾸로부터 한라에 이르는 온 삼천리강도가 통일의 환희로 들끓었다.

남북공동선언이 가져온 이 거대한 현실과 민족사적 의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재개하고 적극 장려하며 그것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되게 만들어야 한다.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남북공동선언을 잣대로 하여 온 거래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거나 그 이행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철저히 배격해나가야 한다.

동족 사이의 적대와 대결을 끝내야 한다

남북 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결코 불화와 적대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달라도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화합하고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선언들의 이행과정에서 실증된 역사적 현실이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과 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

하고 존중하며 용인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동족 사이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온갖 행위들을 폐기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저지시키고 이 평위에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당면하여 남북 사이의 무력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야 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남과 북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날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활동은 가로막히고 공동선언 발표 이후 해마다 진행되어온 민족 공동의 통일행사들이 4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부정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와 각계각층 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교류, 협력을 재개하고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 장애들을 제거하고 남·북·해의 각계각층 단체들 사이의 통일논의와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전개해나가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해내의 각계각층의 단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민족적 대의를 앞에 놓고 계급과 계층, 당파와 소속, 주의주장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보조를 같이하며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분열을 폐기하고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의 강력한 단결을 통해 희망의 새 연대기를 기록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대단합은 곧 평화이며 통일이다.

해내의 온 겨레의 화합과 단결로 반목과 대결을 끝장내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여 평화와 번영의 통일조국을 건설해나가자!

2011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지난 9월 24일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동두천 경찰은 CC TV를 통해 가해자가 미2사단 소속의 적슨(21세)이병임을 확인했다. 26일 동두천 경찰이 미군 측에 요구하여 가해자가 출두했고 범행을 시인했으나 신병은 미군에 인계되었다. 그리고 결국 지난 10월 6일, 가해자는 경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가해자 적슨 이병은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9월 28일, 동두천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하자마자 미2사단장과 미국무부 부장관, 동아대 차관보 등이 '유감표명, 한국인에게 사과, 긴밀한 협조' 등을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한미FTA 비준이 임박한 시기에 개최되는 10월 13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두 여중생 사건처럼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폭발할 것을 염려한 이해적인 조치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동두천 주한미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7개월 전 똑같은 지역, 부대에서 노부부 폭행,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미2사단장은 사과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대책 없이 입으로만 했던 사과가 결국 이번 주한미군의 성폭력 사건을 예비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동두천 성폭력 범죄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주한미군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에서 미8군 R이병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까지 빼앗아 10월 5일 마포경찰서가 가해자 R 이병을 붙여 조사했고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의 동두천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니까 마포에서 발생했던 주한미군 성폭력 사건도 뒤늦게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주한미군 외 성폭력 사건에 한국 경찰은 이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입에 달린 사과를 하는 미국의 과립치한 행태를 두고 봐야 하는가?

우리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범행수법도 낱이 갈수록 잔인하고 끔찍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성폭력사건을 이
대로 방치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들끓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미국 오
바마 대통령이 진정으로 동등하고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생각한다면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하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범죄자가 확실한데도 한국경찰은 당장 구속수사 할 수
없고 재판을 하더라도 한국경찰은 항소권이 없는데 주한미군은 항소권이 있는 기
가 막힌 형상이 한미SOFA다.

이로 인해 그동안 주한미군의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피
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미 당국은 이처럼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라!

최근 한국사회는 한 영화가 제기가 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성폭력 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수없이
자행되어온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예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주권국가
의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

피해자 10대 여성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수사과정, 재판과
징에서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과 언론, 지역 시민사회가 합
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주목할 것이며 우리
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
전여성단체연합(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서울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
연대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
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
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주한미군 10대 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한국 여성단체의 입장>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으로 여성인권 보호하라.**

2011년 9월 17일 서울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강간하고, 9월 2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4시간 동안 강박하게 성폭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잔인한 흉악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으로 인해 한국 경찰이 주한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해서 경찰의 긴급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늦게 사건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도출된 후 한국 경찰은 동두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구속 기소하였다.

2001년 한미SOFA 개정된 이래 지난 10년간 미군과 미군속이 일으킨 사건만 4,618건이 있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강도와 폭행,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 (zero tolerance)을 공식화하고 있고 신병교육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문제발생시 미군 개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범함을 벗어나가고 미군의 안전을 제1원칙으로 들고 나와 범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불평등한 한미SOFA 때문에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경찰의 구속 수사나 검찰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장을 도망치면 된다는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민간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의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태는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좌절감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주장하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21세기 전략동맹관계'라는 한미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10대 여성에 대한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한다. 미군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라.

2. 주둔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해 범한 범죄는 한국의 사법권에 따라 처리하고 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가 명시되도록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한다. 미군이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한국 경찰의 구속 수사를 보장하고 한국 경찰의 구속 기소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3. 한미SOFA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범치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도 양국의 배상전례 중 보다 더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소과에 규정해야 한다.

4. 우리 여성들은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현행 소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불평등한 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국내외 양심세력과 연대할 것이다.

2011.10.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駐韓米軍による10代の女性への性暴力犯罪に対する韓国女性団体の立場
不平等な韓米駐屯軍地位協定 (SOFA) を改正し、女性の人権を保護せよ

2011年9月17日、ソウルで駐韓米軍の軍人が10代の女性を強姦し、9月24日には京畿道の東豆川(トンドゥッチョン)市で駐韓米軍の軍人が10代の女性を4時間もの間強姦し続けるというおぞましい事件が起きた。

だが、この事件が物語るとおり、犯人を拘束捜査すべき強姦は凶悪犯罪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米駐屯軍地位協定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によって韓国警察は駐韓米軍を現行犯逮捕できず、警察による緊急拘束捜査は行われなかった。

遅まきながらこの事件が韓国社会に知られ、市民の怒りが噴出したことで、ようやく韓国警察は東豆川で発生した性暴力事件の加害者を拘束し起訴した。

2001年に韓米駐屯軍地位協定が改正されて以来、過去10年に渡って米軍および米軍編が起こした事件だけでも4,618件にのぼり、特に最近では強姦や暴行、性犯罪などの凶悪犯罪が増加している。

現在米軍は、性暴力に対する不寛容政策(zero tolerance)を公式化し、新兵教育も行っ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性暴力犯罪は絶えず繰り返されており、実際に問題が発生した場合は個人的な問題とするなど巧妙に法の網を潜り抜けており、米軍の安全を第1原則に掲げられれば犯罪の處罰が軽しいのが実情である。

特に、不平等な韓米SOFAのために駐韓米軍の犯罪について警察の拘束捜査や検察による起訴が難しく、ひとまず現場から逃亡すればよいとの認識さえ見てとれる。米軍による民間人への人権侵害に對し、法の公正な執行がなされない現状は、多くの韓国人におびただしい怒りと挫折感を呼び起こしている。

我々は韓米政府が主張した、人権などの普遍的価値と相互信頼を基盤とした世界平和に寄与する「21世紀戦略同盟関係」とは、韓米関係の本質とは何なのかと問わずにはおれない。

平等かつ相互利益が保障される望ましい韓米関係の定立のため、我々女性は以下のごとく要求するものである。

1. オバマ米大統領は今回の10代の女性に對する米軍の犯罪行為について、即刻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米軍犯罪の再発防止のために有効力ある政策へと轉換せよ。

2. 駐屯地域における韓国人に対する犯罪は、韓国の司法権に則って処理され、刑が執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犯罪被害者に対する賠償手続きが明示されるよう韓米SOFAを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行犯でなくとも韓国警察による拘束捜査を保障し、韓国検察による拘束起訴を米軍が確実に保障すべきである。

3. 韓米SOFAに女性と児童に対する人権保護条項を新設しなければならない。
駐屯地域の女性と児童に対する米軍のあらゆる暴力を禁止させ、彼らに対して行われた犯罪については、彼らが社会的弱者であることを考慮し、兩國の處罰條項の中でもより厳格な内容を適用すべきである。被害者への賠償についても、兩國の賠償關係のうち最も被害者に有利なものに用いるようSOFAで規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我々女性は、韓米關係の不平等な構造を変えるため、現行SOFAの問題点を検討し、この不平等な關係を轉換するために、國內外の良心的勢力と連帯していく所存である。

2011. 10. 10

平和をつくる女性の會、韓國女性団体連合

Statement of South Korean women's organizations on sexual crimes
against teenage girls
by U.S.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in South Korea
-Protect women's right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unfair SOFA-

A teenage girl was raped by a U.S. soldier in Seoul on September 17th, 2011 and another teenage girl was heinously raped for four hours by another U.S. soldier in Dongducheon, Gyunggi Province on September 24th, 2011.

Those crimes were so brutal that it called for South Korean police to detain the suspects for investigation. However, South Korean police could not arrest them

because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SOFA), which contains a clause stating that South Korean police cannot detain U.S. servicemen for questioning, unless the criminal was caught in the very act. In other words, this clause prevented swift investigation. The South Korean prosecutor arrested and indicted the suspect in Dongducheon case after the irate public took the case to the streets.

U.S.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have committed 4,618 crimes against South Korean civilians in the last decade since the SOFA was revised in 2001. Furthermore, serious crimes such as robbery, assault and sexual offences are on the rise.

The U.S. Army has formulated a zero tolerance policy on and claims to train inductees against sexual crimes. However, sexual violence against civilians continues to occur. However, in most cases suspects are set free after a crime actually occurs and are protected so that they avoid the hands of the law, with the U.S. Army claiming that the crime is the suspect's personal matter and placing utmost priority on the military personnel's safety.

The unfair SOFA makes it difficult for South Korean police to investigate suspects under custody and for the South Korean prosecution to indict. Suspects simply believe that it is best to first flee the scene of the crime. The South Korean people are resentful and disappointed at this pattern of not being able to execute law justly in response to U.S. troops's infringements of the human rights of civilians.

We women cannot help but doubt the very foundation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ROK and the U.S. for the 21st Century", which insisted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based on universal values including human rights and mutual trust.

Thus, we women demand the following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rightful South Korea-U.S. relationship that is both fair and guarantees mutual benefit.

1. We demand that President Barack Obama immediately apologize for the vicious rapes of teenage girls by U.S. soldiers; and that the U.S. Army change its policy toward U.S.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who commits crimes against South Koreans to make the policy actually effectiv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recurrent crimes.

2. We demand SOFA to be revised so that U.S. military personnel who commit crimes against civilians can be processed and tried under jurisdiction of the region in which the suspect is stationed; that the process of compensating victims is stipulated; and to guarantee that South Korean police can question U.S. military personnel under custody and South Korean prosecution can indict them under custody, even for those suspects not caught in the act.

3. The SOFA should contain a provision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The SOFA also needs to stipulate the preven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by U.S. troops in the region in which they are stationed; harsher punishment (harsher than existing in the penal codes of both countries) for those who commit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better than currently practiced in both countries.

4. We women will review the problems in the SOFA and will form solidarity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cience" forces to change the unfair structure of the South Korea-U.S. relationship.

October 10th, 2011

Women Making Peace,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선언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조속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4일 토요일 새벽 4시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 제2사단 소속의 적슨(21) 이병은 피해 여학생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 5,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또 9월 17일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이 역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쳤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어느 미치광이 미군의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두천에서만 지난해 5월 이후 3번째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야간 주거침입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6일에 동두천에서는 밤새 술을 마신 미군이 달을 넘어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며, 또 지난해 5월에도 미군은 같은 지역에서 조부를 위협하고 10대 소년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몇 년 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군 당국은 지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야간통행금지를 축소해가, 지난해 7월 이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군 범죄는 배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성폭행과 강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제 SOFA 대상자 중 미군의 비중은 점차 줄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데 반해, 지난해 SOFA 사건 중 약78%를 미군들이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대 내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과 규율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단면을 다시확인하게 된다. 지난 26일 동두천 경찰서는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미군 측에 통보해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미군의 신병을 다시 미군 측에 인계해야 했다. 이는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에 한해 특정 사건에 한해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한미SOFA 문제점 때문이다. 또 서울 마포구의 사건은 17일날 사건이 발생하고 이달 5일 첫 조사가 무려 20일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초동수사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피해로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검찰은 항소권조차 갖고 있지 못해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10.26엔 투표당’을 출범하며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10월 26일, 투표 참여로
새로운 서울을 만듭시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8년 이후 치러진 최근 7년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합니다. 유권자의 절반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심각하게 낮은 투표율’은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정당과 정치세력을 떠나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사퇴함으로써 예고 없이 벌어진 선거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 다수가 원하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선출함으로써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행복 서울’, ‘희망 서울’ 등 각 후보자들은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변화의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변화가 지금 서울에 필요한지 시민 여러분이 선택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서울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10월 26일 투표에 꼭 참여하시고 주변 사 람들에게도 투표를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 출근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투표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에서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몇몇 기업들은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등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참정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출근시간 연장, 단축 근무, 2시간 유급휴가 등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노동자 여러분도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업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 구태정치로 유권자들을 투표장에서 멀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떠한 정책들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의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선택입니다. 서울시민 다수가 바라는 서울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서울시정의 첫 단추를 꿰어 주십시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10.26연투표당'으로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서울시장 선거, 새로운 서울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독려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투표독려 tip 5’ 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1.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투표합니다.

- 서울시장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서울시민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투표합시다!

2. 가족, 친구, 지인 10명에게 투표권유 문자를 보냅니다.

- 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를 권유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 10명에게 투표권유 문자를 보냅니다!

3. 트위터, 페이스북에 '10.26연투표당' 리본을 달고 투표참여를 촉구합니다.

-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서비스를 통해 '10.26연투표당'의 투표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에 '10.26연투표당' 리본을 달고 투표참여를 촉구합시다!

4.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합니다.

- 각 후보자들이 서울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합시다!

5. 직장에 투표를 위한 2시간 단축근무를 요구합니다.

- 직장인,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근시간 연장, 단축근무, 투표를 위한 2시간 휴가보장을 적극 요구합니다. 직장에 투표를 위한 2시간 단축근무를 요구합시다!

2011.10.19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운동네트워크 "10.26연투표당"

남북여성공동결의문
**남북여성들이 앞장서서 분단과 대결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자!**

우리 겨레는 일제 강점과 민족 분열, 전쟁과 냉전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 여성들도 희생당하는 고통을 체험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평화와 생명이며 겨레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남북 여성들은 분단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된 속에서 남북여성교류가 중단되고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남북 여성들은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2012년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열어나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남북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여성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주역으로서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결과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공평한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물려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 사이에 쌍방과 접촉, 통일회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계도의 장벽들과 대결론을 배격해나가는 데서 남북여성들의 역할을 보다 높여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 여성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에 적극 매진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라의 평화가 있고 통일의 밝은 전도와 민족의 미래가 있다.

오늘의 현명한 대결국면을 시급히 가시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길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있으며 이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남북여성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선언이행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대결행위를 철저히 배격해나갈 것이다.

10.4 선언에 천명된 대로 남북사이의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기 위한 남북여성들의 연대활동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연대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음습을 통해 이미 반인도의 범죄라고 규정되었으며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 배상을 요구해온 수요 집회가 2011년 12월 14일 1000회를 맞이한다. 1000회 수요 집회를 남북여성이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실현되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범죄와 관련한 증언 및 보존회 등을 통하여 일본의 반인륜적 죄악과 우리민족에게 가해온 온갖 죄대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며 이를 위한 투쟁에서 유연 등 국제기구, 해외단체들과 폭넓게 연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 침략역사를 부정왜곡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또다시 짓밟으려는 일본의 행동을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통일과 공동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주역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11년 12월 14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 공공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관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명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정부의 공식적인 조의 표명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6.15공동선언 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진정성이 담기게 되기를 희망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지속되어야 하며,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환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1년 12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관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성명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를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이 여러가지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호존중, 평화와 상생이라는 기초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여성들은 지난 12월 14일 발표한 남북여성결의문의 내용대로 미래 세대들에게 공고한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물려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12.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관련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보낸 조전

수신: 조선민주여성동맹 앞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비탄에 빠지셨을 복녀여성, 특히 조선민주여성동맹 모상설 위원장 및 성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서 나타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력이 계승되기를 염원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새날을 열기 위한 남북여성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2011.12.22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서 ☺

기본 사항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번호		이동전화	
연락처	집 주소			
	집 전화	(지역번호)	우편물 받을 곳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직장주소	(우편번호)		
	직장명		소속	
	전자메일		직장전화	
회비 (CMS 자동이체)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회비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급 원/월)		
	학생회원 (초중고생)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급 원/월)		
		<input type="checkbox"/> 연1만원 <input type="checkbox"/> 연2만원 <input type="checkbox"/> 연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급 원/년)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경제대순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관동해협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20 년 월 일			

연락처 : 150-037 서울시 영등포구 영봉로동 7가 94-89 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945 전술 02-929-4843

이메일 :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 (하나은행) 388-810005-03104 예금주 (사)평화홀맨즈여성회
(국민은행) 347-01-0018-351 예금주 (사)평화홀맨즈여성회



